당 건설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사노위 1년, 그 당 건설 투쟁에 대한 평가

사노위 정치적 해산 선언자 모임

당 건설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 사노위 1년, 그 당 건설 투쟁에 대한 평가 -

사노위 정치적 해산 선언자 모임

발행일 : 2010년 08월 31일
펴낸곳 : 사노위 정치적 해산 선언자 모임

목차

책을 발간하며 5

Ⅰ. 사노위 1년, 그 당건설 투쟁에 대한 평가 (1차 보고서) 13

1. "사노위 실패" : 애초 사노위는 하지 말았어야 했던 것인가? 15

2. 사노위를 통한 당건설 투쟁, 왜 어떻게 실패했나? 21

3. 마치며 41

Ⅱ. 당 건설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 당 건설 노선 문제를 중심으로 - 45

1. 들어가며 45

2. 사노위 이전 상황 52

3. 사노위 시도 전후 과정 61

4. '사노위' 운동 평가와 해산 과정 78

5. 당 건설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90

6. 맺으며 111

Ⅲ. 사노위 실패와 무기로서의 강령 115

1. 강령 건설의 원칙과 혁명당 건설 117

2. 5인안 강령의 탄생과 쟁점 126

3. 결론 136

Ⅳ. 정치적 차이가 지속된 사노위, 결국 파산을 면치 못하다. 141

1. 사노위가 넘어서고자 했던 것

– 바로 조합주의와 써클주의에 침몰되다. 142

2. 심각한 무규율과 연방주의가 조직을 마비시키다. 152

3. 정치활동에 재갈을 물리다. 157

4. 변화와 개선의 여지가 없다. 165

Ⅴ. 마르크스주의와 한국 사회주의(전체)운동에 대한 회고 173

1. 들어가며 173

2. 역사적 평가에 필요한 마르크스주의의 원칙 176

3. 1990년대 초반의 사회주의(정치)운동에 대한 평가 179

4. 1990년대 중반 국제 사회주의운동에 대한 평가 184

5. 혁명적 맑스주의자(사회주의자) 모임, 사노련, 사노위 194

6. 마무리하며 197

책을 발간하며

1.

우리는 2010년 5월 9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 공동실천위원회(이하 사노위)를 출범시킨 한 주체로서, 2011년 6월 9일 '사노위의 정치적 해산'을 선언했다. 우리가 사노위를 출범 시킨 것과 그 해산을 선언한 것은 모두 동일한 맥락이다. 출범과 해산은 서로 다른 정치 행위가 아니다. 두 정치 행위 모두 사회주의 혁명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에서 발생한 서로 다른 표현이다.

지금 전 세계, 특히 한국의 혁명 세력에게 당면한 목표는 혁명정당 건설이다. 혁명정당은 출발부터 (노동자)국제주의를 띨 수밖에 없다. 사회주의 혁명정당은 인류와 세계 역사 전체에 대한 총체성을 확인, 확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민족주의나 사민주의는 인류와 세계가 도달한 총체성에 기반 하지 않고 일국, 각국을 독립되고 완결된 체계나 체제로 대함으로써 자본주의 세계체제를 은폐시키며 노동계급과 대립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위기가 인류 역사를 파괴시키고 있다. 자본주의가 도달한 생

산력이 바로 공산주의로 나갈 수 있는 물적 토대가 될 것이라는 가정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더 늦는다면 인류와 세계의 미래가 어디로 가야할지 오리무중에 빠질 수도 있다. 야만적 세계라는 표현이 더 이상 은유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 이 미친 체제와 세계를 끝장내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불러일으키는 길밖에 없다.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이 절실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일고 있는 혁명 물결, 영국에서 벌어진 '폭동' 형태를 띤 저항, 그리스에서 일어난 대중투쟁 등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모두가 자본주의 체제 위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들 투쟁은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빠르게 세계로 번져 나가고 있다. 이들 투쟁은 하나같이 혁명을 진전시키고, '폭동'을 조직된 투쟁으로 발전시키고, 대중투쟁을 더 높은 투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혁명세력, 혁명정당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부족한 것은 아래로부터의 투쟁,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아니라 이들 투쟁을 촉발하고, 조직하고, 이끌 수 있는 혁명세력이다.

한편 한국은 또 다시 민주대연합이 전면에 등장했다. 그 와중에 민주노동당 분당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나을 게 없는 진보대통합이 마치 새로운 것인 양 활개를 치고 있다. 이 와중에도 희망버스 투쟁처럼 진짜 새로운 것도 나타나고 있다. 그 전 촛불투쟁도 새롭게 등장한 바 있다. 누구나 말하듯이 촛불투쟁이나 희망버스 투쟁이 노동자투쟁과 연결, 결합되어야 한다. 진보정당에게 그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혁명세력, 혁명정당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가 '사노위의 정치적 해산 선언'을 한 것도 여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이제 새로운 시도의 성공 여부는 오직 우리의 실천에 달려 있다. 이 책을 발간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지난 '사노위' 활동을 객관화시키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우리가 이후 어떤 실천과 투쟁을 통해 혁명정당을 건설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그 대강을 밝히기 위해서다.

2.

이 책은 크게 5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1장은 지난 6월 9일 이미 발표한 '사노위 1년, 그 당 건설 투쟁에 대한 평가(1차보고서)'를 다시 실었다. 1장은 이 책 전체를 이끄는 처음 글이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1차보고서를 발표한 그 시점은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역동적으로 움직였으며 힘차게 활동했다. 글에서는 지금 읽어도 무엇 하나 빼거나 더할 것이 없을 만큼, 우리의 활동을 있는 그대로 밝혔다고 생각한다. 만약 왜 사노위 해산을 선언했냐고 묻는다면 1장을 읽으면 된다.

2장은 제목 그대로 당 건설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2절~4절까지는 지난 역사적 과정에 대한 우리의 판단과 평가를 담고 있으며, 5절에서 이후 우리가 어떻게 당 건설 투쟁을 하고자 하는가에 대해 담고 있다. 2장은 평가 그 자체도 실은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의해 규정받을 수밖에 없다는 관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평가 따로', '계획 따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그렇더라도 크게 두 가지는 비어 있다. 하나는 '일국' 차원의 문제의식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당 건설 투쟁의 구체적 계획은 아직 제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미비한 점들은 추후 다른 과정을 통해 밝혀 나갈 것이다.

3장은 '사노위의 정치적 해산 선언'을 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되었던 것으로 말하고 있는 강령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는 강령과 조직활동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강령 내용 그 자체에서 각각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를 밝히고 있다. 향후 잔류 '사노위'가 최종적으로 어떤 강령을 갖더라도 이것은 잔류 사노위의 평가일 뿐, 우리의 평가가 달라질 할 이유는 없다. 다만 우리 역시 사노위 시기의 강령을 그대로 가져가지는 않을 것이다.

4장은 조직활동 과정에서 '사노위'가 드러낸 문제를 평가하고 있다. 여기서의 문제들은 밖으로 별로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지만 우리로서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다. 물론 여기서의 평가 중 '사노위' 안에서 같이 활동했던 시기의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도 그 평가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사노위'의 조직활동을 객관화, 일반화 할 수 있는 정도의 평가로까지는 진전시키고 있지 못한데, 그 이유는 '사노위' 활동이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때문이며 이는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

5장은 1장과 마찬가지로 이미 발표한 글을 여기에 다시 실은 것이다. 다만 5절~6절은 '사노위' 해산 선언 이후 새롭게 쓴 글이다. 2장은 주로 당 건설 노선을 중심으로 지난 역사적 과정을 서술하고 있으며, 5장은 비교적 최근 사회주의 세력 사이에 존재했던 정치사상적 논쟁을 중심으로 내용을 다루고 있다. 2장과 5장을 연결해서 보면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사회주의 세력과 그 역사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를 아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3.

끝으로 이 책을 발간하면서 다음 몇 가지 지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첫째, '사노위' 운동에 대한 우리의평가는 중간 평가며, 잠정적 평가라는 점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사노위' 운동은 현재진행형이다. 최종적으로 잔류 '사노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아직 남아 있으며, 우리 또한 그렇다는 점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 각각이 보다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기까지의 평가는 객관적으로는 물론 우리 입장에서도 중간적, 잠정적 평가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는 '사노위 정치적 해산 선언자 모임' 이름으로 이 책을 발간했다. 그런데 '사노위 정치적 해산 선언자 모임'에 참여했던 동지들 중 몇몇은 우리의 불찰로 인해 토론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책에 대한 그 동지들의 책임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며, 이 지면을 통해 그 동지들에게 양해를 구한다. 토론 과정에 참여한 동지들 사이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쳤지만, 글에 대한 최종 책임은 각 발제자에게 있다.

셋째, 가장 중요하게 당 건설 투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지 못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이 점은 이 책의 주요 목표는 아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다른 계기를 통해 제출하겠다는 것을 말해둔다.

당 건설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I

사노위 1년,
그 당 건설 투쟁에 대한 평가

사노위 1년, 그 당건설 투쟁에 대한 평가 (1차 보고서)

사노위가 출범하고 1년이 지난 지금, 정세는 당시보다 더욱 무르익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 위기는 전 세계적인 계급투쟁의 고양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럽과 북아프리카 · 중동, 중국과 인도와 동남아시아, 미국과 영국, 다시 중동과 남유럽 등 모든 대륙과 나라들에서 노동자 민중들의 시위와 점거, 파업과 봉기 등 대중투쟁의 물결이 휩쓸고 있다. 혁명이 책 속에나 있는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 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대중투쟁이 터져나오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로 보인다. 청년학생들의 등록금 투쟁으로 촉발된 '제2의 촛불항쟁'으로 시작될지, 사내하청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촉발된 전체 조직노동자들의 총파업으로 시작될지, 아니면 양자가 결합된 방식으로 가장 폭발적인 형태로 터져나올지 그 구체적인 양상이 어떻든 한국 또한 '혁명의 현실성'으로부터 비껴갈 수 없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다.

정세는 오히려 1년 전보다 이렇듯 더욱더 무르익고 있음에도 사노위는 혁명정당 건설로 나아가는 데 끝내 실패하고 말았다. 사노위의 정치적 해산을 선언하고 사노위 1년을 평가하고 있는 우리 또한 이 실패의 후과를 온몸으로 떠안고 감내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후 투쟁과 진로 또한 어떤 식으로든 이 실패의 자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진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 펼쳐지고 있는 정세는 우리에게 마냥 실패를 되뇌고 있거나 우리 투쟁의 불철저함을 비통해 하고만 있을 만큼 한가로운 여유를 주지 않는다. 따라서 이하의 평가는 단순히 지난 일에 대한 복기와 반성을 넘어 사노위 실패를 딛고 다시 정세에 부응하는 실천으로 힘차게 나서고자 하는 우리의 '새로운 다짐'의 일부이다.

이 평가문은 사노위 1년의 전 과정과 활동 전체를 평가하지는 않고 있다. 주요하게 '강령 통일 실패'로 표현되는 정치노선 상의 차이가 어떠한 실천적 · 조직적 함의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그리고 '현장에서 사회주의 정치활동' 확립에 실패한 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위, 분회 활동을 포함한 전체 조직활동에 대한 평가 등이 빠져 있다. 또한 이후 당건설운동의 과제와 전망, 평가 주체의 진로 문제도 담고 있지 않다. 이 평가문은 현재 '사노위의 정치적 해산'을 불가피하게 한 당건설 투쟁 실패의 직접적인 원인과 경위를 신속히 전달하기 위한 1차 보고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우리의 '사노위 해산' 및 '공동실천 종료' 선언에도 불구하고 사노위 다수파는 사노위를 사유화하고 사노위 운동을 희화화시키고 있다. 이에 맞서 사노위 실천의 의의와 성과를 올바로 자리매김하고, '사노위를 통한

당건설 투쟁' 실패의 원인과 성격을 정확히 제시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 1차 평가서가 작성되었다. 6월 1일 28인 명의로 낸 "사노위의 정치적 해산을 선언한다" 제하 성명서에 담긴 해산 이유를 상세하게 밝히는 후속 성명으로 읽어도 무방할 것이다. 총체적인 평가는 이후 제출하겠다.

1. "사노위 실패" : 애초 사노위는 하지 말았어야 했던 것인가?

1) 목표와 과제, 옳았나?

사노위는 사회주의 혁명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사회주의자들의 공동실천 조직이었다. 사노위 건설 공개제안서에서 밝혔듯이, 사노위는 2008년 이래 세계공황과 자본주의 체제 위기를 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과제를 제기하며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에 나서겠다고 했다.

첫째,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운동을 전면화하는 과제'이다. 둘째, '당건설 투쟁 속에서 노동자계급 투쟁의 대안 지도력을 세워내는 과제'이다.

첫째 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공공연하고 전면적인 사회주의 실천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혁명적 사회주의 운동을

가시화시키고 세력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 세력화를 사회주의노동자당 창건으로 연결하고자 분투할 것이다."

둘째 과제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을 위한 정치투쟁을 다양한 수준에서 펼치면서, 동시에 공세적인 요구를 내걸고 노동자계급의 단결 투쟁을 최선두에서 조직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량주의 노동자당과 노동조합 관료들의 투항적인 反노동자계급 지도력을 밀어내고 광범한 노동자들 속에 사/노/위가 혁명적인 대안 지도력으로 우뚝 서 나가는 것이다."

또한 사노위 출범선언문에서도,
첫째, 당 건설운동의 전면화 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우리의 결의는 그 동안 사회주의자들이 노동자계급 운동 속에서 대담하게 사회주의 강령을 내걸고 공공연한 사회주의운동을 펼쳐내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다. 사회주의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할 선진노동자들이 노조운동을 넘어서는 전망을 갖지 못한 채 조합주의에 갇혀 있기를 강요받아 온 그 동안의 상황 또한 우리가 사회주의 당 운동을 전면화시켜내지 못한 책임이 아닐 수 없다. 사노위의 출범은 사회주의자들이 더 이상 협소한 써클의 자족적 울타리에 갇혀 지내거나 대중조직과 노동조합운동 뒤에 자신을 숨기고서 활동하는 것으로부터 확실한 단절을 이뤄내고 새로운 당 운동의 단계를 열어젖히겠다는 결연한 각오다."

둘째, 대안 지도력 수립 과제에 대해서도 "사노위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의회주의와 대리주의, 자본가 정당과의 계급협조로 왜곡 후퇴시킨 진보정당 운동을 대체할 새로운 대안으로서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을 이 땅에 기필코 세워낼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우리는 사노위를 통해 이러한 두 과제와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이라는 목표를 이루는 데 실패했다. 그러나 어떤 실패인가? 이러한 과제와 목표 자체가 잘못된 것이어서 실패인가? 만약 그렇다면 사회주의자들은 방향을 틀어 당분간 써클정파운동으로 남아 있어야 할 것이며, 현 시기 노동자계급 지도력의 위기를 감수하는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진보정당과 민주노총 · 산별노조 등 노동자운동의 현 지도부에 대당하는 지도력 다툼에서 한 발 비껴 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지금은 선진노동자운동이 궤멸되었고 활동가 주체가 극히 소수화된 상황에서 그러한 과제와 목표를 내거는 것은 맞지 않다는, 즉 지금은 당 건설의 시기가 아니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 비판이 이제 옳은 것으로 입증된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런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은 오히려 역으로 사회주의 당건설 운동을 전면화하고 대안 지도력을 세워내기 위한 투쟁을 통해서만이 활동가 주체도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계급투쟁이 고양되고 그 속에서 선진활동가들이 배출되기를 기다려서야만 당 건설을 전면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계급투쟁의 고양과 당 건설운동의 전면화 및 대안 지도력 수립을 위한 투쟁을 추상적으로 분리시키고 단계론적으로 바라보는 대기주의이다. 우리는 이러한 과제들을 밀고 나가는 것을 통해 계급투쟁의 고양도 실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투쟁이 확대되고 전 계급적인 투쟁으로 전면화될 잠재력을 품고 있어도 현 지도부들이 중재와 타협, 투쟁 회피로 이 잠재력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이지, 정세적으로 투쟁이 가라앉아서가 아니다. 단적으로 2010년 겨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폭발적인 투쟁과 이를 틀어막은 진보정당 · 산별노조의 행태(야5당의 중재 농간)만 보더라도 '계급투쟁의 침체'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지도부/지도력 위기의 문제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현 시기 당 건설의 목표와 과제는 정세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그 절박함은 무엇보다 자본주의 위기로 인한 이러한 계급투쟁의 폭발적 잠재력 때문이지만, 정세의 이 근본 토대와 함께 당면의 정치투쟁 지형 또한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을 그 어느 때보다도 긴급한 과제로 제기하고 있다. 현재 민주대연합 및 그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진보대통합이 노동자들의 불만과 분노를 대중투쟁 대신 의회주의와 '선거를 통한 심판'으로 급격히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선진노동자 주체들이 소수"라는 이유로 사회주의 세력들이 이러한 정세와 정치 지형에 대한 전면적인 개입을 기권하고 만다면 선진노동자 주체의 상태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열악해 질 할 것이며 당 건설의 조건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후퇴될 것이다. 경제적 · 정치적 수준 모두에서 정세는 당 건설의 긴급함을 강력히 지시하고 있다.

2) 당건설의 경로로서 사노위는 "예정된 실패" 였나?

그럼 목표와 과제가 문제가 아니라면 당 건설의 수단과 경로에서 문제였는가? '사노위를 통한 당 건설' 자체가 실패의 근원이었는가? 우리는 사노위라는 당건설 공동실천 조직 대신 각자의 써클을 통해 또는 개별 활동가로서 그러한 당건설의 목표와 과제를 추진했어야 했는가? 사노

위 건설 당시에 사노위에 대해 "예정된 실패"의 길을 걸을 것이라는 외부의 비판이 있었다. 처음부터 원칙과 노선을 단일하게 명확히 하지 않은, 정치적으로 잡탕 조직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분열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노위를 통한 당건설'은 본질적으로 공동실천위원회로 조직을 함께 하면서 강령/전술/조직상의 통일을 위한 투쟁을 통해 당을 건설하는 경로이다. 처음부터 원칙과 노선이 단일하면 애초에 사노위 같은 '공동실천 경로' 를 거칠 필요도, 강령 상의 통일을 위한 투쟁을 거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아니, 애당초 써클들로 분립해 있는 상황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을 말하자면, "처음부터 원칙과 노선을 단일하게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은 순수 써클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일 따름이다. 물론 이러한 '순수 경로'는 "예정된 실패"의 길을 걸을 필요가 원초적으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단일한 원칙과 노선'이 계급투쟁에 대한 실제 지도력일 수 있을지는 전혀 실천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다는 것이다.

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같은 공동의 조직활동 속에서 정치적 · 조직적 통일을 위한 투쟁을 통해 원칙과 노선의 실천적 지도력을 검증하는 것과 개별 써클로 남아 검증하는 것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어느 쪽이 실천적으로 검증된 당 강령의 정립을 더 보장할 수 있는 경로일지는 볼세비키당 같은 모든 위대한 당의 건설 과정이 잘 보여주고 있다.

물론 공동실천위원회 같은 경로에는 통일에 실패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엄존한다. 현재의 사노위가 그렇듯이 말이다. 그러나 결과가 실패라고

해서 사노위라는 당건설 경로의 올바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통일에 실패했어도 사노위 운동을 거친 것은 옳았다고 평가한다. 적어도 각자의 써클로 또는 개별 활동가로 남아서 했을 것에 비한다면 훨씬 더 남한에서 당건설을 앞당기는 과정으로 작용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사노위가 '실패'라는 것은 강령/전술/조직 상의 통일을 이뤄내지 못해 당 추진위로 전환하지 못한 것의 실패이지, 차라리 각자의 써클로 또는 개별 활동가로 남아 있었다면 더 나았을 것이라는 의미에서의 실패가 아니다. 어차피 시도하고 도전하지 않는 운동에서는 실패할 것도 없다.

사노위는 통일을 이루는 데 실패했지만 그 공동실천 과정에서 첫째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운동을 전면화하는 과제'와 둘째 '당건설 투쟁 속에서 노동자계급 투쟁의 대안 지도력을 세워내는 과제'에서 '순수써클 경로'에 비해 훨씬 더 큰 전진을 이루어낸 경로임을 입증했다. 아전인수식 평가는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사노위 운동 1년을 절대적인 기준을 잣대로 해서 다 실패했다는 식으로 평가해버리고 만다면 이는 진공 속의 평가일 뿐이다.

주어진 조건을 전제로 해서 상대적 평가를 한다고 할 때, 첫째 사회주의 당 건설운동을 전면화하는 데서 공공연한 진전을 이루어냈다. 무엇보다 사노위 건설 및 출범 그 자체가 그러한 진전이다. 일정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4.30 정치대회 및 G20 반대 정치캠페인 등은 진보정당과는 다른 사회주의 당 운동 세력이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노동자계급 앞에, 적어도 선진노동자들 사이에 분명히 각인시켰다. 둘째 강령 논쟁과 강령/조직/전술상의 통일 및 정립을 위한 투쟁을 통해 노동자계급운동의 대안 지도력을 세워내는 과제를 공론화했다. 이런 것들은 만일 써클들로 남아 있었다면 결코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건설의 목표와 과제뿐만 아니라 사노위라는 수단과 경로도 문제는 아니다. 공동실천위원회를 통해 강령/전술/조직상의 통일을 위한 투쟁을 거친다는 이러한 당건설 경로 자체가 틀린 경로였지 않다는 것이다. '사노위 공동실천을 통한 당건설'이라는 기획과 시도 자체가 잘못돼서 실패한 것이 아니다. "예정된 실패" 같은 것은 없다. 이 경로의 성공/실패 여부는 주체의 투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숙명론이 끼어들 여지는 없다. 실패한 것은 사노위라는 경로가 아니다. 주체의 투쟁이 실패한 것이다. 왜 어떻게 실패했나?

2. 사노위를 통한 당건설 투쟁, 왜 어떻게 실패했나?

먼저 주체의 성격과 구성부터 살펴보자. 사노위는 사노준, 사노련 일부, 노투련 등 3개 써클 출신 인자들과 개별 활동가로 구성되었다. 사노위는 써클들의 연합체가 아닌 개인 가입의 형식을 취했고, 출범 직후 사노준의 해산으로 형식적으로는 사노위 내 더 이상 어떤 써클도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결코 단일 조직이지는 않았다. '구 사노준' 다수파와 '구 사노련' 소수파 등이 조직 내 '경향'으로 계속 존재하는 것은 공동실천위원회로서 불가피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모두에 의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와 같이 분파들의 존재와 그에 따른 다수파/소수파 구도는 사노위 시작부터 주어져 있는 내부 지형이었다.

그런데 이 '구 사노준' 대 '구 사노련'의 다수파/소수파 구도는 사노위 출범 후 얼마 안 돼서 벌어진 '가입원서 건'을 둘러싼 투쟁을 거치며 그 구성과 성격이 바뀌기 시작했고, 2차 총회(2011년 1월) 이후에 '소책자 비평 건'을 놓고 벌어진 투쟁 속에서는 완전히 재편된다.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다수파/소수파 구도 자체는 마지막 3차 총회까지 변함없이 계속되었다. 소수파가 이러한 투쟁들을 거치면서 구 사노련 중심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새로운 성격과 질을 획득한 것과는 다르게 다수파는 어떠한 성격 변화 없이 다수 패권블록으로서의 구 사노준 경향이 그대로 이어졌다. 나아가 소수파로부터 이탈한 인자들까지도 이 패권블록 안으로 손쉽게 흡수, 편입시켜냄으로써 구 사노준의 기존 틀은 그대로 온존했다.

1) 가입원서 건 : 민주집중제 확립을 위한 투쟁

'가입원서 건'을 둘러싼 투쟁은, 조직의 결정에 대해 해태, 사보타지하는 것을 옹호하는 연방주의 경향에 맞서 민주집중제(민주적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한 행동의 통일)를 확립하는 투쟁이었다. 이 투쟁 속에서 민주집중제 확립에 동의하는 동지들이 결집하여 '제1차 의견그룹'이 형성되었다. 이 제1차 의견그룹은 구 사노련 출신만이 아니라 구 사노준의 일부 동지들과 구 노투련의 대다수 동지들이 포함되었다. 1차 의견그룹은 사노위 2차 총회에서 민주집중제를 구현하는 방식으로의 회칙 개정과 함께 '당건설 총력투쟁 체제 재구축'의 기치를 내걸고 지도력을 떠맡기 위한 투쟁까지 전개했다. 이 소수파 의견그룹의 투쟁이 총회 표결에서 51 대 82로 비록 패배했지만, 이 투쟁은 '사노위를 통한 당건설' 투쟁에서 결코 부차적인 투쟁이라고 할 수 없다. 강령/전술/조직상의 통일을 위한 투쟁

에서 다름 아닌 조직 문제를 둘러싼 투쟁이었다.

조직의 결정은 그것이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것이라면 모든 조직 성원에게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결정은 유효하나 공동실천위 단계라서 집행할 순 없다'(6차 중앙위 결정)고 하여 가입원서 작성 결정(1차 중앙위 결정)에 대해 사보타지 하는 개인 성원에게 어떠한 조직적 제재도 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조직의 결정을 무력화시킨다면 아무리 말로 당건설을 표방해도 그것은 공문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공동실천위원회로서 사노위가 행동 통일을 높여냄으로써 공동실천위 단계를 극복하고 당으로 나아가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공동실천위 단계'를 핑계로 행동 통일을 파괴할 자유와 연방주의적 조직운영 논리를 다수파가 옹호한 것이다.

이에 대해 10명 중앙위원들이 연서하여 당건설을 후퇴시키는 6차 중앙위 결정사항을 폐기하기 위해 긴급중앙위 소집을 요구했지만, 다수 중앙위원들은 이 긴급중앙위 참가를 보이콧하여 무산시켰다. 이에 항의하여 31명의 평회원 명의로 "긴급중앙위 무산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제하의 성명이 발표되었다.

"6차 중앙위원회에서 다수 중앙위원들은 가입원서 거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원서와 관련한 1차 중앙위의 결정사항('모든 성원은 가입원서를 쓴다')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공동실천위 단계에서 가입원서 건으로 징계는 과도하다"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밀어붙였다. '결정은 유효하지만 결정에 대한 집행은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하여 민주집중제 원칙에 따른 행동통일을 파괴하고 조직의 결정을 해태, 보이콧하는 행위

에 면죄부를 부여했다.

이 같은 6차 중앙위 결정은 사노위가 행동통일을 높여감으로써 당을 건설하려는 공동실천위원회인지 아니면 써클들과 개인들의 느슨하고 분산적인 상태를 정당화하기 위한 공동실천위원회인지 심각한 회의와 좌절감을 조직에 만연시키고 있다....

1년 3개월이라는 주어진 시간 안에 당 추진위 건설을 대내외적으로 공약하고 있는 사노위로서는 그 무엇보다 회원들 사이의 행동통일을 높여나가야 하는 조직적 과제를 갖고 있다. 또한 정치적 신뢰와 지도력을 조직 내외적으로 획득해 가야 할 과제 또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단 하에, 우리는 중앙위원 10명의 연서로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기 위해 긴급 중앙위원회 소집 요구를 한 것이다....

지난 11월 27일 중앙위원회 10명의 중앙위 개최 요구에 따라 양효식 공동대표가 긴급중앙위원회를 소집했지만, 그러나 다수 중앙위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되었다....

6차 중앙위원회의 다수 중앙위원들이 민주집중제에 따른 행동통일을 무너뜨리고 스스로 중앙위원회의 권위를 실추시킨 데 이어 이번 긴급 중앙위원회까지 무산시킴으로써 중앙위원회는 이제 무력화되고 정치적 파산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긴급중앙위원회를 무산시킨 다수의 중앙위원들의 책임방기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아래로부터 평회원 동지들과 함께 조직을 바로 세우고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투쟁을 올바른 침로 위에 다시 가져가기 위해 조직 내외에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 의견그룹의 형성과 2차 총회 대응

이 평회원들의 성명에 이어 경기지역 동지들이 이 투쟁에 함께 하면서 2차 총회를 준비하기 위한 의견그룹이 결성되었다. 의견그룹은 2차 총회에서 민주집중제 확립과 함께 당건설 총력투쟁 체제를 재구축하기 위한 2기 사업계획안과 회칙개정안을 제출하고, 무규율과 연방주의에 맞서 좌초하고 있는 사노위를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을 전개했다.

총회 표결에서 패배했지만 의견그룹은 총회 자체뿐만 아니라 총회 전 단일안 협상과정에서부터 총회 말미 통합지도부 제안에 대한 대응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행동통일을 이루어냈다. 이는 의견그룹이 단순히 가입원서로 촉발된 논쟁 및 총회 대응을 위한 일회적 한시적 동맹에 제한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총회 직후 의견그룹이 낸 "2차 총회에 대한 평가와 이후 과제" 제하의 입장서 내용은 이후 의견그룹의 중심적인 투쟁과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연방주의적 산개체제 · 조직보존주의적 관성과의 투쟁을 전면화해야 한다

우리는 현재 의회주의자들의 진보대통합당 건설에 맞서 진정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로서의 사회주의노동자당을 건설하는 투쟁이 우리 내부의 현실안주적이고 현상유지적인 관성과의 투쟁과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노위를 통한 당 추진위 건설'이라는 것이 결코 '조직의 합력을 모아서 사노준의 확대판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일 수 없다. 그렇게 된다면 무조건 당건설의 실패로, 또 하나의 확대판 써클 정파를 만드는 것으로 귀결되고 될 것이다.

우리가 민주대연합의 외연에 다름 아닌 진보대통합당 건설에 맞서 선진노동자들 사이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정력적이고 활발한 정치투쟁/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투쟁을 만들어 내고자 한다면, 우리 내에 이러한 조직보존주의적 관성과의 투쟁을 병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체와 활동가조직과 현장조직으로, 또는 협소한 지역 사안 중심의 활동으로 각자 산개되어 있는 역량을 그냥 그 상태에서 모아내는 데 급급하여 조직을 느슨하게 연방주의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의 연장선상에서 결코 당 추진위를 만들 수는 없다. 아니, 오히려 당 추진위 건설은 '조직의 합력을 모아낸다'는 미명 하의 이러한 연방주의적 조직보존과의 철저한 단절을 대표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총회에서 비록 실패했지만,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당건설 총력투쟁체제 구축을 위해 우리 의견그룹은 이 같은 연방주의적 산개 대형을 해체하고 당 추진위를 향한 민주집중제적 돌격 대형으로 조직을 재편하는 투쟁이 여전히 당건설투쟁/정치투쟁에 관건적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2차 총회 과정에 이르기까지 연방주의에 맞선 조직 재편 투쟁은 이제 당 추진위 강령 · 규약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민주집중제 규약을 확립하는 투쟁으로 전면화, 본격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 와 '집중' 의 대립?
– 지도의 중앙집중 없이는 정치방침에 대한 민주적 토론과 논쟁을 활성화시킬 수 없다

2차 총회 과정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심각한 모습은 '민주'와 '집중'을 대립시키는 경향이다. 당 추진위 건설이라는 하나의 분명한 목적 아래 결집한 우리들에게 '민주주의'란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한 민주주의인가? 당 추진위 건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체의 총의를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서, 나아가 이 총의에 바탕을 둔 지도의 집중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민주주의인가? 아니면 조직의 결정과 방침으로부터 특정 개인, 특정 집단의 자유를 허용 받을 권리로서의 민주주의인가?

우리는 신임 2기 중집이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토론과 의견수렴"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민주적 중앙집중주의를 기각하고 오히려 연방주의적 산개 체제를 강화하여 당 추진위 건설을 향한 전진을 되돌려놓는 심각한 우를 범하지 않을까 경계한다. 진정으로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토론'을 활성화시키고 최대한 다수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내기 위해서는 지도의 중

앙집중이 필수적 전제조건이다.

당건설투쟁의 도정에서 정세가 제기하는 새로운 과제와 도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응하는 조직의 정치방침과 전술이 민주적으로 토론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일단 정치방침과 전술이 '기 존재'해야 한다. 중앙이 선제적으로 낼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토론을 배치하고 논쟁을 조직해야 한다. 그냥 '아래로부터', '민주적으로' 토론되어 나올 수 있다고 상정한다면 그것은 조직의 필요성을 사실상 기각하는 무정부주의나 자생주의일 것이다.

낯선 새로운 과제와 도전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정치방침과 전술은 불가피하게 조직 내 논쟁을, 나아가 첨예한 조직 내 갈등까지도 수반할 수밖에 없으며, 조직이 이를 감수할 태세가 되어 있다면 오히려 논쟁은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역동적으로 되게 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새로운 정치방침과 전술은 조직 내 연방주의적 · 자치주의적 관성과의 투쟁을 불가피하게 할 것이다.

각각의 상황에 대한 정치방침과 전술을 제출하고 논쟁을 조직하는 것 자체가 그러한 관성과의 투쟁이며 이 투쟁이야말로 중앙의 일차적인 임무이다. 이러한 투쟁을 매개하지 않고서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토론과 의견수렴'은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지도의 집중 없이는, 즉 민주적 중앙집중주의를 기각하고 연방주의와 산개 체제에 굴복하고서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토론과 의견수렴은 불가능하다.

"민주적 토론과 의견수렴"을 위해서라도 '조직의 합력'이 아니라 '조직의 역동성'을!

지난 1기 4차 중앙위에 제출된 '진보대연합에 대한 정치방침(안)'의 운명을 보라. 1기 중앙위 · 중집은 이 중대한 사안과 관련한 정치방침(안)에 대한 조직 내 토론을 조직하는 것을 방기했다. 민주적 토론과 의견수렴을 조직하길 포기한 것이다. 다름 아니라 정확히 연방주의와 산개 체제에 굴복했기 때문이다. 조직 내 논쟁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겁내 했고, 연방주의 · 자치주의적 관성과 투쟁하는 것을 회피했기 때문이다. '민주'와 '집중'을 대립시키고 지도의 중앙집중을 '중앙 독재'와 연결시켜 기각하는 신임 2기 중집의 경향으로 볼 때 1기와는 달리 연방주의 · 자치주의적 관성과의 투쟁을 불사하고, 조직 내 논쟁과 갈등을 겁내지 않고서 과연

정치방침과 전술을 선제적으로 제출하여 이에 대한 조직 내 토론을 활성화시키고 의견수렴을 적극 조직할지, 우리는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다.

이후 예정되어 있는 강령 · 규약 논의 또한 이러한 논쟁 과정과 결합되는 것을 통해서만 남은 기간의 당건설투쟁이 역동적이고 외향적인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럴 때에만 성공적인 추진위 건설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총회에서 1안을 발의한 우리 의견그룹은 사노위가 이러한 당건설투쟁의 궤도 위에 올바로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분투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1년 1월 27일

당건설 총력투쟁체제 구축을 위한 의견그룹 [총회 1안 발의자]

조직 문제를 둘러싸고 구 사노준 다수파에 맞서서 전개한 이 투쟁에서 패배함으로써'사노위를 통한 당건설' 투쟁은 전진하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를 겪게 되었다. 회칙 개정을 포함한 이 투쟁의 패배로 인해 과연 이후 추진위 전환을 놓고 다수파의 벽 앞에서 연방주의에 맞선 민주집중제 당규약(안)을 채택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한 회의감이 짙게 드리워졌다.

2차 총회를 거치며 '사노위를 통한 당건설' 투쟁이 비틀거리며 후퇴를 겪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의견그룹의 결속된 투쟁은 이 후퇴하는 당건설 투쟁을 바로 잡고 다시 사노위를 전진의 길로 들어서게 할 주체세력의 형성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1차 의견그룹은 더 이상 구 사노련의 연장은 아니지만, 구 사노준의 무원칙한 패거리식 옹호(사보타지 인자에 대한) 및 연방주의 경향에 반대하여 결집했다는 점에서 구 사노준 다수파에 대항하는 소수파의 구도는 -- 소수파의 성격과 구성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면서 -- 계속 이어졌다.

3) 소책자 비평 건 : 조직 내 비판과 토론의 활성화를 질식시킨 관료주의

소책자 비평 건을 둘러싼 투쟁은 사노위 2기 지도부를 단독으로 구성한 구 사노준 다수파가 조직 내 비판에 대해 관료적 제재를 가하려 한 데서 촉발되었다. 지도부가 발행한 소책자에 대해 한 회원이 쓴 비평 글을 놓고 다수파는 "조직의 사업을 부정, 파괴했다"는 '죄목'으로 글 삭제와 사과를 요구했다. 비평 글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정치 토론의 문제를 행정적인 방식으로 정리시키려고 하는 관료주의는 혁명정당 건설과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 관료적 제재에 맞서 비판의 자유를 옹호하고 조직 내 관료주의가 대두하는 것에 맞서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것은 당연히 당건설 투사들의 가장 기초적인 임무에 속한다.

서울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의견그룹 성원들이 서울지역위 기관지 〈사회주의자 통신〉을 통해 비판의 자유를 방어하는 캠페인을 조직하며 선두에서 투쟁했다. 그러나 다수파는 이에 대한 일체의 정치토론을 회피하고 손쉽게 다수의 힘으로 조직 내 비판과 토론의 활성화를 억누르려 했다. 구 사노준 다수파는 그들 내 정치적 무정견과 정치노선 상의 연방성으로 인해 이러한 조직 내 비판과 토론의 활성화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관료적 제재에 반대하여 비판의 자유를 옹호한 이 투쟁은 다수파의 수적 힘에 밀려 서울지역위 집행부가 지역총회에서 총사퇴하는 것을 끝으로 결국 패배했다. 당건설은 비판과 토론의 활성화라는 자양분을 섭취하면서 전진한다. 회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행정적 처리와 '사업'을 앞

세워 정치적 토론을 질식시키는 조직이 강령 상의 통일을 위한 투쟁을 계급 속에서 공개적으로 조직하길 기피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다. 실제로 이 소책자 비평건을 둘러싼 투쟁 이후 다수파는 강령 초안 토론을 공개적으로 개최하는 것에 대해 단일한 초안이 아닌 복수안이 나왔다는 이유로 사보타지 하거나 아주 형식적으로만 이행했다. 이로써 사노위를 통한 당건설 투쟁은 본격적인 강령 투쟁에 앞서 이미 좌초하기 시작했고, 실패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웠다.

4) 1차 의견그룹의 해소와 야합세력의 이탈

한편 소책자 비평 건을 놓고 의견그룹이 분열하여 해소되었다. 2차 총회를 거치면서 사노위를 전진시킬 주체세력 형성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의견그룹이 비판의 자유 방어 문제를 계기로 잠재해 있던 내적 차이를 격렬히 드러낸 것이다.

5월 28일 3차 총회에서 사노위에 남아 강령 단일화를 이뤄내겠다며 구사노준 다수파와 동거하는 것을 선택한 의견그룹 이탈세력은 이미 소책자 비평 건을 둘러싼 투쟁에서도 다수파와 행보를 같이 했었다. 그들은 관료적 제재에 반대하고 비판의 자유를 옹호하길 거부했다. 그리고 오히려 비평 글이 사노위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글이고 "오보"라며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로 인해 의견그룹은 그 주요한 사안에서 행동 통일을 이루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격렬한 대립 충돌을 빚으면서 끝내 4월 3일 8차 회의를 끝으로 해산을 맞았다. 그러나 비평 글을 둘러싼 의견 대립 이

전에 보다 근본적이고 누적된 차이와 대립이 깔려 있었다. 다름 아니라 당 추진위 건설과 관련하여 5월 또는 8월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둘러싼 차이였다. 의견그룹 내 일부 인자들이 당 추진위 건설에 대한 사노위의 기본 방침이자 대중에 대한 약속인 '1년(+3개월) 내에 강령/전술/조직상의 통일을 이뤄 추진위를 건설한다'는 원칙을 기각시키고 사노위를 1년 더 연장하자는 입장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의견그룹 내에서 비평 글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인자들 모두가 바로 이 '1년 연장' 입장에 동의하는 인자들이라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비판의 자유를 옹호하는 것조차 완강히 거부하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의 배경에는 이런 근본적인 대립이 있었던 것이다.

거슬러 올라가 2월 27일 의견그룹 4차회의에서 고민택의 발제 내용에 대해 정원현, 백종성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다. 정원현 백종성은 만일 고민택의 발제 내용이 의견그룹에서 채택되면 의견그룹을 탈퇴하겠다고까지 공언하면서 반발했다. 2인이 격렬히 반대한 고민택의 발제 내용은 무엇이었던가? 첫째, 예정대로 5월 또는 8월에 당 추진위 건설해야 한다. 둘째, 강령상의 통일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사노위를 해산하고 강령에 따라 각자 추진위 건설로 가야 한다. 이런 배수진을 치고 강령 투쟁 등 내부투쟁에 임할 때만이 최대의 긴장감을 갖고 당건설 투쟁을 할 수 있다.

사실 발제 내용은 사노위 건설 당시의 공개제안서에서부터 사노위 출범 당시에 이르기까지 계속 대내외적으로 밝혀온 추진위 건설 방침과 다를 게 없다. 즉 기존 추진위 건설 방침과 다른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1년(+3개월) 내에 강령/전술/조직상의 통일을 이뤄 추진위를 결성한다는 기존 방침은 명백히 2011년 5월 또는 8월에 추진위를 출범시킨다는 것이고, 고민택 발제 내용은 이를 재확인한 것일 뿐이었다. 그리고 만

일 1년(+3개월) 내에 강령/전술/조직상의 통일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단일하게 추진위 결성으로 가지 못하며 따라서 공동실천위원회로서의 사노위는 종료, 해산해야 한다는 것도 기존 방침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결론인 것이다.

이와 같이 기존 방침의 재확인일 따름인 발제 내용에 대해 정원현 백종성은 어떤 입장으로 반대했는가? "강령 문제 미룰 수 있다. 사노위 11개 원칙으로 조직 확대 후 해도 늦지 않다. 그런데 강령논의 하면서 조직 깨고 간다? 가장 최악의 수다.", "절대 깨져선 안 된다. 깨는 것은 미친 짓이다."

정원현 백종성은 고민택 발제에 대한 반대 토론이라는 형식을 빌어 사실상 기존 원칙 기각 및 수정을 들고 나온 것이다. 5월 또는 8월까지 강령 상의 통일을 끝내 이뤄내지 못한다면 결국 강령에 따라 제 갈 길을 갈 수밖에 없고, 분리한 속에서 당 추진위 건설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그 동안 의견그룹 내 대다수 동지들의 자연스럽고 정당한 생각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미 제출되어 있는 강령 초초안의 3인안 내용을 볼 때 저렇게 개량주의에 뒷문을 열어놓고 있는 강령안과 과연 단일화가 가능하겠는가, 저런 강령안을 사회주의혁명정당의 강령안이라고 내놓는 것이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 하는 회의와 불신이 강하게 일기 시작한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정, 백 2인의 '강령 문제 미루고 사노위 연장하자'는 주장은 의견그룹 다수 동지들의 입장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강령 토론 기간이 아직 8월까지 계산하면 5개월 이상이나 남아 있고, 그 기간 동안에 강령 통일을 위한 긴장 어린 비타협적 투쟁을 전개해야

할 상황에서 스스로 먼저 1년(+3개월)이라는 옵션을 풀어버리고 긴장을 빼버린 상태에서 무슨 당 추진위 건설투쟁이 집중성을 가지고서 가능하겠는가? 또한 화해할 수 없는 두 가지 강령 · 노선이 무원칙하게 동거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1년 더 함께 한다는 것이 사회주의혁명정당을 건설하겠다고 공언해 온 세력으로서 어떻게 정당화가 될 수 있겠는가? 1년 3개월의 공동실천위 기간을 넘어 이후 서로 다른 강령과 노선으로 조직활동을 하고 서로 대립되는 강령과 노선 하에 신문이 잡탕으로 발행되고, 서로 모순되고 충돌하는 전술과 실천지침들이 같은 신문에 나란히 1년 동안 실려서 노동자계급 앞에 제출되는 상황을 상상해 보라. 이것이 당 건설인가?

만일 의견그룹 성원인 정원현 백종성이 아니라 사노위 현 중집이나 다수파의 누군가가 감히 이런 주장을 들고 나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의견그룹 동지들로서는 '그건 사노위 깨자는 얘기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격렬한 항의와 반발이 즉각 나왔을 것이다. 2인이 제기하는 사안의 성격은 이렇게 심각한 것이었지만, 2인이 의견그룹 성원이었다는 이유로 다수 동지들은 일단 토론을 거부하기까지는 않는 인내심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서 지난 2차 총회 직후에 정원현은 이미 결론이 난 '통합지도부' 문제를 의견그룹에 계속 제기하여 논란을 일으킴으로써 의견그룹 다수 동지들의 불신을 불러온 바 있다. 총회에서 이미 의견그룹의 사업계획이 패배하고 구 사노준 다수파의 사업계획이 채택되어 그에 따른 2기 지도부가 선출되었는데 정원현은 그 상황에서 의견그룹이 2기 지도부에 소수파로 참가하여 다수파의 사업계획을 함께 집행해야 한다는 투항적인 주장을 들고 나온 것이다.

동지들은 정원현의 사노위 연장 주장을 이 통합지도부 주장의 연속선

상에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만약 이 통합지도부 문제가 계속 내부에 제기되었다면 의견그룹은 그 때 이미 깨졌을지도 모른다. 통합지도부 문제는 중집 스스로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원현도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멈출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사노위 1년 연장' 주장으로 다시 의견그룹 내부를 뒤흔든 것이다.

3월 중에 있었던, 뒤이은 의견그룹 두 차례 회의는 이 문제가 비평글 문제를 둘러싼 논쟁과 결합하여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4월 3일 회의에서 의견그룹이 파탄난 것이다. 의견그룹은 분리되기 이전에 이미 와해되고 있었던 것이다. '사노위 1년 연장' 주장으로 의견그룹은 이미 분리되기 시작한 것이다. 비평글을 둘러싼 의견그룹 내 논쟁이 그리도 적대적으로 전개된 것은 의견그룹을 화해할 수 없이 갈라놓은 '사노위 1년 연장' 문제 때문이었다. '강령 문제 미루고 사노위를 1년 연장하자'는 입장은 단지 의견그룹을 같이 할 수 없는 문제를 넘어 사노위를 같이 할 수 없는 문제였다.(이 2인의 '1년 연장' 입장에 대해서는 다수파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의견그룹은 기존 방침과 원칙대로 반드시 5월 또는 8월에 혁명적 강령으로의 통일을 이루어내기 위해 비타협적으로 투쟁할 동지들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정원현 백종성을 필두로 한 의견그룹 이탈 세력은 이후 다수파와 소수파 사이에서 잠시 중간지대를 형성하는 듯이 보였지만 사실 이는 다수파에 편입되는 과정에 불과했다. 이 점은 3차 총회 및 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서울지역 총회 및 강령 초안 전국토론회 등에서) 이들 이탈 세력이 의견그룹을 앞장서서 공격하는 모습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이와 같이 의견그룹이 당 추진위 건설 원칙을 견지하면서 강령 투쟁을 수행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구 사노준 출신의 경기지역 동지들도 독자 전망을 모색하며 새 의견그룹과 진로를 달리 했다. 구 사노련 출신으로 다수파에 편입된 의견그룹 이탈 세력과는 달리 이 동지들은 다수파와 거리를 두고 있다. 하지만, '강령(이행요구 포함)에 입각한 노동자투쟁 조직화' 및 현장에서 사회주의 정치활동 문제를 명확히 정리해서 자체 전망을 빠르게 수립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5) 강령 투쟁

소수파는 본격적인 강령 투쟁을 앞에 두고 이와 같이 그 세력이 축소되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소수파는 사노위 1년 시한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혁명적 강령으로의 통일에 마지막 사활을 걸고 '혁명정당 강령 정립을 위한 모임'을 제안하며 독자적으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모임' 제안문은 사노위를 통한 당건설 투쟁이 당시 도달해 있던 지점을 다음과 같은 절박한 상황 인식으로 표현했다.

> "사노위가 5월 또는 8월에 당 추진위 결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혁명적 강령을 정립해서 가야 합니다. 혁명정당 강령 없이 사노위가 당 추진위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사노위 출범 후 1년 + 3개월이 되는 8월까지 만일 강령 · 전술 · 조직 상의 통일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사노위가 단일하게 추진위 결성으로 가지 못하며 따라서 공동실천위원회로서의 사노위는 종료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을 상기할 때 이제는 혁명적 강령으로의 통일에 마지막 사활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
> 사노위를 통해 혁명정당을 건설하려 하고 혁명적 사회주의 강령 정립을 지지하는 모든 동지들은 혁명정당 강령 정립을 위한 비타협적인 투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피티독재와 무봉 같은 혁

명적 사회주의의 원칙과 이행요구를 포함하는 혁명적 강령으로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 추진위 건설의 사활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이에 가칭) '혁명 정당 강령 정립을 위한 모임'을 동지들과 함께 시작하고자 합니다. 동지들, 5월, 8월까지 혁명적 강령으로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 함께 합시다. 혁명적 강령에 기반한 당 추진위 건설 투쟁에 모두 함께 합시다."

강령 토론이 계속 사노위 내부로 갇혀서는 이제 더 이상 혁명적 강령 통일의 가능성은 없다는 위기의식이 3차례의 독자 공개토론회를 강행하도록 추동했다. 이것으로 공개적인 강령 초안 토론에 소극적이었던 다수파가 얼마나 압박을 받았는지, 전체 사노위에 강령 투쟁의 긴장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정확히 평가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독자 공개토론회를 통해 사노위 내부의 강령 투쟁과 논쟁점들이 외부에 공공연하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사노위를 통한 당건설 투쟁이 5월 또는 8월에 과연 어떻게 결판날지에 대한 외부의 관심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5월 14일에 개최된 사노위 전국토론회는 혁명적 강령으로의 통일이 더 이상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토론회였다. "강령 초안들 간에 별 차이가 없다"며 단일화를 압박하는 주장들이 다수파 일각에서 나왔지만 이날의 첨예한 논쟁 자체가 5인안과 3인안 사이에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의견그룹을 이탈한 야합세력은 이날 의견그룹이 지지하는 5인안에 대한 공격에 앞장섰다. 5인안 초안에서 한 두 문장을 집어내 '노조 포기주의', '초좌익' 등으로 몰아가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방식의 공격은 이후 이탈세력이 사노위에 남아 다수파와 어떻게 '강령 단일안'을 야합해낼지 그 방향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다.

6) 4차 중앙위 결정사항과 야합에 맞선 투쟁

다음날인 5월 15일에 있은 사노위 4차 중앙위원회는 이러한 야합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었다. “3차 총회에서 강령초안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 차기 총회에서 강령초안을 유보 없이 채택한다”고 결정하여 다수파 중심의 강령안을 표결로 밀어붙일 것이니 ‘따라올라면 오라’고 선포한 것이다. 또 “단일안을 작성할 것을 전제로 강령기초위원을 선출한다”고 결정하여, 이미 단일안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낸 5인안의 강령기초위원들을 배제하고 의견그룹 이탈 세력들을 새로 구성하는 강령기초위에 포함시켜 밀실야합으로 단일안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사실은 5인안 위원들뿐만 아니라 3인안과 2인안 위원들도 포함하여 전체 강령기초위원회가 단일안이 불가능하다고 공히 결론내리고 이를 조직에 보고했었다)

나중에 사노위 3차 총회는 의견그룹이 퇴장한 뒤에 이 중앙위 결정사항을 그대로 채택했다. 그리고 새로 구성한 강령기초위원회에 정원현 백종성을 포함시켰다. 4차 중앙위가 결정한 식으로 3개월을 연장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야합을 위한 연장에 불과함을 3차 총회는 결국 숨길 수가 없었다. 원칙적으로 사노위 시효의 3개월 연장이 가능했음에도 의견그룹이 4차 중앙위 결정에 반대하고 규탄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야합으로 가기 위한 결정임을 모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4차 중앙위 직후 5인안의 강령기초위원인 오세철과 양효식은 “당 추진위 건설 원칙을 짓밟은 중앙위 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제하의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현 중앙위의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는 구 사노준이 "강령/ 전술/ 조직/ 상의 통일을 통한 추진위 건설"의 원칙을 이런 식으로 짓밟는 중앙위 결정을 앞세워 3차 총회를 밀어붙이고자 한다면 이는 사노위라는 틀을 자신들의 사유물로 만들려는 음모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밝힌다. 강령 / 전술 / 조직 상의 통일을 끝내 이루어내지 못하면 공동실천위원회로서 사노위는 공동으로 해산을 선언하고, 공동으로 청산 작업을 해야 한다. 이것 이외에 다른 길은 없다."

이어서 5월 22일 소수파는 "3차 총회는 '사노위 해산 총회'가 되어야 한다"는 25인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사노위를 통한 당건설을 끝내 파탄으로 몰아간 4차 중앙위 결정을 규탄하고, "사노위 운동은 실패했다"고 결론 내리며 사노위 해산을 요구했다.

"4차 중앙위는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사노위 운동의 정당성마저 짓밟는 행위를 저질렀다. 4차 중앙위는 세상을 속이고 자신마저 배반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

사노위 운동은 실패했다. 이 엄연하고 냉정한 사실로부터 누구도 도망갈 수 없다. 아무리 아프고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일단 실패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패했다고 해서 사노위 운동이 추구하고 시도했던 것 자체마저 부정하거나 부정당해야 하는 것인가의 문제는 아직 그렇다고 말하기에는 이르다.

사노위의 실패는 예정된 실패가 아니다.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는 계기와 과정이 교차했으며 혼재해 있었다. 최종적으로 성공에 이르지 못했을 뿐이다. 누가 어떻게 사노위 운동의 경험과 교훈을 살려 나가냐에 따라 사노위 운동은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해서 부딪쳐야 하는 문제이다.

4차 중앙위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과 여지를 앗아갔다. 사노위 운동 전 과정의 결말을 희화화시키고 있다. 해프닝, 에피소드로 전락시키고 있다. 3차 총회에서 강령단일안이 성원 모두의 동의를 통해 또는 모두가 인정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표결을 통해서라도 결정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현실 앞에서 3개월의 시간과 노력

을 들여서 강령단일화를 이루기 위한 시도를 마지막으로라도 한 번 더 하자는 취지로 4차 중앙위 결정을 이해해 보려고 한다 하더라도 "강령초안을 유보없이 채택한다"거나 "단일안 작성을 전제로 강령기초위원을 선출한다"는 방안은 도저히 그런 취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7) 3차 총회와 "사노위 정치적 해산 선언"

사노위 3차 총회는 끝내 해산을 거부했다. 사노위를 통한 당건설 투쟁은 이렇게 실패로 마감했다. 소수파는 28인 명의로 "사노위의 정치적 해산"을 선언했다. 그리고 사노위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당 건설 의지 재확인"을 주장하는 3차 총회 결정이 왜 "조직 보존주의를 앞세운 야합"에 불과한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사노위가 실패한 것은 단지 강령 문구상의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때문이 아니다. 강령 상의 불통일은 혁명이냐 개량이냐와 관련한 총노선의 차이를 드러냈으며, 이는 '어떤 당'을 건설하고 '어떤 정치활동'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좁힐 수 없는 간극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강령 논의를 3개월 더 연장한다고 해서 해소될 수 있는 차이가 아니다. 더군다나 그 3개월을 계급 속에서의 공개적인 강령 논쟁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단일화를 전제한 몇몇의 밀실 논의를 통해 단일안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은 정치적 통일에 기초한 당 강령의 정립이 아니라 조직 보존주의를 앞세운 야합일 따름이다.

혁명적 강령으로의 통일을 비웃고 조직만 유지, 보존하면 된다는 이러한 정치 냉소주의에 바탕한 무원칙한 동거로는 결코 사회주의 혁명정당을 건설할 수 없다. '깨져서는 안 된다', '사노위만이 유일한 대안이다'라는 맹목적인 조직보존 논리는 '강령에 입각한 당 건설'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는 논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해산 선언에도 불구하고 사노위 다수파는 "당 건설 의지 재확

인"을 주장하면서 사노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노위가 더 이상 당 건설 추진체로서 동력과 의의를 상실했음을 마냥 감출 수는 없다. 사노위 다수파가 사노위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아무리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명의를 참칭하더라도 사노위는 사실상 '확대판 사노준'에 불과하다. 이후 3개월 안에 단일안으로 나올 강령의 구체적 모습이 어떠하건 그 본질적 성격은 개량주의에 뒷문을 열어놓고 있는 3인안의 중도주의 강령 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유로콤의 진지전적 "주체 형성 전략"을 기본틀로 하여 거기에 이행요구 중 몇 가지 항목들을 끼어 넣는 식의 절충과 야합으로 버무린 '단일안'이 나올 것이다. 이것에 아무리 '사회주의노동자당 추진위 강령'이라는 명칭을 붙인다 해도 그것은 '확대판 사노준 강령'에 불과하다.

현 사노위가 확대판 사노준에 불과한 것은 강령 단일안의 성격 때문만이 아니다. 조직과 전술에서도 또한 그러하다. 노동전선으로 대표되는 상층노조운동, 단체, 부문 등을 병렬적으로 모아놓은 연방주의 조직 구조가 온존하고 있다. 전술 역시 이러한 조직 구조를 반영하듯 꽁무니주의 전술(조합운동과 부문운동에서 회원들의 조합주의적 · 부문운동주의적 활동을 사후 추인하는 전술)이 노골화, 체계화 되고 있다. 노조와 현장, 그리고 각 부문운동 영역에서 개량주의 주류를 거스르면서 사회주의 정치 활동을 펼쳐나가기에는 이미 각각의 영역에서 개량주의 내 좌익의 위치로 안착해 감에 따라 개량주의 운동의 재생산에 일조하고 있다. 현 사노위가 아무리 '사회주의운동의 전면화, 대중화'를 소리 높여 내걸고 있음에도 공허한 메아리로 그칠 뿐 실제 각각의 일상 활동영역에서 회원들의 실천은 노동전선이나 단체, 부문운동의 한계 안에 안주하여 그 틀을 넘어서고 있지 않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사노위 실패의 본질은 바로 이러한 강령/조직/전술에서 구 사노준의 기존 틀이 깨지지 않은 채 사노위 운동 속에서 지속될 수 있었던 데 있다. 달리 말하면 사노위 소수파를 형성한 혁명정당 건설 세력이 당 건설 공동 실천 속에서 이러한 사노준의 기존 틀을 깨뜨리고 사노위를 당 건설 추진체로 바로 세우는 투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패배는 많은 부분 소수파의 투쟁의 불철저함에서 비롯한 것이기도 하다.

3. 마치며

사노위 실패, 즉 '사노위를 통한 당건설 투쟁'이 실패로 결말났다고 해서 애초 사노위는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식의 평가 아닌 평가는 우리의 결론이 될 수 없다. 실패에도 불구하고 1년여 기간의 사노위를 통한 당건설 투쟁은 현 시기 남한 노동자계급운동 속에서 혁명정당 건설투쟁이 넘어야 할 장애와 과제가 무엇인지를 실물적으로 집약해서 보여주었다.

사노위 내 소수파와 다수파의 투쟁은 그것이 비록 노동자계급운동에 당장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영향과 파장을 미치고 있지 않은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투쟁의 계급적 의미와 성격은 분명하다. 무엇보다 그 투쟁은 노동자계급 속에서 어떤 당을 건설하고, 어떤 정치활동을 할 것인가를 둘러싼 투쟁이었다. 혁명정당인가, 개량주의에 뒷문을 열어놓는 중도주의 정당인가? 연방주의에 바탕한 꽁무니주의 정당인가, 민주집중제에 기초한 전위당인가? 강령에 입각하여 노동자투쟁

을 조직하는 사회주의 정치활동인가, “강령 따로, 실천 따로” 식의 추수주의 · 경제주의 활동인가? 사노위 투쟁의 이 본질적인 주제는 이후 그 어떤 당건설 투쟁에서도 결코 비껴갈 수 없는 과제로 사회주의자들 앞에 가로놓여 있을 것이다. 사노위 투쟁에서 사회주의자들이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성과와 유산이 있다면 바로 이 투쟁의 의미와 교훈을 당건설 운동의 새로운 지형 위에서 정확히 되새기는 데서 나올 것이다.

혁명정당 건설을 통해 현 시기 노동자계급운동의 대안 지도력을 세우고자 하는 사회주의자들이 공동실천 속에서 강령/조직/전술상의 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 공동실천의 구체적인 조직적 형태가 무엇이건 간에 그 투쟁은 사노위 운동이 결론적으로 도달한 지점을 자신의 출발점으로 삼아 전진할 수 있다.

2011년 6월 9일

사노위 정치적 해산 선언자 모임

Ⅱ

당 건설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 당 건설 노선 문제를 중심으로 –

당 건설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 당 건설 노선 문제를 중심으로 -

– 고민택

1. 들어가며

이 글은 2010년 5월 9일 출범한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이하 '사노위')의 1년 활동 경과와 경험을 당 건설 노선의 측면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를 계기로 당 건설 노선과 관련하여 현재 한국의 사회주의 세력(정파) 사이에 어떤 쟁점이 놓여 있는가를 검토하면서 당 건설 노선을 다시 한 번 확인, 제출하는 것을 통해 당 건설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말하지만 만약 '사노위'가 성공했다면 당연하게도 이 글은 굳이 필요치 않았거나, 또는 내부적 사안으로 그쳤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새로운 주체

먼저 이 글을 제출하는 주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우리는 지난 '사노위' 2차 총회를 전후로 하여 형성된 '의견그룹'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리고 더욱 직접적으로는 '사노위' 3차 총회가 끝난 후인 지난 6월 10일에 '사노위 1년, 그 당건설 투쟁에 대한 평가(1차보고서)'(이하 1차보고서)를 제출한 '사노위 정치적 해산 선언자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로부터다. 이 중의 대다수는 오는 10월 15일 우리와 뜻과 행동을 같이 할 동지들과 함께 정식으로 조직 형식을 갖춰 출범할 예정에 있으며, 현재는 '(가칭)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노위 정치적 해산 선언자 모임'은, '사노위' 결성 시에는 물론 그 뒤에도 분명 경향적으로 존재했던 특정 정치적 경향(정파)이 다시 모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잔류 '사노위' 내부에서나 또는 일부 바깥에서 우리를 '구사노련'의 연장으로 보는 것은 그들의 자유일 수는 있으나 그것은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는 오직 '사노위' 결성과 그 속에서의 정치활동을 통해 새롭게 공동의 정치적 기반을 형성한 바로 그 결과로 다시 탄생한 새로운 주체이다. 이 점에서 만큼은 잔류 '사노위'도 비록 구 정파별 숫자의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그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잔류 '사노위'가 '구사노준'의 연속이 될 지, 어떤 변화가 생길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어쨌든 '사노위' 해산이 비록 겉으로 드러난 양상만 보면 마치 '사노위' 결성 이전에 존재했던 정파 구도로 회귀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실상은 위에서 말한 바대로 이전 존재했던 정파 구도가 약화되고 새로운 정치 주체가 등장한 것이라고 해야 맞다. 사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낯선 것도 아니다. '사노위'로의 합류 과정에서 '구사노련'이 격력한 토론 끝에 분리되면서 이미 새로운 정치 주체의 등장이 일차 일어난 바 있다. 그러나 그 때만 해도 아직 정파 구도가 더 강하게 남아 있었다. 그랬다가 이번 경우에 이르러 한 층 더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우리는 이런 과정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며 우리 또한 그런 역할을 앞장서서 해 나갈 생각이다. 물론 그러한 변화가 당 건설을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끌어 내는 것과 맞물려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계획으로서의 당 건설

이 글의 주요 초점과 논점은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 운동을 둘러싸고 직, 간접적으로 제기, 제출되고 있는 당 건설 사상과 경로, 즉 당 건설 노선에 집중해 우리의 입장과 판단을 현 시점에서 다시 밝히려는 데 있다. 그런데 우리는 당 건설 노선에 대해 이미 '사노위' 결성을 시도할 당시에 한 차례 제출한 바 있다. 그 핵심은 다름 아닌 직접적 당 건설을 위해 모든 사회주의 세력이 나서서 실질적인 창당을 목표로 한 가운데 주체들 사이에서 강령/전술/조직 문제를 둘러싼 투쟁을 통한 당 건설이라는 '계획으로서의 전술'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과정으로서의 당 건설'이 아닌 '계획으로서의 당 건설' 노선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알다시피 우리는 '사노위'의 정치적 해산을 선언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우리의 입장에서는 일차적으로 '사노위' 결성 당시 취했던 논

리와 태도에 대해서는 물론 1년 활동의 결과로 '사노위'의 정치적 해산을 선언하게 된 과정까지를 포함하여 '사노위' 운동을 객관화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서는 '1차보고서'를 통해 부분적으로 이미 제출한 바 있다.

다만 '1차보고서'는 '사노위'의 정치적 해산을 선언하게 되기까지 '사노위' 내에서 벌어진 몇몇 정치 과정을 서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1차보고서'는 주로 '사노위' 내에서 조직문제를 둘러싸고 부딪힌 문제와 함께 최종적으로는 강령에서의 불일치가 결국 '사노위'의 정치적 해산을 선언하게 된 원인으로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1차보고서'는 '사노위' 결성 그 자체, 즉 '사노위'를 통한 당 건설이라는 노선과 경로는 틀리지 않았음을 재차 확인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 그렇지만 '1차보고서'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 보고서에 담긴 평가만으로 큰 틀에서 당 건설 노선 전체에 대한 평가를 말하기에는 부족하다.

우리가 '사노위의 정치적 해산을 선언'할 때까지 바로 이 '사노위'를 통한 당 건설이라는 경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것을 성공시키는 것인가를 둘러싸고 '사노위' 내에서 일차적으로 부딪쳤다. 즉 우리와 달리, 원인과 책임이 어느 쪽에 있든, 조직문제에서의 차이와 강령에서의 불일치가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곧 애초 설정한 '사노위'를 통한 당 건설 경로 그 자체를 폐기해야 할 정도의 문제가 아니며 설령 그런 측면이 있다 해도 더 중요한 것은 '사노위'를 계속 유지, 지속시키면서 그 또한 극복, 해결해 나가야 하며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논지의 주장이 강하게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이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듯이 그들 역시 여전히 우리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할 수 없을 것이며 하지 않고 있다. 이 측면만 놓고 보면 외견상으로는 그들이 '사노위'를 통한 당 건설이라는 경로를 오히려 가장 완고하게 움켜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와 함께 '의견그룹'을 같이했던 동지들이다. 그들은 최종적으로 '의견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동지들과 함께 "[3차 총회 보고]사노위, 제3차 총회를 통해 당건설 의지를 재확인"을 자신의 입장으로 취했다.

한편 '사노위' 바깥에서는 이 글을 쓸 때까지는 다함께가 자신의 이론지 〈마르크스주의21〉 10호를 통해 "사노위 실패가 좌파에게 보여주는 것"(필자 전지윤)이라는 제목으로 상당한 의욕과 분량을 할애하면서까지 평가를 제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마르크스21〉 11호를 통해 답할 예정이다. 다함께를 제외하고는 부분적 언급을 넘어 본격적으로 '사노위' 운동에 대한 논평이나 평가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한국 사회주의 세력과 당 건설 운동이 아직 전반적으로는 취약하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동시에 해산 선언 이전의 '사노위', 그 중에서도 우리 자신이 이런 현실을 극복, 추동하는 데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우리는 '객관적 현실'을 핑계로 우리의 책임을 떠넘길 생각은 조금도 없다. 그렇긴커녕 오히려 그와 같은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더욱 강조해서 구체적으로 말할 것이다. 우리가 '사노위'를 제기하고 시작했던 주요한 배경의 하나도 바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예정된 실패?

'사노위'를 통한 당 건설을 제기하고 1년 활동을 함께한 주체로서 우리는 이미 '사노위' 해산을 선언했으며 '사노위' 실패를 말했다. 위에서 말했듯이 '사노위' 실패에 따른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도 있다. 그 책임은 단지 지금부터만이 아니라 '사노위' 결성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전부를 포함한다. 따라서 '사노위'를 통한 당 건설이 진전되고 성공하기를 바랐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판단과 정치행위에 대해 상당한 실망감을 느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질책을 한다 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우리의 입장에서 '사노위' 실패는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이 뜻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최종적으로 또는 진정으로 실패했다고 말할 만큼으로 아직 충분히 실패하지 않았다는 맥락이다. 즉 더 많이 그리고 계속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후로도 또 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의견그룹'을 같이 했다가 최종적으로 갈라 선 부위가 가장 염려하는 것도 이 지점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를 맞더라도 그 이유가 해산 선언을 한 것 때문은 아니다. 거기에는 그에 따른 또 다른 원인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그 또한 예정된 실패일 수는 없다. 다른 하나는 그와는 완전히 반대로 현재의 실패는 아직 최종 실패가 아니라는 맥락이다. '사노위'를 지속, 유지하는 것을 통해 당 건설에 이르겠다는 것이야말로 더 무망한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도달한 결론이다. 우리가 '사노위' 해산을 선언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잔류 '사노위'의 미래는 이제 그들의 몫이다. 우리는 '사노위' 해산, '사노위' 실패를 딛고 당 건설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사노위'를 통한 당 건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무튼 '사노위'를 제안할 당시 이에 동의하지 않았던 정파를 포함해, 특히 여러 가지 이유와 어려움 때문에 '사노위'에 결합하지 않은 현장의 활동가와 개별 활동가도 자신들의 동의 여부나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사노위'의 결성과 시도가 좋은 의미에서 진전되기를, 성공하기를 바랐을 것이라고는 생각한다. 여기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우리가 감당해야 부담감과 책임감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사노위'가, 어느 정도를 넘어, 처음부터 아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을 택했다거나 또는 '써클주의'가 낳은 당연한 결과로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평가는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어떤 시도도 그 속에는 성공과 실패의 계기가 있기 마련이다. '사노위'가 무조건 성공을 예정하지 않았던 것만큼이나 역시 불가피한 실패를 처음부터 예정하지도 않았다. '사노위'는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모두 안고 출발했다. '사노위' 유지, 지속의 실패를 '사노위'를 통한 당 건설 자체의 실패로 평가하는 것은 결과론적, 운명론적 평가일 뿐이다.

사실 '사노위'를 제안할 당시에는 물론 현재까지도 한국에서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어떻게 하자는 제안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는 세력(정파)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더 냉정히 말하면 그들은 실패할 기회조차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실패가 현재진행형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실이 다른 세력들의 정당함이나 올바름을 증명하는 것일 수는 없다. 정치적 냉소주의는 가장 나쁜 태도이다. '사노위' 시도와 경험은 '사노위' 성원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사노위' 실패가 곧 당 건설 운동 그 자체의 실패가 아니듯이 '사노위' 실패가 그 성원들만의 문

제로 치부되어서도 안 된다.

2. 사노위 이전 상황

한국에서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 운동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더 문제는 아직 계급의 관심 밖에서 논의,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사실 진보정당(개량주의) 운동조차도 전 사회적 차원에서 보면 여전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사노위'를 제기할 당시를 포함하여 지금도 당 건설을 착수할 수 있는 조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를 들어 당 건설 문제를 미래의 문제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사노위'는 바로 이런 경향을 강하게 비판하며 등장했다.

그럼에도 형식 논리로 접근하거나 현상적으로 드러난 것만 놓고 보면 그들 주장이 제법 그럴 듯하게 들릴 수 있다. 진보정당 운동에 비판적인 활동가들 중에 당장 스스로 사회주의자임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사회주의 당 건설에 직접 나설 수 있는 부위는 소수인 것이 사실이다. 한국에서 사회주의 세력은 전 사회적 차원은 고사하고 운동진영 내에서도 일상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정치력으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된 이유가 지난 10여 년 동안 개량주의 세력이 노동계급 안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키워 온 때문이 아니다. 알다시피 그들 운동도 절대적

수준에서는 오히려 후퇴, 퇴보의 길을 걷고 있다. 개량주의 세력과 그들의 정치도 여전히 노동계급으로부터 정치력을 인정받고 있지 못하며 특히 투쟁하는 노동자들부터 환영받고 있지 않다. 최근 이른바 '진보대통합' 문제가 요란하게 일고 있지만 '속 빈 강정'이라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어쨌든 설령 개량주의 정치가 사회주의 세력에게 일부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도 그 책임은 전적으로 사회주의자 자신의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국가탄압 문제가 분명 있지만 그 또한 피해갈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후발, 신생, 소정파

민주노조운동과 대중투쟁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그 시기에 오히려 한국의 현실은 그나마 사회주의 또는 변혁을 외치던 대부분의 세력이 정치적, 조직적 해체의 길을 걷고 말았다. 이른바 '현실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하면서 혁명주의 전통에 선 정치는 거의 실종되었다. 물론 그 전에 그들 운동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혁명주의였는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뿐만 아니라 그들 개량주의는 차치하고라도 스스로 여전히 혁명주의 전통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세력 사이에서도 커다란 편차가 있었으며, 나아가 그들 세력은 대부분 87년 노동자대투쟁에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정치적, 조직적 영향력을 미처 확보하지 못한 '후발, 신생, 소정파' 조직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이런 현실 자체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 세력 대부분은 계급투쟁에 대한 전면적인 개입이나 개량주의 세력들과의 지도력 다툼

을 위한 정치활동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자기 정파 강화를 위한 내향적 활동에 치우쳤다는 점이다. 소정파가 가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한계가 있고 국가탄압이 가로막았던 사정이 있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내향적 활동 태도가 결국 써클주의를 스스로 고착시키는 원인이 된 것도 사실이다. 그로 인해 더 나쁘게는 사회주의 세력 사이에서조차 본격적이고 전면적인 정치투쟁, 사상투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떤 면에서 그러한 정치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거나 심지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분란만 일으키는 일로 취급되었다.

물론 이렇게만 말하면 어폐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노력이나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서는 본 책 오세철 글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하나는 그나마의 시도조차 '반향없는 그들(소수)만의 논쟁'에 그쳤다는 것이다. 그 책임이 그들만의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다른 하나는 '구노동자의힘'이 사회주의 세력 내에서 차지한 독특한 포지션이다. '구노동자의힘'은 옳든 그르든,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논쟁에 개입하지 않았다. '구노동자의힘'은 나머지 사회주의 세력과는 운동의 궤적이 달랐으며, 문제설정 자체도 달랐다. '구노동자의힘'은 그들 '후발, 신생, 소정파' 조직의 형성 과정과는 다른 역사적 형성 과정을 걸었다. '구노동자의힘'은 구정파들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노동자계급정당(당시의 표현, 개념) 건설을 부여잡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현실에서는 '구노동자의힘'과 다른 사회주의 세력 사이에 정치적 관계는 사실상 단절되어 있었다. '구노동자의힘'이 당 건설을 본격적으로 들고 나오기 전까지 '구노동자의힘'과 다른 세력들 사이에 의미 있는 논쟁은 없었다.

‘구노동자의힘’

여기서 ‘구노동자의힘’에 대한 대략의 설명이 필요하다. ‘구노동자의힘’은 한편으로는 전체 비/반민주노동당 세력의 대표체 역할을 담당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개입을 넘어 사회주의 운동, 사회주의 당 건설로의 전망을 세우지 못함으로써 가장 활력이 넘치는 시기에는 사회주의 세력으로부터 – 그들이 전적으로 옳았다는 의미에서가 아니지만 – 경계와 비판의 대상이었으며 뒤늦게 당 건설을 주장하고 나섰을 때는 그를 추동할 수 있는 정치적 명확성이나 물적 토대 모두에서 한계가 노출되었다. 굳이 말하자면 ‘구노동자의힘’이 가졌던 나름의 장점은 정작 당 건설을 제기하는 시기에는 거꾸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구노동자의힘’은 객관적으로 두 가지 역사성을 지니고 있었다. 하나는 자신의 운동과 조직이 국제사회주의 운동과 투쟁의 어떤 역사적 전통 위에 서 있는가에 대해 명시적이고 분명하게 객관화 한 바가 없다. ‘중도주의’라는 비판에 대해서, 그 비판이 맞든 틀리든, 사실상 침묵했다. 그런 주장에 대해 응대하거나 답변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면도 분명 있지만, 그보다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립된 논거가 내적으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조직의 출발 자체, 즉 조직화 과정이 정치적 통일성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 정확하게는 정치적 통일성 자체가 매우 느슨하거나 미약했으며 ‘잠정적’인 채로만 남아있었다. 이미 물적으로 존재하는 운동을 모아내는 조직화 방식에 더 익숙했다. 그 연속 위에서 ‘위로부터의 당 건설’과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라는 변증법 대신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를 ‘아래로부터의 당 건설’과 동일시하는 경

향이 혼재했다. 당연히 조직 내적으로 정치사상적 스펙트럼이 넓게 걸쳐 있었다. 만약 정치사상적 동일성이 내적으로 좀 더 확실했다면 넓은 스펙트럼은 문제가 되기보다 오히려 사회주의 당 건설을 위한 공동의 자산이 될 수 있었으며, 실제 정치사상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존재하긴 했다. 그러나 방향과 구심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스펙트럼이 넓었던 까닭에 내적으로도 혼선이 있었으며, 나머지 사회주의 정파에게도 충분한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

미리 말하지만 '구노동자의힘'과 '구사노준'은 다른 조직이다. 따라서 이상에서 간략히 언급한 '구노동자의힘'에 대한 설명이 '구사노준'에 대한 것일 수는 없다. 어쨌든 '구사노준'이 성립되고 나서야 사회주의 세력 사이에 사회주의 당 건설 문제가 비로소 수면 위로 등장한 것은 사실이며, 이점에서 '구노동자의힘'은 순기능, 즉 긍정적 역할을 했다. 한 가지 사실을 말하자면 '구노동자의힘'이 '구사노준'으로 전환하면서 최종적으로 '구사노준'에 합류한 숫자는 '구노동자의힘'의 대략 삼분의 이 정도에 그쳤다. 그렇게 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핵심적으로는 당 건설을 둘러싸고 이견 때문이었다. 단지 그 과정이 사회적으로 쟁점화되지 않은 채 개별적 행위로 그쳤기 때문에 별 다른 소리가 없었던 것일 뿐 '구노동자의힘'도 당 건설 노선을 둘러싸고 내적으로는 이미 거듭되는 재편을 거쳐왔다. 이러한 문제가에도 불구하고 '구노동자의힘'이 '사노준'을 거쳐 '사노위'를 결성하기까지 주요 역할을 한 것은 객관적으로 분명한 사실이다.

현장파와 사회주의 세력

'구노동자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 '구사노준'조차도 내외에 걸쳐 울산 '민투위'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민투위'(문제)는 사회주의 세력 사이에서 일종의 '뜨거운 감자'였다. 그런데 이를 뒤집어 보면, '민투위' 문제의 본질은 실은(여기서 '민투위'에 대한 평가는 별개다. '민투위'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 확인해 둔다) 사회주의 세력 자신의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어떤 사회주의 정파(물론 '구노동자의힘'을 가장 먼저 거론해야 하지만)도, 심지어 사회주의 정파 전체로도 '민투위'를 어쩌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물론 사회주의 세력이 어쩌지 못한 것은 단지 '민투위'만이 아니다. 이른바 '현장조직' 또는 '현장/좌파활동가'에 대한 사회주의 정파의 영향력은 정치적 수준에서는 매우 미약했다. '민투위' 문제는 그런 실상을 가리키는 정점이자 상징이었다. 이 점은 오늘 현재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 사회주의 세력은 자신들이 가장 먼저 조직하고 나아가 사회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당 건설의 주체로 세워냈어야 할 '현장조직' 또는 '현장/좌파활동가'과 정치적으로 결합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개량주의 세력과 그들 정치가 민주노조운동과 노동자계급 투쟁에 넓게 퍼지게 된 것이나, 바로 그 이면으로서 사회주의 운동이 성장하지 못한 결정적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이 제도화, 관료화되고 노동자계급 투쟁이 조합주의에 갇히게 된 것은 필연적이지 않다. 필연적이지 않다는 것은 반드시 지금과 같아야 – 지금보다 나을 수도, 지금보다 못할 수도 있지만 – 할 법칙적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노동조합과 노동자계급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처하게 되는 2중성과 관련해

서도 그 2중성이란 것이 산술적 반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에서, 즉 각각 중 어느 측면을 보다 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가능성이 모두 경향적,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할 때, 그 중 어느 한 측면이 현실화되는 것은 구체적 맥락과 과정을 통해서이다. 그랬을 때 한국의 역사적 현실에서 민주노조운동과 노동자계급 투쟁의 현실이 현재와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된 책임은 일단 명백히 사회주의 세력에게 있다.

객관적으로 한국의 민주노조운동과 노동자계급 투쟁은 적어도 87년 이후 10년 동안은 부분적으로는 문제가 없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투성, 독자성, 계급성을 훨씬 더 강하게 표출했다. 이 시기에 비하면 그 뒤의 과정은 분명 문제가 더 많이 드러난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더라도 그 때에도 87년 이후의 여진이 급격하게, 일시에 사라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긴 시간 동안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서서히 잠식당했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 세력에게 기회는 계속해서 주어져왔다. 그럼에도 사회주의 세력은 주어진 기회를 살리는 데, 노동자계급을 조직하는 데 실패를 거듭했을 뿐이다.

그 실패는 단지 조직화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사회주의 세력 내부를 정치화, 급진화시키는 데 있어서도 별다른 진전을 이루어 내지 못했다. 그 기간 동안 사회주의 세력은 너나 할 것 없이 실천에서는 전투적 조합주의 정치 이상을 벗어나지 못했다. 객관적 정세는 이미 사회주의 정치의 전면화와 대중화를 요구하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대중을 핑계로 스스로 수세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사회주의 세력은 개량주의 세력에 맞선 혹은 그들을 대체할 수 있는 정치력, 지도력으로 성장하려는 의지와 태세를 갖추지 못했으며 개량주의 세력에 대한 '비판/반대' 세력에 머물렀다.

'현장조직' 또는 '현장/좌파활동가'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경험적/친소적/개별적 관계를 갖는 것을 넘어 정치적 관계를 맺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 아래서 사회주의 세력들 사이에서 '한정된 자원'을 놓고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려는 다툼이 벌어짐으로써 오히려 선진노동자를 혼란에 빠뜨리고 그들로부터 정치적 실망과 원망을 듣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한편 87년 노동자대투쟁과 전노협 시기를 거치면서 두텁게 형성된 선진노동자 층은 10년도 훨씬 넘는 긴 시간 동안 조합원대중들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들은 반복되는 해고와 구속, 징역 생활을 견디어 내면서 민주노조운동의 발전과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과 기여를 했다. 그들 선진노동자 층은 이른바 '현장파', '중앙파', '국민파'로 정파적으로 분화하여 한편으로는 서로 경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조합주의를 넘어 노동자계급 독자의 정치세력화를 이루고자 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창당을 계기로 '중앙파', '국민파'에 속한 활동가들은 진보정당(개량주의) 노선으로 흡수되었으며, 그 연장 위에서 점차 공식 노조 체계 내에서의 노조 관료로 자리 잡어 갔다. '현장파'에 속한 활동가들은 비록 진보정당과는 거리를 두었지만 그렇다고 사회주의 세력과도 결합하지 않았다.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든 '현장파' 활동가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활력을 잃고 끝내는 노조 체계 내의 좌파 관료에 머물고 말았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들어가서 보아야 할 것은 '현장파'에 속한 활동가들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다. 앞에서 우리는 선진 활동가들이 사회주의 세

력의 주체로 성장하지 못한 일차적 원인과 책임이 사회주의 세력(정파)에게 있다는 것을 이미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현장파' 활동가들이 드러낸 문제와 한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특히 대공장 활동가들의 경우는 더욱 정도가 심했지만, 노조가 갖는 물적 토대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했다. 그들은 어느 순간 노조가 갖는 물적 토대를 자신들의 권력화(노조 집행부 장악)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자산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노조 집행부 장악(진출)이 계급투쟁을 진전시키기 위한 경로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측면은 약화되고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노조 안에서의 입지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을 우선하다보니 자신들의 태도와 행위가 때로는 계급투쟁을 가로막는 것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들이 진보정당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주요한 이유의 하나도 노조 안에서의 활동을 더 중시했던 때문이기도 하다. 그들에게 사회주의 세력은 자신들의 활동을 엄호해주거나 지지하는 '외부적 힘' 이상이 아니었다. 개량주의 세력이 그들에 대한 비판을 진작 거둔 상황에서 사회주의 세력이 자신들을 비판하거나 자신들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 거북해 하거나 부담감을 표했으며 심지어 일부는 현실을 외면했다. 물론 이러한 평가를 모든 활동가들에게 일률적용하거나 일반화하는 것은 분명 무리가 있다. 그러나 일부 그렇지 않은 활동가들조차 그 같은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했으며, 그들의 힘으로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사실이, 현실이 이러한데도 사회주의 세력은 '좌파/현장활동가'들에게 단호한 정치적 입장을 취하지 못했다. 사회주의 세력은 노동자계급 전체

(자체)를 향한 정치활동을 펼칠 물적, 인적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 때문에 딜레마에 빠졌다. 사회주의 세력들 또한 '좌파/현장활동가'들의 자장 안에 점차 갇히게 되었다. 그렇다보니 자신들과 좀 더 가까운 층위가 처한 상태와 조건에 맞춰 논리를 제공하는 이상을 넘어서지 못했다. 그 결과 태도와 논리에서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고 때로는 종파적 모습마저 노출시키고 말았다. 사회주의 세력 모두 그들에게 정치적, 조직적 지도력을 획득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결과다.

3. 사노위 시도 전후 과정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원내 10석을 차지하는 성과를 올리게 된다. 비록 탄핵정국과 비례대표제에 힘입은 것이지만 제도정치권 진입에 일단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이다. 이로부터 크게 두 가지 변화가 발생했다.

민주노동당 효과

하나는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그리고 민주노총 출범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대중적, 정치적 과제였던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가 외견상, 형식상으로 모습을 갖추게 됨으로써 이제 노동조합 활동가들에게 공식 노조라는 장 외에 '제도 정당'이라는 또 하나의 장이 그들의 활동 공

간(무대)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좌파/현장활동가'들이다. '중앙파'와 '국민파'에 속한 활동가들은 이른바 양날개론에 입각해 정치투쟁은 정당을 중심으로, 경제투쟁은 노조를 중심으로 펼쳐나가면 된다는 설정이 가능해짐으로써 내용(본질)적으로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탈정치화', '탈계급화'의 길로 접어들었지만, 어쨌든 형식(현상)적으로는 이제 노동조합을 통한 투쟁만이 아닌 정당을 통한 정치활동으로까지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 활동가는 인식과 실천 사이에 그 어떤 모순도 갭도 느낄 필요가 없었으며 그 때문에 빠르게 '정치화'(?) 되어 갔다.

반면 '좌파/현장활동가'들은 사정이 달랐다. 그들은 오히려 정치적 공황 상태를 맞이했다. 그들은 민주노동당 바깥에 있었던 까닭에 민주노총의 정치방침과 적지 않게 부딪쳐야 했다. 그러나 그들의 대응은 불가피하게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당이 없는 상태와 조건에서는 어쩌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신들과 그 동안 관계를 맺어왔던 사회주의 세력은 아직 독자적인 당 건설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태세도, 능력도 갖추고 있지 않았다. 이들이 관계 맺던 사회주의 세력은 여전히 각개로 흩어져 있는 '후발, 신생, 소정파'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이었다. 그런 조건 아래에서 '좌파/현장활동가'들은 현장조직에 더욱 매달리게 된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현장조직 또한 이미 공식 노조 내의 하나의 체계 정도로 그 역할과 기능이 후퇴한 상태였다. 그들은 그럴수록 더욱 노조 집행부 장악에 애착을 갖게 되고 그것을 모든 활동의 중심, 초점으로 삼게 된다. 그들은 '중앙파'나 '국민파' 활동가들과는 또 다른 방향에서 '탈정치화', '탈계급화' 되기 시작했으며 자신의 인식과 실천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측면에서는 '중앙파'나 '국민파' 활동가들보다 더 '비정치

화'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또 하나는 당연히 사회주의 세력이 부딪친 문제였다. 2004년 총선 이전만 하더라도 민주노동당은, 비록 민주노총의 조직 결정에 따라 창당하고 민주노총이 정치방침으로 일방적, 배타적 지지를 하기는 했지만, 아직 민주노총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지 못했으며, 특히 활동가들은 여전히 3파로 분립되어 대공장 노조와 상급단체에서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의 존재가 사회주의 세력에게 결정적인 위협이 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2004년 총선 이후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2004년 총선을 계기로 민주노동당은 이제 민주노총과 더불어 명실상부하게 조직노동자의 대표체로 등장했으며 현실 정치에서 발언권을 획득함으로써 민주노총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의존도보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의존도가 더 높아지게 되었다.

이 때문에 '좌파/현장활동가'은 정치적으로 위축되어 갔고 그 여파는 사회주의 세력에게로 그대로 이어졌다. 가뜩이나 '후발, 신생, 소정파' 수준에 머물러 있던 사회주의 세력은 이제 민주노동당에 대한 비판/반대 세력을 넘어 자신의 정치를 '온/정 테제'로 제출하지 않고는 더는 존재 의미를 유지,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된다. 즉 '비판의 무기'를 넘어 '무기의 비판'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않고는 안 되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당 건설 논의

그 일차적 대응은 '구노동자의힘'에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 내부에서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논의가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것이다. '구노동자의힘'은 2002년 '전국활동가정치조직' 건설과 '대선공투본'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나게 된다. 이 두 정치적 행위에 이른바 '혁명적 사회주의' 세력과는 같이 하지 않았다. 그랬다가 2004년 이후 정확히는 2006년에 '구노동자의힘'은 한편으로는 당 건설로의 조직 전환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함께 할 세력들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된다. 그 일환으로 당시 '사회당, 평등연대, 다함께, 미래연대, 당건투'를 초청해 1차례 논의를 가졌지만 이 논의가 더 이상 지속, 진전되지는 못했다.

그 뒤 2007년 들어 사회주의 세력 사이에서 다시 당 건설 문제가 보다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마침 민주노동당 분당이 가시화되는 시기를 전후로 하여 2008년 초에 '구사노련'이 결성되었다. 이어서 '구사노련'이 결성되기 전부터 공공연하게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주창했던 '구노동자의힘'은 조직을 해산하고 '구사노준'을 출범시켰으며, '구평등연대'가 민주노동당에서 철수하였다. 나아가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이 도래하면서 당 건설 논의를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알다시피 당 건설 논의는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오히려 난항의 연속이었다. 2010년 5월 '사노위'가 출범하기까지 각 세력이 보인 태도는 다양했다. 비록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논의를 통해 밝혀지지 않은 한계가 있지만 최소한을 소개하면 이렇다.

다함께는, 앞에서 말한 〈마르크스21〉을 통해서도 밝히고 있듯이, 당시

에도 '공동전선'적 성격의 당을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물론 지금까지도 자신의 노선에 따라서라도 직접 나서서 대외적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거나 추진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보다는 오히려 '진보대통합' 논의에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회주의 세력 독자의 당 건설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노신은 대체적으로 당 건설 시기상조론을 들고 나왔다. 당 건설을 함께할 선진노동자 층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현재도 이런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노정협은 '전위정당'/'프롤레타리아독재 인정'을 선결 조건으로 말할 뿐 당시 당 건설 논의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최근에는 어떤지 정확한 입장 표명이 없어 알지 못한다. 사회진보연대는 당 운동 자체에 비판적이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지금도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보지만 최근 '진보대통합' 논의에 참여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알 것 같다. 사회당은 당시의 조건에서 자신들이 나서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임은 물론 사회주의 세력의 선 결집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식 제기를 하기 전까지 내부 논의를 할 수 없다는 정도의 태도를 보였다. 그 뒤 사회당은 이미 내부적 변화를 겪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진보정당 흐름과 함께 가고 있다. 해방연대는 '구노동자의힘'과 '구사노준' 모두를 향해 '민투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했으며, 직접적 당 건설에 착수하기에 앞서 사회주의 세력 사이에서 공동의 강령 토론과 공동의 실천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해방연대는 '구사노련'과도 공방을 주고받았지만 그 뒤 자체 활동에 방점을 찍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주장에 따라 '사회주의 강령을 토론하자'를 중심으로 나름으로는 사회주의 당 건설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구사노련’과 ‘국가보안법’

여기서 당 건설 논의가 진전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두 가지 사안(과정)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만약 이 계기들이 없었다면 ‘구노동자의힘’과 이어서 ‘구사노준’이 제안, 제기한 당 건설 문제가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며, 그 연속에서 ‘사노위’ 결성도 어쩌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나는 ‘사노련’ 결성이다. ‘사노련’은 ‘신생, 후발, 소정파’ 상태에 머물러 있던 써클이 한편으로는 사상 통합을 이루기 위해 오랜 공동학습 기간을 거치는 시도와 노력을 보여주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보다 그러한 노력과 시도가 단순한 써클 통합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를 넘어 스스로 당 건설 주체로 서기 위한 분명한 목표와 지향을 갖추는 진전을 보여주었다. 이 점에서 나머지 써클들과 차이가 있으며 당 건설 논의를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여건과 분위기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구노동자의힘’이 조직의 활력이 후퇴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당 건설 운동을 들고 나온데 비해, ‘사노련’(결성)은 써클운동을 당 건설 운동으로 전환시키려는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는 일환으로 등장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차이가 있다. 바로 이 점이 ‘사노련’이 단순히 ‘사노준’의 제안, 제기에 반사적, 수동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능동적, 적극적으로 당 건설 논의에서 분명한 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동력이 되었다. 특히 이 점은 ‘사노위’ 결성을 눈앞에 두고 ‘사노위 이탈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진가를 더욱 발휘했다. 즉 ‘사노련’(결성)이 그저 써클연합체에 머물렀

다면 '사노련' 분화와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랬다면 '사노위' 결성 자체도 당연히 없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사노위 이탈파'는 잔류 '사노위'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당 건설 노선의 차이를 노정했다. '사노위 이탈파'는 그 뒤 '사노위' 시도가 잘못됐다고 밝힘으로써, 또한 '써클 사이의 통합을 통한 당 건설'을 다시 하지 않겠다고 말함으로써 '사노위'를 단순히 '써클 사이의 통합'에 의한 당 건설 노선으로밖에 이해하고 있지 않았다는 자신들의 한계를 스스로 폭로하였다.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 세력의 의지와 무관하게 터져 나온 '사노련 국가보안법' 사건이 끼친 영향을 들 수 있다. '사노련 사건'은 당 건설과 관련하여 '사회주의 전면화, 대중화'를 위한 기폭제 역할을 했다. 물론 '사노련 사건'이 없었다고 해도 어떤 수준에서든 '사회주의 전면화, 대중화'를 내거는 것은 가능했겠지만 '사노련 사건'으로 인해 그 시기가 앞당겨진 것은 물론 그 정도와 강도에 있어서도 영향을 끼쳤다. '사노련 사건'은 한편으로는 그전까지 막연하게 가정했던 국가보안법에 대한 대처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자료/참고'를 제공해주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사회주의 세력이 어떤 입장과 태도가 갖고 있는가를 대중들에게 분명히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사노련 사건'은 사회주의 세력에게 '국가보안법 때문에'가 아니라 '국가보안법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당 건설 운동을 위한 새로운 지평과 전망을 열어야 한다는 과제를 던져 주었다.

어쨌든 2006년 시작된 당 건설 논의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최종적으로 '구사노준', '구사노련' 중 일부, '구노투련'과 여기에 동의하는 개별 활동가들이 참가하는 '사노위' 결성으로 일단락됐다.

사회주의 바깥과의 쟁점

이제 '사노위'가 결성되기까지 당 건설 노선을 둘러싸고 사회주의 세력들 사이에서 형성된 쟁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당 건설 노선을 둘러싼 쟁점은 한편으로는 세력(정파)들 사이에서 형성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의 세력(정파) 내부에도 걸쳐 있었고 나아가 사회주의 정파 외부와도 일부는 연결/연동되어 형성되었다.

쟁점을 바로 말하기에 앞서 그 이전에 노동자계급 내에서 노동자계급 정치세력화와 관련하여 가장 크게 형성되어 있는 쟁점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사회주의 당 건설 운동 그 자체를 부정하는 흐름을 말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노동자계급 속에서 사회주의 세력이 그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부딪치고 있는 최대의 장벽이다. 사실 사회주의 세력들 사이에서도 겉으로는 이 점에 초연한 듯하지만 내심으로는 당연히 이 점을 극복하지 않고는 사회주의 세력이 유력한 정치세력으로 발돋움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사회주의 세력 사이에서도 부딪침이 일고 있다.

현실에서 사회주의 당 건설에 최대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진보정당 세력이다. 진보정당 세력도, 최근 민주노동당이 강령을 개정했지만, 명시적으로 그리고 처음부터 사회주의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외견상 단지 사회주의에 이르는 '의회주의적 길'(평화적 길)을 채택한 것으로 자신들을 포장했다. 물론 그 중 민족주의 세력은 '의회주의적 길' 외에도 남한에서의 민주자주정부를 먼저 수립한 이후에 이어서 한반도 전

역에 걸쳐 반제 통일정권을 형성하고자 한다는 점을 더 추가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지도부가 아니라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평당원에게 사회주의 세력이 아직은 그 어떤 지도력과 권위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 있다. 진보정당의 평당원 중 대략 20% 내외는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고 말하고 있다. 확실히 그들 20% 정도는 스스로는 적어도 반자본주의자들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 즉 조직이 진보정당 밖에는 없다는 문제가 있다. 결국 당 건설의 최대 장애물은 진보정당 자체가 아니라, 사회주의 세력이 그들을 조직할 수 있는 '명료한 정치'와 '독자적 조직(당)'과 '구체적 전술'을 제공/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임에도 그 점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 탓으로 치부함으로써 그들을 진보정당 품으로 내 고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회주의 세력 사이에 당 건설 노선을 둘러싼 하나의 쟁점이 형성될 수 있다. 사회주의 세력이 진보정당 바깥에서 독자적인 당 건설을 바로 시도하기보다 진보정당 안에 들어가 그 속에서 '좌파 블록'을 형성하여 활동하면서 그 안에서 지도력/주도권을 장악하거나 아니면 적절한 시점 또는 결정적 시기에 그 속의 사회주의자들을 결집하여 분리하는 것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없지 않았다. '구평등연대'는 실제 그런 정치 과정을 겪었으며, '구노동자의힘'에서도 같은 주장이 있었고, 다함께는 이른바 '입당 정책'(엔트리즘)이라는 독자적 길을 걷고 있다.

다음으로 당 운동 그 자체 또는 특별히 사회주의 당 건설을 부정적으로 보는 세력이다. 이들은 비록 진보정당 세력보다는 세력이 약하고 덜 조직화되어 있지만 역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넓게 퍼져 있다. 그들

은 진보정당 운동을 비판적/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사회주의 당 건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으로 대하고 있다. 그들 중 일부는 당 형식(운동) 자체가 수직적/관료적 체계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지난 역사를 평가하고 있다.

또 다른 맥락에서 그들 중 일부는 당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현실에서 논의되고 있거나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주의 정파가 추진하고 있는 당 건설에 대해서는 회의적, 부정적 시선을 던지고 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현실적으로 입장과 내용을 떠나 사회주의 정파가 정말 당 건설을 해낼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다. 하나의 정파에 의해서든 아니면 정파 통합을 통해서든 실질적으로 당 건설을 할 수 있는 태세나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보다 본질적으로 노동자계급 중심성 또는 당의 역할에 대해 사회주의 정파가 협소한 나아가 잘못된 이론적 기반에 근거함으로써 '현장/노동자' 주의에 빠져 있으며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를 오히려 자본 관계에 속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고 여성, 생태(주의) 운동과의 연대와 연계를 적극적으로 조직하려 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덧붙여 현실 제도(부르주아) 정치 특히 선거 대응에서 소극적, 비개입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당 형식(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정파 사이에 이견이 없지만 위 후자와 관련해서는 사회주의 세력 사이에서도 쟁점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노위' 결성을 위한 정치원칙을 정할 때부터 시작해서 '사노위' 결성 후 내부 강령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점은 계속해서 쟁점으로 남았다. 비교적 '구사노준'이 그와 같은 비판이나 문

제제기를 수용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사회주의 정파들은 그러한 문제제기나 비판에 대체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취하거나 개의치 않는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이 점이 당 건설과 관련해서 사회주의 세력에게 던지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어쨌든 이러한 문제제기나 비판을 하는 사람들 중 적어도 반자본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부위와는 어떤 형태로든 소통이나 연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통과 연대를 실질화, 현실화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찾으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그를 위해서라도 사회주의 세력 자신이 먼저 능동적, 적극적으로 그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옳고 그름을 논하기에 앞서 사안별 대응 수준을 넘어 강령적 차원에서든 아니면 총론적 입장에서든 사회주의 세력 스스로 자기 정립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진보정당 세력이 그들 의제를 선점하여 자기 정치화하려는 점 때문에라도 오히려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

그 밖에도 어쩌면 당 건설을 논하거나 실제로 추진하는 데 있어 결정적으로 장벽이 되는 것은 사회주의 세력 전체의 역량이 워낙 취약하다는 바로 그 사실에 있다. 선진노동자 층이 처해 있는 현실까지를 감안할 때 어떤 면에서는 당 건설에 나선다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 무리도 아니다. 사회주의 정파 각자가 내세우는 노선과 입장의 차이 때문에 당 건설이 더딘 것도 사실이지만 거기에 더해 역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현실 앞에서 노선과 입장의 차이가 오히려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는 측면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사노위' 결성을 시도하는 상황에서조차 그들이 선뜻 나서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도 설령 '사노위'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다고 해도 그 역할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측면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해 '사노위'가 어느 정도 성공할 것을 가정한다해도 그 때에도 작더라도 독자 조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소극적 발상이 잠재적으로 깔려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도 언젠가 계급투쟁이 활발히 일어난다면 그 때가서 조직하면 된다는 논리적/심정적 가정 아래 위안(?)을 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치 로또 당첨을 기다리듯이.

지금 현재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지만 '사노위' 결성을 시도할 즈음에도 위와 같은 3중고가 가로 놓여 있었다. '사노위' 결성을 하고자 했던 것도 바로 이 같은 현실을 모르거나 애써 외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같은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 돌파하고자 했던 때문이다. 이제 '사노위'를 결성하기까지 사회주의 세력 내부에서 형성된 쟁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사회주의 세력 사이의 쟁점

첫 번째로 '사노위'를 결성하고자 했던 당시에 가장 일차적으로 부딪친 쟁점은 '선 당 건설인가', 아니면 '선 토대구축인가'였다. 이 문제는 그 자체가 드러내 주고 있는 문제만이 아니라 당(역할과 임무)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즉 어떤 당을 건설하고자 하는가와 나아가 정세에 대한 인식과 한국 계급투쟁의 역사와 지형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리고 당 강령을 어떻게 건설하고자 하는가를 그 속에 모두 포함(포괄)하고 있는 쟁

점이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드러내 주고 있는 수준에서의 핵심적 이견은 크게 두 가지로 드러났다. 하나는 당 건설이라는 기치를 먼저 분명히 세우지 않고는 토대구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다.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며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강력한 의문이 있었던 것이다. 나아가 87년 이후 그 때까지의 과정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큰 틀에서 토대구축을 해 온 것이며 바로 그 결과(결론)가 오히려 당 건설 운동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는 제기였다. 그렇지 않고 또 다시 토대구축을 선행하고자 하는 것은 기껏해야 써클운동을 더 유지, 지속하는 것 외에 다른 무엇일 수 없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당 건설을 마냥 뒤로 미루는 결과만을 가져올 뿐이라는 주장이었다. 또한 토대구축 자체가 대단히 주관적인 것이어서 정파나 각자에 따라 그 기준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고, 더 중요하게는 당 건설 결집 세력이 당장에는 소수이더라도 87년 이후 형성된 대중투쟁의 경험과 기억이 아직 완전히 무화되지 않은 것 자체를 광의의 개념에서 토대구축으로 보아야 하며, 더구나 객관적 정세를 볼 때 계급투쟁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태세를 갖추는 것이 선결 문제라고 보았던 것이다. 또 하나는 '선 당 건설'에 동의하게 되면 그에 따라 자연히 당 건설 논의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당 건설 논의에 결합하는 순간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당 건설 일정 논의를 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었다. 즉 막연하게 그저 일반적/원칙적 수준에서 당 건설을 말하는 것은 사실 기존 관성을 되풀이 하는 것에 불과하며 따라서 기존 자기 조직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당 건설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의 현실은 대부분의 조직이 그럴 수 있는 사전 정치 과정을 내부적으로 거의 밟지 않았다는 문

제를 안고 있었다. 그런 조건 아래서 기존 자기 조직 논리를 변경해야 하는 부담을 지지 않으려고 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선 토대구축' 주장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

'구노동자의힘'이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기치를 내세우고 나아가 조직 해산을 단행하면서 '구사노준'을 출범시키는 모태가 되었던 것도 사실은 몇 년 동안 내부에서 그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을 거쳤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그 속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노동자의힘'이라는 조직 형식으로는 더 이상 조직 강화나 확대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간다면 계속해서 조직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에 비해 나머지 조직들은 훨씬 더 작은 조직이었던 까닭에 '구노동자의힘'이 부딪쳤던 문제에도 아직 이르지 못한 것을 오히려 방패막이로 삼았던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들이 아무리 '구노동자의힘'을 향해 갖가지 비판을 했지만 '구노동자의힘' 운동 위에서 이루어진 비판이라는 한계를 숨길 수는 없었다.

'구사노련'이 당 건설 논의에 '구노동자의힘'과는 또 다른 맥락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것도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구사노련' 결성 자체가 이미 처음부터 당 건설을 직접적으로 예비하는 조직으로 출범했기 때문이다. 비록 '사노위' 결성을 앞둔 최종 시점에서 '이탈파' 문제가 발생했긴 했지만, 그 점은 별도의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다. '구노투련'이 마지막에 결단을 내렸던 것도, 개별 활동가들이 '사노위'에 참여했던 것도 결국 '선 당 건설'이 아니고는 사회주의 운동을 진전시키는 것도 계급투쟁에 대한 사회주의 세력의 개입력을 높이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이 점은 그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정당하다.

두 번째 쟁점은 몇 가지를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단박에 단일정당을 시도할 것인가 아니면 모종의 중간적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단일정당에 이를 것인가라는 점이었다.

앞서 짤막하게 언급했지만 다함께는 공동전선적 성격의 당을 추진한다면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비쳤다. 근거는 이러했다. 정파 사이의 노선과 강령이 다른 것도 문제지만 거기에 더해 이른바 조직형성과 조직활동 과정의 차이로 인해 이른바 '조직문화'에서의 이질감이 너무 커 한꺼번에 하나의 조직을 형성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판단은 하나의 당 건설 경로로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가 있었다. 사회주의 세력 안에서 다함께와 같이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와 의지를 갖고 있는 부위가 많지 않았다는 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다함께 역시 자신의 주장을 객관적, 공개적으로 밝히고 그에 따라 자신이 적극적인 제안자로 나서려는 의사와 의지를 크게 갖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다음으로 공동전선적 성격의 당이라는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하기 전에 다함께 자신을 제외하고는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세력은 많지 않았다. 또한 다함께 자신이 우려하고 있는 것들이 공동전선적 성격의 당을 통해 해소될 수 있으며 나아가 그를 통해 단일정당으로까지 상승하자는 것도 일종의 가정(가설)은 될지언정 가장 적합한 경로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점이다. 어쨌든 이 점은 그 정도에서 그치고 더 이상 논의가 이어지지 못했다.

다음으로 '해방연대'는 바로 직접적 당 건설을 향한 경로가 아닌 앞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전 단계로 사회주의 세력 사이에서 공동의 강령 토론과 공동의 실천(사업)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해방연대'는 '구사노준'을 향해서는 '민투위' 문제 해결할 것을 당 건설 논의를 같이 시작할 수 있는 필수전제라는 주문을 했으며 '구사노련'이 제출한 '공동토론회'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해방연대'가 제시한 입장도 당 건설의 경로로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해방연대'의 주장에 대해 '구사노준'도 '구사노련'도 동의하지 않았다. 물론 '구사노준'은 사실은 동의 여부를 말할 수 있는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었다. '구사노련'은 해방연대보다는 '구사노준'과 당 건설 논의를 하는 것이 더 유효하다는 판단을 갖고 있었으며 두 조직 사이에서 공방을 펼치는 과정을 거쳤지만 최종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구사노련'이 '해방연대'와는 달리 '구사노준'을 향해 중도주의라는 비판을 가한 당사자였음은 물론 '해방연대' 못지않게 '민투위' 문제를 제기했지만 '해방연대'가 아닌 '구사노준'과 함께 당 건설 논의를 했던 것은 당 건설 경로에서 '구사노준'과 더 일치했을 뿐만 아니라 쌍용자동차, 용산투쟁을 거치면서 실천적으로도 서로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었던 때문이다.

'사노위' 결성과 직접적으로 관련해서는 각자의 조직을 먼저 해산하고 단일조직으로 출발할 것인가 아니면 각자의 조직을 유지한 채 공동실천위원회의 위상에서 시작할 것인가가 쟁점이 되었다. '구사노준'은 전자를 '구사노련'은 후자를 주장했다. 전자의 입장은 과정에서 조직이 원 상태로 되돌아 갈 수 있는 가능성과 개연성을 최소화하고 통합의 기세를 높이자는 취지였으며, 후자의 입장은 아직 강령/조직/전술상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속에서 선 단일조직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논리였다. 이 점은 최종적으로 '구사노련'의 입장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실제 '사노위'

는 개별 가입을 원칙으로 삼았으며 조직 출범을 전후로 하여 형식에서는 사실상 단일조직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사노위'의 위상은 단일조직 이전 단계라는 의미에서 공동실천위원회라는 틀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가입원서' 문제를 둘러싸고 '공동실천위원회 단계'에서는 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던 것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세 번째로 '사노위' 결성을 시도할 시점에 어느 사회주의 세력(정파)도 자기 조직의 강령 또는 전체 노동자계급에게 제출하는 강령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대개는 정치원칙 정도를 갖고 있거나 강령적 내용을 가졌더라도 그것을 강령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대체적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가장 먼저 당 건설을 직접적으로 시도하려는 태세가 없었던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조직의 규모나 정치활동의 내용과 수준이 취약해 강령에 입각한 정치활동을 해야 할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했던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국가보안법도 강령을 정식화하는데 어느 정도는 부담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당을 건설하려면 어떤 정파라도 당 강령을 제출하고 논의를 붙이거나 아니면 공동의 당 강령 작성을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상식적으로 갖고 있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 어떤 정파도 자기 정파 독자에 의해서 당을 건설하겠다는 그러한 노선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생각은 노선에 대한 판단 이전에 역량 문제 때문에라도 불가피했다. 결론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조직 사이의 통합을 통한 당 건설을 불가피한 경로로 사실상 간주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발생하는 문제나 쟁점은 이런 것이다. 각자의 조직을 유지한 채

어떤 형태로든 먼저 강령 합의를 이룬 뒤 조직을 통합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조직 간 경계를 먼저 허물고 하나의 조직 형식(단일조직이든, 공동실천위원회든) 아래 모여서 강령을 공동으로 작성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인지다. 이 또한 원칙적, 일반적 차원에서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방식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구체적 조건에 대한 판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노위'는 후자적 방식을 따라 결성하였다.

4. '사노위' 운동 평가와 해산 과정

'사노위' 시도는 한국 사회주의 운동과 당 건설 운동에서 한편으로는 이미 역사가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앞서 말했다시피 현재도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사노위' 운동 평가는 아직 최종 형태로 제출하기에는 이르다. 그럼에도 '사노위' 운동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지금부터의 당 건설 운동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를 가늠/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 근거가 된다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하겠다.

'사노위' 운동의 객관적 의의

2000년대 전에 존재했던 한국에서의 사회주의 운동은 그 운동에 참여했던 주체가 주관적으로는 '혁명적 사회주의' 또는 '혁명적 맑스-레닌주

의'를 실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객관적/실천적으로는 '혁명적 민주주의' 내지 '혁명적 민족주의' 운동에 다름 아니었으며, 정치사상적 토대와 배경은 '스탈린주의'적 편향을 간직한 것이었다. 물론 그렇게 된 데에는 사회주의 세력들 자신의 문제도 있지만, 시대적 한계가 크게 작용을 했다. 바로 그 결과로 이전의 사회주의 세력 대부분이 그 후 운동에서 이탈했거나 오늘날 진보정당 흐름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변신함으로써 이미 계급운동 또는 사회주의 운동 건너편에 서게 되었다.

'사노위' 시도와 그 운동은 일반 대중이나 국가보안법의 관점에서 보면 1970년대 이후 명멸을 거듭했던 사회주의 운동과 구별하기 어렵고 그럴 필요도 없겠지만, 주체 내부의 정치사상적 차원에서 보면 '사노위'는 그들 운동과의 명백한 단절이자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와 함께 당시 사회주의 세력 사이의 당 건설 논의가 주로 '세력 또는 조직 사이의 단순 통합'에만 의존했던 것에 비해 '사노위'는 주체 사이에서의 투쟁을 통해 강령/조직/전술상의 통일을 이루고자 했던 점에서 결정적 차이를 보여주었다. 아직은 아니지만 한국에서의 사회주의 운동의 역사는 '사노위' 운동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와 같은 의미부여가 자기만족적인가 아니면 객관적 사실이 될 것인가는 그리 머지않아 드러날 것이다.

'사노위' 시도와 운동이 비록 '후발, 신생, 소정파'에 의해 주도되었고 그 속에서조차 사회주의 세력(정파) 모두를 아우르지 못한 한계가 있지만 세계적 차원에서 '혁명적 사회주의' 내지 '혁명적 맑스-레닌주의'를 잇는 세력이며, 한국 노동자계급 투쟁의 역사와 관련해서는 그 투쟁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될 때 가장 대중적 구호로 외쳐졌던 노동해방을 실질적

으로 구현하려는 세력이며, 자본가계급과 국가권력 그리고 무엇보다 노동자계급을 향해 공개적으로 사회주의 운동을 천명한 세력이고, 사회주의 세력 사이에서, 현 정세에서 가장 시급한 당 건설 운동을 주장하고 몸소 실천에 옮긴 세력이다.

'사노위' 운동이 시작됨으로써 이제 한국 사회주의 운동은 당 건설 운동을 기정사실화 되었으며, 무엇보다 자기 조직의 상태나 조건과 무관하게 당 건설 운동으로부터 자유로운 조직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고, 특히 그와 더불어 어떤 수준에서든 혁명 강령을 제출해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되었다. 지금 세계는 혁명의 시기다. 어떤 조직이든 이러한 정세에 맞춰 조직을 건설하거나 운영하지 않고는 유지하기 어려우며 유지해야 할 근거도 없다. 자기 조직이 아직 그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이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계급투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당 건설 노선이라는 측면에서 '사노위' 시도와 운동만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당시에 선택,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사노위' 실패는 노선을 잘못 설정한 것으로부터 주어진 불가피하며 예정된 실패일 수 없다. 그 당시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우리는 망설임 없이 같은 행위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사노위' 운동이 비록 조직 유지를 끝까지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패이고, '사노위' 전체를 보다 강력한 당 건설 추진체로 전환하지 못했다는 점이 실패이며, 이 둘 모두를 성사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서 실패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 이면에 정파 사이에 굳게 쳐져 있던 장벽을 흔들고

오직 정치사상적 노선과 정치활동에 대한 태도에 따라 각자의 길을 서로 선택했다는 사실이 있다. 또한 실패로 인해 당 건설 운동이 중단되기는커녕, 즉 '사노위'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사노위' 실패를 경험과 교훈 삼아 당 건설 운동과 경로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가 보다 명료해졌다. 만약 '사노위' 운동이 없었다면 결코 이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단지 조직이 유지되지 못한 사실만을 들어 위와 같은 성과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단순하고 단견적인 사고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일 뿐이다. 지금 '사노위' 운동에 참여했던 모든 주체에게는 스스로 선택한 길에 책임을 지는 것만이 남아 있다.

'사노위' 해산 선언의 능동성

이제 '가칭)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이 최종적으로 '사노위'의 정치적 해산을 주장하고 선언했던 이유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즉 바로 그러한 정치적 선택과 행위를 실천에 옮긴 근거에 대해 밝혀야 할 차례다.

먼저 '이후 가칭)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으로 결집한 주체들도 최종적으로 '사노위'의 정치적 해산을 선언하기까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먼저 말하고자 한다. 그렇다. 그건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우리 역시 '사노위' 해산이 가져올 정치적 파장에 대해 누구 못지않게 우려를 했으며 압박을 받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최종적으로 '사노위'의 정치적 해산을 선언했다. 그런 선택을 하게 된 '사노위' 내부의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1차보고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는 남는다.

첫째, 우리가 제출한 '1차보고서'는 우리의 관점과 입장에서 서술한 것이다. 따라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 사실 관계가 모두 맞는지의 문제가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객관성이란 사실 관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해 우리가 내린 정치적 결론이 과연 얼마만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느가 하는 점이다.

둘째, 설령 우리가 내린 정치적 결론이 설득력을 갖는다고 가정해도 그것이 '사노위' 해산을 선언해야 할 만큼의 문제였는가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확인하는 것이나, 그 문제에 대해 어느 것이 옳고 그르냐를 판명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필요하지만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고 옳고 그름이 가려진다고 해도 그것이 곧 반드시 해산으로 귀결되어야 하느냐는 별개로 판단 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문제가 있고 아무리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해도 굳이 해산이 아닌 다른 정치적 선택과 행위를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잔류 '사노위'가 그러듯이.

셋째, 일반적으로도 그렇지만 더구나 당 건설 문제와 관련된 것인 만큼 당연하게도 역사적, 정치적, 대중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 '해산'에 따른 정치적 파장을 올바른 의미에서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더 나아가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해산' 이후 당 건설 노선과 전망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비록 아무리 '해산' 선언이 설령 그 시점에서 정당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의미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거나 심지어 우리의 의도와 무관하게 우리의 결정이 당장의 당 건설 운동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배

제할 수 없다.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되기까지에는 몇 가지 과정이 존재한다. 그것들이 무엇이며 그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왔는가 역시 '1차보고서'에 실려 있다. 여기서는 이 글에 필요한 정도에서 그러나 '1차보고서'와는 또 다른 맥락 속에서 약간의 재확인을 하고자 한다.

우리가 '해산'을 선언하게 된 계기는 '사노위' 2차 총회 대응을 위한 '의견그룹'의 형성이었다. 그런대 '의견그룹'의 형성은 가입원서 문제를 둘러싼 '임시중앙위' 소집 요구가 무산된 것으로부터 비롯됐다. 그 전까지는 비록 불거진 문제가 없지 않았지만 아직은 해산과 관련된 그 어떤 직접적인 전제나 예측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랬던 것이, 임시중앙위 개최에 대해 누구의 입장과 주장이 옳은가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로, 임시중앙위가 아예 무산됨으로써 이제 '사노위'가 해산에 이를 수 있는 객관적 가능성이 비로소 열리게 되었다.

물론 임시중앙위가 개최되었다하더라도 '사노위'가 그 뒤에 유지, 지속되었으리란 보장은 없다. 바로 이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히려 다수파의 입장에서 임시중앙위 개최를 무산시킨 측면도 없지 않다고 본다. 또 다르게는 어쩌면 다수파의 입장에서도 임시중앙위를 무산시킨 결과로 설령 조직이 그 어떤 어려움, 즉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맞더라도 그 때 이미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각오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이 시점 이후로 '공동실천위원회'로서의 '사노위'의 위상은 사실상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사노위' 2차 총회는 이러한 위기를 해소시키거나 반대로 증폭시킬 수 있는 두 가능성을 모두 안고 있었다. 2차 총회를 앞두고 '의견그룹'은 '총회 단일안' 제출을 통해, 다수파는 '단일 지도부' 형성을 통해 그러한 위기 상황을 해소, 극복하고자 했다. 결과는 둘 다 실패했다. 2차 총회는 결국 단일안이 제출되지 못했고 단일 지도부도 형성되지 못했다. 이 과정과 결과를 놓고 특별히 어떤 입장에 더 많은 문제나 책임이 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각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바를 다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위기는 해소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위기가 바로 폭발하지도 않았다. 외견상 위기는 유예되었다. 그러나 이제 '공동실천위원회'로서의 '사노위' 위상은 거의 퇴색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시간상으로 조직이 지속될 수 있었던 마지막 강제는 남아 있었다. 그것은 바로 강령 문제가 아직 남아 있었던 것이다. 두 입장 모두 강령 토론도 하기 전에 조직을 무산시키는 것은 각자의 입장에서나 객관적으로나 명분이 없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긍정적 의미에서 마지막 가능성을 강령 토론에서 찾으려 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사노위'가 출범 때 설정하고 약속한 정치일정을 연장해서라도 조직을 좀 더 유지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둘 중 하나는 확보되어야 했다. 하나는 비록 강령상의 일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당 건설 추진위로 전환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만 했다. 그러나 이 점은 조직 내적으로는 이미 2차 총회 결과로 인해 사실상 힘들게 된 상태였다. 따라서 또 하나는 그 시점에서의 마지막 가능성은 강령상의 거리가 좁혀짐으로써 비록 당장 추진위로 전환할 수 있을 정도가 못 된다 해도 또 다른 해법을 모색할 수 있어야만 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강령상의 거리는 거의 좁혀지지 않았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거리를 좁히려는 노력과 시

도를 할 필요성 자체를 가질 이유와 여유가 양 쪽 모두에게 없었다. 오히려 강령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통해 차라리 '공동실천위원회'로서의 '사노위'를 정리하는 수순을 양 쪽 모두 준비했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표현이다.

이제 현실적으로 '사노위'가 유지될 가능성이 사실상 거의 희박한 상태에서 진짜 마지막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살릴 수 있으려면 3차 총회를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할 것인가를 놓고 일대 정치적 결단을 하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사노위' 2기 4차 중앙위원회는 이러한 마지막 기대를 철저히 짓밟는 결과를 결정했다. '사노위' 내부에 그 많은 쟁점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철저히 외면하고 모든 것을 오직 '표결'로 처리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사실 이러한 결정은 비록 단일조직인 상태에서도 쉽게 하기 어려운 것이다. 하물며 '공동실천위원회'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 정도를 각오했다면 상식적으로 그리고 너무도 당연하게 '사노위' 해산 일정을 밟아야 하는 것이 참으로 마땅한 것이다. 그것만이 '사노위' 운동이 내외적인 정당성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는 정치 행위였다.

어째서 그 마저도 이루어내지 못했을까? 바로 여기에 왜 우리가 '사노위' 정치적 해산을 주장하고 선언했던가가 집약해 있다. 사실 우리로서는 3차 총회를 앞두고 마지막 제안을 한 바 있다. 그것은 누구의 말마따나 노선과 전략을 '표결'로 처리할 수는 없다는 강력한 경고였다. 우리의 강력한 경고가 의미하는 정치적 맥락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실제로 '사노위'를 '공동으로', 바로 '사노위' 조직의 이름으로 해산을 선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누구의 입장과 내용이 올바르

나는 것과는 별개로 해산을 제기할 정도의 상황에 처했다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별도의 정치 영역이었기 때문이었다. 다수파는 이 점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면서도 외면했는지도 모른다. 어느 것이든 상관없다. 어느 것이든 결과에서 달라질 것은 없다.

또 하나는 다수파에 대한 정치폭로다. 다수파가 총회 준비를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다부파가 생각하는 당 건설 노선 때문이다. 다수파는 '사노위'를 통한 당 건설 노선이 의미하는 실제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계적, 자기편의적으로 받아들였다. 해산 선언은 이를 대중적으로 폭로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노위'를 통한 당 건설이라는 것과 '사노위' 유지를 통한 당 건설이라는 것은 반은 같은 말이지만 그 반이 의미가 있으려면 나머지 반, 즉 '사노위' 유지를 통해 당 건설에 이를 수 있는 동력과 근거가 새롭게 창출되었을 때이다. 만약 그 나머지 반을 창출하는데 – 그 이유와 책임이 어디에 있든 간에 – 실패했다면 '사노위'를 통한 당 건설은 중단되는 것이 마땅하고, '사노위' 운동을 객관화시킴으로써 또 다른 당 건설 노선이 들어설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열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노위'를 통한 당 건설 노선이 의미하는 본래의 맥락이다.

당 건설 노선에서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난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단지 '1차 보고서'에서 밝힌 것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을 당연히 포함하면서도, '사노위'의 정치적 해산을 선언했던 중요한 이유이다.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할 필요는 없다. 즉 처음부터 당 건설 노선이 달랐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노위'를 통한 당 건설 경로에 모두가 동의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사노위'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 건설 노선이란 단지 경로만을 세웠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다. 경로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해당 정세

속에서 설정하는 하나의 상대적이고 가설적인 것이다.

경로가 계속되려면 그 경로를 밀고 나갈 수 있는 정치적 근거가 경로 속에서 계속해서 확보되어야 한다. 정치적 근거를 확보하는 데 실패한 결정적 근거가 경로 자체 때문이라면 그것은 경로에 문제에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시 강조해서 말하지만 적어도 2006년 이후 '사노위' 경로를 대체할 수 있거나 더 나은 경로는 제출된 바도 시도된 바도 없다. 앞서 몇몇 정파의 입장을 간략히 언급을 했지만 그것들은 그저 그들의 입장에서 그랬다면 좋겠다는 하나의 의견이었을 뿐 그들 자신이 나서서 그를 관철, 실현하고자 하는, 즉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정치행위 자체가 없었다. 이 점은 그들이 져야할 몫이지 결코 우리가 그것까지 책임져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나아가 '사노위'가 실패하게 된 것이 경로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도 아니다. 결과론적 평가는 누구라도 할 수 있다.

다수파에게 남은 것은 오직 '사노위' 유지 그 자체였다. 이로 인해 '사노위'를 통한 당 건설이 갖는 본래의 취지와 맥락은 사라지고 '사노위' 유지냐, 아니냐라는 엉뚱한 쟁점이 불거지고 말았다. 특히 '의견그룹'을 함께 했던 '전북'과 '경기'의 동지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우리를 향해 '사노위'를 유지할 것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들은 3차 총회에서 2차 총회 때와는 달리 다수파와의 동거를 선택했다.

그들 역시 때로는 공공연하게 또 때로는 암묵적으로 다수파에게 문제가 있음을, 심지어 훨씬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들이 공동으로 내세운 논리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의견그룹'이 '사노위' 안에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렇게 하는 것이 당 건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닌 그 어떤 방안도 당 건설을 더 어렵게 하거나 심지어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의견그룹'만으로는 당 건설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거의 신념화, 이데올로기화했다. 동시에 '사노위'에서 '의견그룹'이 빠지면 그 역시 마찬가지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까지 애걸하고 협박했다.

물론 '전북'과 '경기'는 이 점에서는 일치했지만 그 둘은 완전히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실제로 다르다는 것은 3차 총회 이전에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경기'는 '의견그룹'이 빠진 '사노위'에는 그 어떤 정치적 전망도 없다는 것을 단지 말로서가 아니라, 3차 총회 이후 '사노위' 탈퇴를 단행함으로써 실천으로 증명했다. 반면 '전북'은 단지 우리를 붙잡기 위한 차원에서 그랬을 뿐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곧 드러났다. '전북'은 오히려 '의견그룹'만으로 당 건설은 불가능하다는 확신을 내면화 했다. 당 건설 노선은 그들에게는 부차적인 것이었다. 아니 오직 자신들의 주관적, 경험적 판단만이 노선의 전부였다.

그렇지만 '경기'가 우리와 같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들과 우리 사이에 여전히 차이가 있다. 그것은 단지 작은 전술상에서의 차이가 아니라 당 건설 노선에서의 차이였다. '전북'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당 건설 노선에서의 차이 역시 경기와의 차이보다 더 크다는 것도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들은 '사노위'를 하지 않았다면 결코 밝혀지지도 객관화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오직 '의견그룹'의 실천이 있었기에, '사노위 정치적 해산 선언'이 있었기에 드러난 것이다.

재편

사회주의 세력(정파) 자신의 연속적인 재편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 재편을 위해 때로는 통합이 필요하다. 아직은 그 어떤 세력(정파)도 자기 혼자의 힘으로 재편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통합된 상태를 유지/강화하면서 재편을 이룬다면 최선이겠지만 통합된 상태 그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 재편을 미룬다면 그 순간 그 조직은 '동아리' 내지 '패거리'로 전락하게 된다.

도대체 재편이 무엇인가? 재편은 어디까지나 당 건설을 위해 거쳐 가는 과정이자 수단이다. 재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물론 설령 당이 건설된다 해도 그 속에서의 크고 작은 재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금 말하는 재편이란 그런 일상적 의미에서의 재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당 건설에 도달하기까지 목적의식적으로 재편을 핵심적 과정과 경로로 삼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재편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 자신도 재편의 주체이자 동시에 대상이다. 누구라도 그래야 한다. 스스로 먼저 재편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즉 당 건설 주체로 자임해야 한다. 그것이 곧 자신이 재편의 대상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가장 강력한 실천이다. '경기'도 이 점에서는, 그들이 의식하든 그렇지 못하든, 우리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재편을 하는 길인가? 이는 곧 당 건설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같은 문제이다. 이것은 뒤 5장의 주제로 거기에서 다루고자 한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사노위'의 정치적 해산을 선언한 것은 '사노위'를

유지, 지속 하는 것을 통해서는 재편을 이루기가 더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설령 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상정할 수 있을지라도 그를 현실화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더 나쁜 정치적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당 건설 투쟁이 소모적으로 흐를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강령상의 차이는 그것을 말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근거이기는 하지만 강령상의 차이 말고도 강령과 '조직/정치활동'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데에 있어서의 인식 차이가 크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사노위' 1년 과정을 통해 드러난 조직, 정치활동에서의 문제 역시 우리가 해산을 선언하게 된 이유이다. 이 두 가지 사안과 관련해서는 본 책에서 별도의 주제로 다루고 있다.

5. 당 건설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와 잔류 '사노위' 사이의 차이는 바로 '당 건설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 즉 당 건설 노선에서의 차이가 둘 사이에 놓여 있는 차이의 핵심이다. 당 건설 노선은 단지 경로가 특정 시점에서 일치했다고 해서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경로는 당 건설 노선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우리와 잔류 '사노위' 사이에는 다른 사회주의 세력(정파)들과 비교해서 한 가지 여전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노위' 출범의 대전제였던 '직접적 당 건설'

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노위' 실패로 인해 당 건설 운동이 어떤 형태로든 후퇴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그것은 우리로서도 바라는 바가 아니다. 우리가 '사노위' 운동을 실패로 규정하고 그에 근거해 해산할 것을 주장했던 이유도 당 건설 투쟁을 더욱 제대로 하기 위한 것이었지 그 밖의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었다.

당 건설은 그냥 하면 좋은 그런 문제가 아니다. 또는 언젠가는 해야 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나아가 자신이나 자기 조직이 당 건설을 시도할 수 있을 때에나 가서 생각할 수 있는 그 같은 것도 아니다. 즉 당 건설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가서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당 건설은 결코 정세와 동떨어져 진공 속에서, 허공을 향해 이루어질 수 없다. 모든 당 건설 투쟁은 해당 시기, 시점에서의 구체적 정세에 대한 분석과 판단에 근거해야 한다. 물론 구체적 방안은 다를 수 있다.

당 건설 투쟁

우리가 말하는 당 건설 투쟁은, 적어도 2006년 이후 시작된 당 건설 논의와 2010년 5월 9일 출범한 '사노위' 운동의 경험 위에서 말하는 것이며, 짧게는 2012년에 예상되는 한국사회의 정세전망을 직접적으로 대비하는 것이자, 길게는 2008년 가을부터 직접적으로 시작된 세계공황이 아직도 초입 단계를 다 통과하지 않았다는 정세인식 아래에서 그와 같은 정세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당 건설 투쟁은, 먼저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지속

된 대중투쟁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한국 노동자계급의 상태에 대한 구체적 분석에 기초하고, 또한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이 노동자계급에게 끼친 영향과 그 과정에서 사회주의 세력이 해 온 역할에 대한 발본적 평가를 근거로 하며, 나아가 무엇보다 당 건설의 직접적, 일차적 주체가 되어야 할 선진노동자 층이 무너진 현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대안으로서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당 건설 투쟁은, 지난 세계 사회주의 운동 또는 혁명운동의 경험과 전통을 이어받으면서도 그것들이 부딪친 한계와 어려움을 우리 스스로 극복해 나가고, 갈수록 그 한계가 폭로되고 있는 부르주아 정치에 대해서는 물론 온갖 형태의 개량주의 정치 또한 노동자계급에게 더는 대안이 될 수 없음이 밝혀지고 있는 현실을 더욱 밀어붙이고, 투쟁하는 노동자계급과 인민을 혁명으로 안내할 태세와 준비를 즉각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당 건설 투쟁은, 일국(각국)이 처한 정세의 산술적 합이 세계정세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공황 그 자체와 이에 대한 지배계급의 태도가 일국(각국)의 정세를 역으로 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세력 각자가 놓인 조건과 상태의 합을 통해 당 건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당 건설을 위해 각자가 처해 있는 조건과 상태를 당 건설을 위해 재편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다.

우리의 이 같은 인식과 주장에 대해 당 건설을 선언한다고 해서, 당 건설을 자임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당 건설이 가능할 수 있느냐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당 건설을 선언하지 않고는, 당 건설을 자임하지 않고는 당

건설 투쟁을 한다는 것은 성립조차 안 되며 가능하지도 않다. 당 건설 투쟁은 당연히 선언하고 자임하는 세력이 등장하는 것으로부터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

당 건설을 선언하고 주장하는 것을 마치 다른 세력과 함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또한 대중이 처한 구체적 어려움과 현실을 무시하면서 그들을 조직하려는 인내심을 발휘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와 당 건설 노선과 무관하다. 만약 그 같은 주장이 논쟁이라도 되려면 적어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수준에서 그들 자신의 입장과 주장을 먼저 객관화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노선 전체가 아닌 그것의 어느 일부나 특정한 현상에 대한 우려나 비판만을 든다면 의미 있거나 진정성 있는 논쟁으로 발전할 수 없다.

당 건설에서 선언/주장/자임이 갖는 의미

누구라도 당 건설을 선언할 수도, 주장할 수도, 우리와 같이 자임할 수도 있다. 누구도 그것을 가로막고 있지 않다. 누구도 당 건설을 하지 말라거나 반대로 하라고 강제하고 있지 않다. 오직 자신의 판단과 행위에 대해 책임지는 것을 전제로 스스로 강제하는 길밖에 없다. 예컨대 옳든 그르든 '진보대통합이나 민주대연합'을 둘러싸고는 대중의 바람과 압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사회주의 세력에게 그 같은 대중적 요구나 압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사노위' 출범을 전후로 해서 일부 선진노동자의 경우에 사회주의 세력이 먼저 단결과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요구와 바람이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정도는 사실 사회주의 세력에 대한 심각한 압력은 아니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즉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 자신이 사회주의 당 건설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훨씬 더 많이 드러냈다는 점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상태와 조건 때문에 당 건설을 회의적,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

그들은 말한다. 우리든 또 다른 누구든 이 같은 상태와 조건에서는 당 건설을 향해 곧바로 나아간다는 것은 '선언/주장/자임' 이상이 될 수 없다고. 그러나 이런 진단과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 과연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조직할 수 있으며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가? 결국 당 건설을 회피하면서 어떤 논리를 내세우더라도 그것은 결국 과거 활동으로의 회귀, 바로 오늘의 어려운 현실을 낳은 그 활동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에 불과하다. 아니 과거에는 그나마 그런 정도에서라도 일부 정치활동이 가능했던 지형과 공간이 얼마간 있었다. 이른바 '전투적 조합주의'라고 비판할 수 있는 정도의 운동이라도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조차 지금은 지나간 현실이다. 물론 미래에 다시 이 같은 운동이 되살아나도록 방치해서도 안 되겠지만.

이게 아니라도 문제는 또 있다. 어쩌면 이 점이 더 결정적일 수 있다. 그들은 '선언/주장/자임'에 대한 이유 없는 거부(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선언/주장/자임'을 당 건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 상태에서 '선언/주장/자임'을 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마저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스스로 '선언/주장/자임'을 할 태세와 준비를 갖추려고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엉뚱하게

‘선언/주장/자임’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다. ‘선언/주장/자임’을 해야 하는 것은 ‘계획으로서의 당 건설’ 노선을 말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일 수 없다.

당 건설은 결코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서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진보정당조차도, 아니 어느 계급의 정당이든 이 점에서 예외가 아니다. ‘선언/주장/자임’을 앞세우지 않고는 스스로를 거기에 맞게 재편하려는 그 어떤 강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미 말했듯이 계급적 강제 같은 것은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계급적 강제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치활동을 먼저 또는 다시 처음부터 하자는 것인데, 이는 거듭 말하지만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자는 것으로 무망한 일일 뿐이다. 지나간 과거, 즉 그 시기에 못 다한 정치활동을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자, 지나간 전철을 다시 밟지 않을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은 당 건설 운동을 지금 펼치는 것 외에는 없다.

그래도 그들은 또 묻는다. 거듭 회의한다. ‘선언/주장/자임’ 한다고 해서 당 건설이 가능한가를. 우리는 ‘선언/주장/자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당 건설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한 바가 없다. 우리는 단지 ‘선언/주장/자임’ 하는 것으로부터 당 건설 운동은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말했을 뿐이다. 이 외에 다른 방안은 달리 없다는 것을 말했을 뿐이다. 당 건설이 그리하여 성공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굳이 답한다면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 다만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주체로 우리 자신이 나서겠다는 것이다. 만약 실패한다면 누구에게도 우리가 실패한 책임을 떠넘길 수 없지만, 누구도 우리가, 즉 노동자계급이 도달하고 이룩한 성과를 앗아갈 수

없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당 건설 투쟁을 '선언/주장/자임' 하고자 하는 이유이다.

당 건설 추진체

'가칭)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은 미래는 물론 현재도, 즉 당 창당을 선포하는 그 때까지 '당 건설 추진체'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당 건설 추진체'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의미는 이런 것이다. 아직 당이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우리의 정치적 내용을 우회하거나 삭감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당이 아직 건설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의 정치활동을 느슨하게 하거나 미루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치적 입장과 내용을 밝히는 것에 있어서든, 정치활동을 펼치는 데 있어서든 창당을 선포하기 전과 후에 따라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 없다. 아니 다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지금 여기에서 안 되는 것이 당이 건설되면 가능한 그런 경우은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이든 창당 이후든 당시의 역량과 정세에 따라 구체적 대응이 다를 뿐이지 정치의 원천 자체가 바뀔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회주의 세력이 이제까지 아직 당이 건설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많은 부분을 당 건설 이후로 유예하거나 미루는 것을 불가피하거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다. 바로 이러한 태도가 당 건설을 어렵게 하고 현재의 협소한 활동을 정당화시키는 근거로 작용했

다. 이 점을 극복하는 것이, 당 건설 투쟁에서,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당장 창당을 선포하지 않고 조직의 위상을 '당 건설 추진체'라고 말하는 것은 당을 선포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 정답이 따로 있어서가 아니다. 우리가 우리 조직의 위상을 당의 전 단계로 위치 짓는 것이 누구처럼 '선진노동자 사이에서의 권위 확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때문이 아니다. 물론 우리도 우리가 아직 거기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선진노동자 사이에서 권위를 확보하는 것'에 이르는 올바르고 빠른 길인가에 대한 판단이 다른 것이다.

또한 다른 사회주의 세력과 함께 공동으로 당 건설을 하기 위한 것 때문도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사회주의 세력과는 당 건설을 같이 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언제 어떻게 등장하고 가능하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우리의 활동과 투쟁은 언제나 모든 사회주의 세력과 함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분명히 세우는 것이 다른 사회주의 세력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할 뿐이다.

나아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활동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 당 건설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는다. 어떤 조직이든 자기 활동을 강화하고 그 성과로 조직화를 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과 '노건투'가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맥락이다. '노건투'는 다른 사회주의 세력과의 연합이나 통합을 통한 당 건설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즉 '자기 복제'를 통해 당 건설을 하겠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한 연

합이나 통합이냐는 것이 문제일 뿐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우리의 당 건설 노선과는 다른 것이다. 우리 역시 지금 당장 사회주의 세력 사이의 연합이나 통합을 당 건설의 주요 경로로 상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의 조건 때문에 그런 것이지 '노건투'와 같은 맥락에서 그러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우리의 조직 위상을 '당 건설 추진체'로 설정하고 있는 실천적 의미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이미 말했다시피 우리는 우리 자신의 활동을 실제 당과 다름없이 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선진노동자'와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든 다른 사회주의 세력과의 협력과 합력을 높여 나가는 것에서든 '여지와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 있다. 다만 우리 자신의 태세와 준비를 갖추는 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당장에 당이 아니라 '당 건설 추진체'인 것이다.

'사노위' 이후 달라진 지형

다음으로 우리는 당 건설 지형이 '사노위' 이전과 지금은 달라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직접적 당 건설'을 시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은 여전히 같지만 그 경로는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사노위' 이전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회주의 세력이 아직 자신의 강령을 분명한 형태로 갖추고 있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세력 사이에서 조직과 전술에서 어떤 공통점 또는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각자의 주관적 입장에 따라 매우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판단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그 시점에서는 '공동의 강령 건설'과 '공동의 실천'을 매개할 수 있는 최적의 경로를 찾는 것이 당연했다. 바로 '사노위'가 취한 '공동실천위원회' 경로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사노위' 과정을 이미 거쳤으며, '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은 세력들은 여전히 변화가 없거나 직접적 당 건설을 위한 적극적, 능동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사노위'와 같은 '공동실천위원회'를 모색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없거나 불가능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적어도 당 건설을 어떤 수준에서든 말하는 조직은 이미 자신의 강령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각자가 갖고 있는 강령을 전제로 해서 활동을 펼쳐나가는 정치 환경이 조성되었다. 말하자면 사회주의 세력 사이의 '선 강령 건설, 후 대중화'를 시도하는 경로는 좋든 싫든 어려워졌다. 이제는 각 세력이 자신의 강령을 갖고 활동하는 것을 통해 대중적 검증을 거쳐야 하는 지형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우리는 각자 강령에 따른 실천을 통해 대중적 검증을 거치는 과정이 '사노위' 이전과는 그 양상이 달라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즉 써클 수준의 조직을 유지하거나 자기 써클을 강화하를 중심에 두는 것과 같은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오직 당 건설을 위해 자기 조직을 재편해 나가겠다는 의지와 전망을 갖고 대중적 검증을 받고자 해야 한다. 선진노동자와의 관계를 형성하기 취했던 기존 인맥적 관계를 과감히 지양하고 정치적 관계로 상승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재설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기존 관계를 유지하려는 그 자체를 우선하는 방식과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체 사회주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역행하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한 조직 내부에서도 이 같은 원칙은 똑 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사실 현존하는 사회주의 세력 내부 성원 사이의 정치적 통일성은 대단히 취약하다. 현존하는 써클이 자기 써클을 건설했던 경로 자체가 대부분 매우 느슨한 정치적 조직화로 시작했으며 무엇보다 조직 내부의 정치토론이 미약했거나 정치토론 자체를 경시하는 풍조가 없지 않았다. 이 점에서는 사회주의 세력이 진보정당들보다 낫다고 할 수 없다. 아무리 국가탄압을 고려한다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사회주의 세력 내부 성원 사이의, 또는 사회주의 세력 사이의 정치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는, 더 나아가 그것들이 대중들에게 읽혀지지 않고서는 대중적 검증을 거친다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우리는 바로 이 점을 최우선해서, 가장 염두에 두고 활동하고자 한다. 또 하나의 써클을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나, 전체 사회주의 세력에게 당면한 과제에 비춰서나,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차원에서 계급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양상을 볼 때에도 전혀 맞지 않다. 객관을 주관에 맞출 수는 없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체의 태세와 준비를 객관적 정세와 상황에 맞게 재편해야 한다. 우리는 바로 이 과정을 앞서 실천하고 추진하고자 한다. 어느 정파에 속해있든 관계없이 우리의 활동을 통해 그들을 일상적으로 자극하고 정치적으로 긴장시켜 나가고자 한다. 투쟁하는 노동자계급이 지금 당장 부딪치고 있는 문제 한 복판을 치고 들어가 그들과 함께 뒹굴면서 그들이 우리가 되고 우리가 그들이 되도록 하고자 한다.

조직, 정치활동

이상이 당 건설 투쟁을 위한 우리의 노선이자 전제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노선과 전제를 어떤 정치, 조직 활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가를 말하고자 한다.

노동자계급에게 특히 투쟁하는 노동자계급에게는 더욱, 당이 부재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투쟁의 '전술 주체'가 부재하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술이란, 단지 특정 투쟁에 한정된 차원에서의 전술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강령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포함하여 계급투쟁 정세 전반을 관통하는 구체적 투쟁 방침을 제시하는 차원에서의 전술을 의미한다. 그렇더라도 전술은 전략이나 강령으로 환원되어서는 안 된다. 전술은 전략과 강령을 배반하지 않으면서도 전략과 강령이 그 자체로 현실화시킬 수 없는 부분을 채우고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치의 요체이자 핵심이다. 이것은 '구체적 상황에 맞는 구체적 전술'이란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런데 당이 없는데 어떻게 전술 주체가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질문은 형식 논리에 의할 때나 가능하다. 당은 진화론적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당은 어린이가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과 같은 경로로 발전할 수 없다. 당은 그 자체가 이미 총체성을 전제하는 것이다. 어느 수준의 총체성이냐는 것이 문제로 될 수 있어도 총체성이 없는 당은 당이 아니다. 그러나 당은 모든 것을 완비해야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총체성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과 모든 것을 완비한 후에나 당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과는 구별해야 한다.

모든 것을 완비한 후에 당을 건설하자는 것은 실은 당을 건설할 의사가

없거나 스스로 아직 총체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을 폭로하는 것일 뿐이다. 당은 총체성을 구체화하는 순서로, 구체화하는 만큼 발전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매개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정치/조직활동이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한 속에서의 정치/조직활동은 당 건설은 물론 전술 주체로 나서는 것과 동떨어진 활동을 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이 점이 바로 이제까지 사회주의 세력이 정치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같은 수준의 활동만을 되풀이 하다가 오히려 후퇴에 후퇴를 거듭해온 결정적 원인이다. 사회주의 세력이 양으로, 숫자로, 몸으로 지배계급은 물론 개량주의 세력과 대등한 겨루기를 할 수는 없다.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결합, 노동자계급의 투쟁과 사회주의 세력과의 결합, 구체적 요구를 혁명적 요구로 성장/전화시키는 과정 모두는 객관적으로는 우연적, 자발적, 자생적 과정을 동반하지만 정치/조직활동에서는 바로 그 같은 요소까지를 의식적, 의도적으로 배치, 배열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적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 역으로 말하면 집중된 만큼의 정치/조직활동을 할 수 있다.

현실의 노동자계급은 하나의 이해로 묶여 있지 않고 수많은 이해관계로 나뉘어져 있다. 우리가 추구하려는 정치활동은 바로 노동자계급이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굴복하거나,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보지 않고 무시하는 두 경향에 맞서 싸우는 활동에 다름 아니다. 어떤 개별 노동자도 노동자계급 전체의 이해를 벗어나 존재할 수 없다. 어떤 부문의 노동자도 자본주의 체제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요구를 관철할 수 없다. 모든 노동자가 계급적 단결에 이를 수 있다는 가정 – 물론 그 과정에 여러 변수와 우여곡절이 따르겠지만 – 자체를 부정하거나, 자본주

의 체제를 무너뜨림으로써만이 비로소 각 부문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과 맞서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실천하고자 하는 정치활동이다.

이러한 정치활동은 한 마디로 노동자계급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것에 복무하기 위한 활동이자, 노동자계급이 권력 장악에 이르는 과정을 안내하고, 이끌기 위해 그들 속에서 함께하는 활동이다.

이 과정은 크게 두 가지 경로를 경유하게 된다. 하나는 대적전선을 명료하게 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그 긴장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바로 이 점을 흐리게 하고 흐뜨려뜨리는 개량주의 지도부에 맞서 지도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이 두 경로를 경유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전체 노동자계급의 전술 주체로 나서는 것이다. 전체 노동자계급의 전술 주체로 나서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을 향한 직접적인 정치선동을 필수적으로 동반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벌이는 투쟁에만 기대거나 진보정당이 형성하는 정치지형에 갇히지 않고 우리 자신의 활동으로 대중투쟁을 불러일으키고 정치지형을 변화시키기 위한 직접 행동을 우리 자신이 먼저 손수 펼쳐야 한다. 그렇지 않고 대중을 향해서만 직접행동을 말하고 자신은 그러지 못한다면 제대로의 정치활동을 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직접 행동을 '선도 투쟁'만으로 협소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선도 투쟁'은 그 중의 한 요소일 수 있을 뿐이다. 요체는 대중투쟁의 '배후 세력(?)', '외부 세력(?)' 차원과, 진보정당에 대한 비판 세력, 반대 세력 수준을 넘어 독자적인 정치 세력이 되기 위한 정치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독자적인 정치 세력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정치활동을 바로 우리 자신이 먼저 독자적인 정치 세력이 되기 위한 것에 집중시켜 나가고자 한다. 독자적인 정치 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한 사회, 즉 자본주의 사회, 더 구체적으로는 지금의 자본주의 현실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과 현재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투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를 노동자계급 투쟁이 나아가야 할 강령으로 집약시켜야 한다. 각각의 투쟁에 스며있으며, 맹아적으로만 존재하는 반자본주의/사회주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고 그들 투쟁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상승시킬 수 있는 무기로서의 강령을 제출해야 한다.

아니 우리 자신의 정치활동이 바로 그 강령에 입각한 것이어야 한다. 강령을 제출할 때까지만 시끄럽고 정작 강령을 제출한 뒤에도 실제 활동에서는 여전히 그 전과 다르지 않다면 의미가 없다. 한 다스의 강령보다 현실에서의 계급투쟁을 조금이라도 더 진전시키는 것이 낫다는 것의 의미도 바로 위와 같은 현실을 비판하는 것이지 강령에 입각한 정치활동을 하는 것 자체를 폄하하거나 부정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제 강령 없는 활동, 나아가 설령 강령을 제출했더라도 그것과 무관한 정치활동만으로는 대중추수적인 활동을 현실적, 실천적으로 극복하기 어렵다. 당장에, 그리고 한꺼번에 강령에 입각한 활동을 펼치기는 결코 쉽지 않지만,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다. 현재 노동자계급에게 필요한 강령은 사회주의 강령 또는 혁명 강령이다. 계급투쟁 정세가 그것을 필요로 하며 요구하고 있다. 이를 단지 원칙으로만 인정하거나 선명성/차별성을 내세우기 위한 하나의 치장으로 치부하거나 폄하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현 계급투쟁 정세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한참 뒤떨어져 있으며, 강

령과 정치활동을 연결시킬 수 있는 의지와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주의 세력이 인내를 가지고 끈질기게 벌여야 하는 정치활동은 바로 사회주의 강령 또는 혁명강령에 입각한 활동이다. 개량주의 정치나 그들 세력에 여전히 기대를 갖고 있는 노동자계급을 그들로부터 분리시키는 것도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렇지 않고 단지 그들의 기대를 무조건적으로 절대화하는 속에서 그들 뒤를 는 활동을 아무리 인내를 갖고 끈질기게 한다고 해서 그들이 개량주의 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 강령 또는 혁명강령을 무슨 비장의 카드처럼 뒤에 갖고 있다가 어느 날 내놓는다고 해서 관철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때는 이미 너무 늦을 수도 있으며 어쩌면 그 때에 가서조차도 끝내 꺼내지도 못할 수 있다. 당연히 개량주의 정치가 그 때에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이제까지의 계급투쟁의 역사가 생생히 증명하고 있다. 혁명 세력이 부재했다는 것은 바로 사회주의 강령 또는 혁명강령에 입각한 정치활동이 부재했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노동자계급이 여전히 개량주의 정치와 그들 세력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것도 그 때문이지 그 반대 때문이 아니다.

사회주의 강령 또는 혁명강령이 필요하고 요구되는 것은 특히 지금의 정세가 현실적, 실제적으로 혁명이냐, 개량이냐를 놓고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계급이 권력 장악에 이르기 위한 그 어떤 중간 과정이나 단계는 별도로 필요치 않다. '선 사민주의 후 사회주의'나, '선 민족자주정

부 수립 후 변혁'이든은 이미 실패로 판명된 2단계 혁명전략이자,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키고 노동자계급의 자기 해방 사상을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다만 여기서 당 건설을 주장하거나 사회주의 또는 혁명강령에 입각한 정치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것을 마치 노동자계급의 자기 해방 사상을 건너뛰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대중추수적 활동을 감추거나 정당화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둔다.

노동자계급에게 필요한 것은 모종의 2단계 전략이 아니라 곧 바로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가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이행 요구다. 이행 요구는 노동자계급 투쟁을 혁명으로 진전시키기기 위한 맥락에서 그 현실적 필요가 등장한다. 또한 노동자계급의 부분적, 부문적 요구를 노동자계급 전체의 요구로 상승, 전화시켜 나갈 수 있는 침로를 열기 위한 차원에서 그 현실적 유의미성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행 요구는 사회주의 강령 또는 혁명강령의 부분이자 그것과의 연속성을 지녀야 한다.

그럼에도 이행 요구는 그 항목 하나하나를 분리한 가운데 그것들 하나하나가 모두 이루어진 뒤에나 혁명적 요구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행 요구 전체가 통으로 관철되거나 또는 그 중 어느 하나만을 통해서도 혁명으로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다. 다만 어떤 이행 요구가 그럴 수 있는지는 미리 예정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구체적 정세와 연동해서만 드러날 수 있으며 나아가 그러한 구체성을 포착할 수 있는 주체의 능력이 따르는 문제다.

우리의 정치활동이 일차로 겨냥하고 목표로 하는 것은 노동자계급 속에서 우리의 지도력을 형성하고 구축하는 것이다. 노동자계급 속에서 먼

저 지도력을 형성하거나 구축하지 않고는, 그를 위한 정치활동을 펼치지 않고는 우리 자신이 노동자계급 투쟁의 전술 주체로 나설 수도 성장할 수도 없다.

그러나 그 경로와 방안은 획기적으로 전변해야만 한다. 사실 이제까지 모든 사회주의 세력이 주관적으로는 그를 위해 활동해왔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하다. 왜 그런지는 이미 앞에서 역사적 과정을 들어 서술했다. 현실적으로 선진노동자 층은 무너졌다. 지금 당장 당 건설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부위는 매우 미약하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조직노동자의 상태는 대단히 열악하다. 비정규직 투쟁도 그 자체만으로 이러한 공백을 메울 수 없다. 그러나 조직노동자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투쟁에 대해서도 우리는 더욱 개입하고 더욱 밀착하고자 한다. 이를 포기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떻게 개입하고 밀착할 것인가이다.

민주노동당 분리 과정에서, 지금의 진보대통합 논의 과정에서 이른바 '민주노총 당' 또는 '운동권 당'이라는 개념이 매우 부정적인 맥락에서 제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를 둘러싼 진단과 해석도 가지각색으로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 흐르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하나같이 노동자계급을 제외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아니 노동자계급을 아예 해체시키고 있다. 그들에게 노동자는 더 이상 계급이 아니다. 계급으로서의 노동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불가능한 설정이다. 거기에는 어떤 논리적, 과학적 근거나 이유는 없다. 오직 각자가 느끼는 인상적, 주관적 주장만이 횡행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주의 세력도 그들과 노동자계급을 바라보는 인식이 다를 뿐 그들이 다다른 결론과 별반 다르지 않은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노동자계급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힘주어 말하는 그 이면에는 노동자계급에 대한 실망과 좌절이 그들 못지않게 자리하고 있다. 노동조합 지도부에게 나타나고 있는 관료화 문제든, 조직노동자 대부분이 실리주의에 빠져있다고 바라보는 문제든, 비정규직 투쟁이나 비정규직 노동운동이 드러내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든 간에 사회주의 세력 역시 전혀 어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주의 세력에게 노동자계급은 저들과 다르게 이미 전제되어 있거나 추상화되어 있다. 세상에 과일이라는 과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사과, 배, 감 등이 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노동자계급이라는 노동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과일이라는 개념을 폐기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노동자계급도 당연히 그러하다. 노동자계급 속에서 지도력을 형성하거나 구축한다는 것은 곧 현실의 노동자, 구체의 노동자 속에서 그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의 노동자, 구체적인 노동자들 속에서 지도력을 형성하고 구축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비로소 노동자계급 속에서 지도력을 형성하거나 구축한다는 것이 갖는 의미를 획득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대 현실의 구체적인 노동자와 노동자계급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다. 그건 결코 자연스럽게 합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둘은 모순적 관계에 놓여 있다. 더구나 현대자본주의에서 그 모순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 때로는 완전히 서로 다른 이질적인 것처럼 보이기조차 한다. 모든 노동자에게 다 해당하는 것은 실은 어떤 노동자에게도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계급이 계급을 호명할 수는

없다. 그것은 동어반복일 뿐이다. 노동자계급을 형성해서 노동자계급을 형성하겠다는 것은 하나마나한 이야기다.

우리의 정치활동은 바로 그 모순 한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모순은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양되어야 한다. 지양은 단순한 과정이나 단선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없다. 즉 이 역시 진화론적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구체의 투쟁을 통해, 특정한 투쟁 속에서 지양의 가능성이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과정을 반복할 뿐이다. 그렇다. 등장하고 사라지는 이 반복적 과정 속에서 지양의 현실성과 가능성을 포착해 나가는 훈련을 거듭해야 한다. 계급투쟁은 어느 한 점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것을 선으로 연결하고 면으로 확장하고 입체로 성장시키는 것이 곧 정치활동의 요체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활동만큼은 어느 정도 진화론적인 과정을 필요로 한다. 정치활동은 반복적인 경험과 훈련을 통해 체득되고 체화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중투쟁은 비약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지만 정치활동에서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중투쟁이 활성화되면 그에 따라 정치활동도 성장할 것이라는 막연한 가정에 기대하는 정치활동은 따라서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모든 정치활동은 그 조직의 조직 상태를 반영한다. 조직의 상태를 능가하는 정치활동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조직적 태세와 준비 정도에 의해 정치활동은 제약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치활동에서 드러나는 문제는 대부분 그 조직이 걸어온 역사적 과정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사회주의 조직이 조직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시급히 극복해야 하는 과제는 폐쇄적 조직운영 문제다. 폐쇄적 조직운영은

조직을 병들게 하거나 정체시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만을 높인다. 폐쇄적 조직운영은 결국 대중과의 거리를 벌림으로써 조직이 대중으로부터의 압력에서 자유로워지게 하고 대중적 검증 과정을 거치는 것을 더디게 하고 어렵게 할 뿐이다. 사회주의 세력이 써클적 운동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것도 폐쇄적 조직운영과 무관하지 않다.

당은 계급에게 당 내부 정치과정이 최대한 공개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 점은 당 이전이라고 해서 달라야 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지금부터 그런 활동을 축적해 나가야만 당이 건설된 뒤에도 곧 바로 실천할 수 있다. 민주집중도 이 과정에서만 현실화 될 수 있다. 당의 규율은 규약 자체에 의해 저절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고, 정치토론을 통한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속에서 소수가 다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을 때 비로소 민주집중이 제 뜻을 찾게 된다.

이상을 요약하면 우리는 사회주의 정치활동, 혁명적 정치활동을 지금, 여기에서 그 어떤 유예 없이 바로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에 대한 조직화도 이 과정을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며 노동자계급 속에서의 지도력 형성도 마찬가지로 그러하다. 이 같은 정치활동을 펼치기 위한 조직태세와 준비를 갖추기 위한 활동도 당연히 동반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정치활동과 조직활동을 최대한 노동자계급에게 공개함으로써 계급으로부터의 압력과 계급으로부터의 검증을 자발적으로 받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당 건설 투쟁이 정세와 동떨어져 진공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할 때, 작게는 '진보대통합/민주대연합'에 대한 대응에서부터 더 나아가서는 2012년 양대 선거에 대한 대응까지를 포함한 정치활동을 펼

쳐나가고자 한다.

2012년 양대 선거에서 노동자계급의 요구와 전술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우리 자신이 전술 주체로 나설 것이다. 물론 가장 최상의 전술은 모든 활동과 투쟁을 혁명당 건설로 이끄는 것에 두어야겠지만 바로 그를 위해서라도 구체적 정세에 대한 구체적 방침과 전술을 제출할 것이다. 적어도 사회주의 세력이 양대 선거에 잘못 대응함으로써 노동자계급을 개량주의 정치 아래로 일방적으로 내모는 결과는 없게 할 것이다. 당 건설 투쟁을 '선언/주장/자임'한 주체로서의 역할을 마땅히 감당해 나갈 것이다.

6. 맺으며

당 건설이 일조일석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더구나 우리가 건설하고자 하는 당이 혁명강령에 입각하여 활동하고 실천하는 혁명정당이라고 할 때 더욱 그렇다. 역사에 복수는 있어도 역사에 공짜는 없다. 우리가 이제까지 실천해 온 것들은 언젠가 우리에게 다시 어떤 형태로든 돌아올 것이다. 역사는 반드시 대가를 청구하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활동과 실천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기도 한다.

당 건설이 일조일석에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해서 당 건설을 마냥 미룬 채로 놔둔다면 당 건설은 진짜 불가능하게 된다. 당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감싸여 있거나, 당에 대한 이데아를 설정해 놓고 당을 신비화시키는

함정(덫)에 스스로 빠진다면 당 건설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당은 두려움의 대상도 신비한 그 무엇도 아니다. 당은 노동자계급의 혁명을 안내하고 진전시키기 위해, 그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 주체를 결집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단(형식)이다. 단지 직접적 당 창건을 선언하기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전제나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할 뿐이다. 최소한의 전제나 조건이라는 것도 물질 운동이 처해 있는 구체적 상황 속에서 도출되는 것이지 절대적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 운동은 당 건설 이전과 이후로 나뉠 수밖에 없다. 당 건설 이전의 모든 운동은 한마디로 당 건설을 위한 운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요구된다. 하나는 지금 여기서의 활동과 실천이 미래에 건설될 당에서의 활동과 실천 사이에 그 어떤 결정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여기서의 활동과 실천은 당이 건설된 이후에도 대부분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당의 부재를 핑계로 조직, 정치활동에서의 느슨함을 용인하거나 써클주의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의 활동과 실천은 일차적으로 당 건설을 위한 활동으로 복속시켜야 한다. 즉 '계획으로서의 당 건설' 노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 당 건설 이전은 당 이후와는 다르게 당 건설 그 자체를 위한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천을 필요로 한다.

한편으로 사노위 운동 실패에 따른, 그 책임을 묻는 역사의 청구서가 우리에게 배달되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사노위 운동을 통해 우리가 얻은 교훈과 경험은 우리의 자산이 되어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사노위 운동은 현재진행형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대차대조표를 만들 수는 없다. 그렇더라도 그리 머지않은 시간 안에 윤곽이 드러날 수밖에 없으며 드러나도록 할 것이다.

Ⅲ

사노위 실패와 무기로서의 강령

사노위 실패와 무기로서의 강령

– 이형로

사노위는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이라는 시대적, 정세적 과제를 부여안고, 당 건설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 추진위를 목표로, 1년간의 공동정치활동을 통해 '강령상의 통일'을 이룰 것을 목표로 하여 공동실천위원회라는 형식을 갖고 출발하였다.

이렇게 출발한 사노위는 "공공연한 사회주의 정치운동과 당 건설운동의 전면화"를 출범정신으로 하여, 당 건설 추진위로의 전환조건으로 1) 강령, 전술, 조직의 통일과 2)선진노동자에 대한 실천적 권위확보를 내세운다. 그러나 "선진 노동자에 대한 실천적 권위확보" 문제는 객관적인 근거와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고, 계급의식이 아직 낮은 문제 등이 있어 실질적으로 추진위 전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사노위 안에서 중요한 과제는 강령과 조직 활동 문제였다.

그 동안 각자의 써클과 활동 공간(사노준, 사노련, 노투련과 개별 활동가)에서 서로 다른 운동 노선과 문화를 기반으로 활동했던 사회주의 활동가들이, 1년이라는 특별하고 한시적인 기간을 정해두고 이론과 실천, 운동과 투쟁의 경험 등 모든 면을 사노위라는 그릇에 녹여내면서, 가장 혁명적인 원칙과 실천의 무기를 창출해내기 위해 사노위 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시도는 여전히 의미 있는 일이었고, 혁명당 건설 운동의 흐름에서 주체역량의 상황과 객관적 정세를 고려했을 때 적절한 운동 노선이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노위는 가장 혁명적인 원칙을 가진 강령으로의 통일도, 자본가 권력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만한 강력한 실천력을 가진 당 조직도 창출을 못한 채, 공동실천 자체의 한계로 인해 당 추진위 단계로 상승하지 못하고 해산을 맞게 된다.

그렇다면 왜 사노위는 강령통일에 실패했고, 당 조직구조를 창출하지 못했는가? 공동실천 자체의 한계는 무엇이었나?

이 글은 강령과 조직은 하나의 유기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강령통일 이전에 조직문제로 파열구가 나기 시작한 공동실천 활동이 왜 강령투쟁 과정에서 더 악화되어 결국 해산에 이르렀나를 살펴보고, 무기로서의 강령은 곧 실천의 지침이라는 교훈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자 한다.

1. 강령 건설의 원칙과 혁명당 건설

1) 사노위에서 건설하려는 당과 강령은 어떤 것이었나?

노동자계급의 당이라면 기본적으로 다수의 노동자를 기반으로 하는 당이어야 한다. 하지만 당의 정치적 성격은 당이 어느 계급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당이 채택하고 있는 강령으로 판단해야 한다. 즉, 당의 성격은 당의 이름이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에서 내건 강령과 실천의 내용이 규정해 준다. 민주노동당이 노동자당을 이름으로 내걸지만 온전한 노동자계급의 정당이 아니듯이,[1] 사회당이 사회주의자 당을 내걸지만 전형적인 사민주의 정당이듯이, 사노위에서 건설할 당은 이름만 사회주의노동자당이 아니라 강령과 조직 모두에서 실제 사회주의 혁명정당, 노동자계급 혁명정당이었다.

사노위가 혁명정당을 건설하려 한다면 사노위가 만들려는 강령은 당연히 사회주의 혁명 강령이다. 사회주의 혁명 강령은 역사와 생산과 권력의 주체인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위해 자본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철폐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실현시키려는 강령이다. 프롤레타리아계급에 대한 착취체제인 자본주의체제의 본질과 현 쇠퇴기의 본질을 밝혀내고, 사회주의 혁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도출해내고, 프롤레타리아 독재—공산주의 사회로의 이행 등 혁명의 전 과정에 대한 혁명적 원칙을 정립하는 강

1) 민주노동당은 최근의 '사회주의 가치 삭제'라는 강령개정을 통해 사회주의적인 요소도 제거했지만, 원래부터 사회주의 혁명정당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으로는 좌파민족주의, 사민주의 정당이었다.

령이다. 그리하여 혁명의 주체인 노동자계급에게 사회주의 혁명, 세계혁명의 전망을 제시하여 현실의 계급투쟁에서 자본가계급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로서의 역할을 하는 강령이다.

하지만 사노위 1년의 공동실천 과정에서 구성원의 다수가 사회주의 혁명정당이 아닌 이름 그대로 사회주의노동자 정당이라는 사회주의 좌파당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점은 3인안 강령에 대부분 반영되었는데, 평화적 이행까지 포함한 수권전략(혁명의 주체인 노동자계급의 물리력을 바탕으로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노동자계급의 독재를 수립하는 전략이 아닌)과 자본주의 쇠퇴 불인정, 가짜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불분명한 입장, 부문운동의 병렬적 조합으로서 주체형성 전략 등을 내세움으로써 계급투쟁에서의 전략 부재를 드러냈다.

3인안은 결과적으로 강령이 사회주의 혁명에 있어 필수적인 무기가 되고, 직접적인 사회주의 정치활동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는 반자본주의 운동, 반신자유주의 투쟁 정도로 후퇴하고, 조합주의 또는 전투적 조합주의에 안주한 가운데 공허하게 사회주의와 사회주의 현장 활동만을 외치는 것 이상이 아닌 것이다. 이것은 결국 사노위의 성원들이 강령을 실천의 지침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동의만하면 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사노위의 강령은 누구를 향한 강령이어야 했고, 3인안 강령은 누구를 향했기에 실천의 무기가 되지 못했나?

2) 누구를 향한 강령이었나?

사노위의 강령은 사회주의 혁명당의 강령이기에, 혁명의 주체인 노동자계급을 위한 강령이어야 하며, 노동자계급에게 공개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강령이다. 혁명 강령은 노동자계급의 혁명적인 부위인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건설될 강령이다. 또한 계급투쟁의 역사와 혁명적 사회주의 운동의 성과를 온전히 계승하고, 현실의 계급투쟁과 혁명적 실천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건설되어야 할 강령이다.

그런데, 사노위는 강령토론의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을 향한 공개적이고 외향적인 토론 보다는 내부토론과 내부통일에 우선을 두었기 때문에, 노동자계급과의 상호작용과 검증과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강령토론 과정에서 나타난 강령적 차이와 쟁점에 대한 첨예한 대립들은 찻잔속의 태풍에 그치고 말았다. 이 때문에 조직 활동과 당 건설 경로에서 강령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조건들에 강령이 이용당하는 참담한 결과마저 초래했다. 1년간의 공동실천 과정에서 강령통일을 못 이루어 당연하게 조직을 해산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직봉합과 조직보존 논리가 다수를 점해 사노위를 계속 유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사태는 애초에 강령을 만들 때 노동자계급에게 제출하는 강령을 만든 것이 아니라, 당 건설의 초기 주체들인 사노위 성원들만을 염두해 둔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것은 현실이었고, 사노위 강령토론의 목적은 노동자계급이 아닌 사노위안에서 다수의 지지를 얻는

것으로 전락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사노위의 다수는 노동자계급의 어느 부위를 표현해주고 대표하고 있었을까? 사회주의 전통의 어느 지점을 계승하고 있었을까?

결과적인 이야기이지만, 사노위의 다수는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부위를 표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조합주의와 전투적 조합주의를 대표하고 있었다. 그것은 현실운동의 직접적 반영이었다. 또한 정치사상적으로는 자본주의와 적대하는 사회주의 혁명전통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사민주의 정도와 대당하는 좌파 급진주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래서 이것이 예상되었다면 사노위는 강령 조직의 통일[2]을 통한 당 추진위 건설이 아니라 처음부터 강령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혁명당 노선과 사회주의 좌파당 노선으로 분화될 것을 상정하고, 내부의 통일이 아닌 노동자계급 지향적이고 외향적인 강령투쟁을 통해 두 개의 당, 또는 강령투쟁에 승리한 세력만이 당 건설을 추진하는 경로를 채택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노위 과정 자체는 객관적 정세와 주체들의 상황을 반영하여 선택한 역사적 산물이었다. 따라서 주체의 상태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바로 그 주체의 상태를 진전시켜낼 수 있는 역동적 과정을 창출해 내고자 했던 것이다. 최소한 그럴 수 있는 조건은 존재

2) 사노위는 당 건설 추진위 조건으로 강령, 전술, 조직상의 통일을 내걸었다. 하지만 전술은 강령의 원칙에 복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령통일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공동전술에 불과하다.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작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시작에서부터 제대로 했는가 하는 것이다.

먼저 처음부터 강령통일이라는 조건을 내걸 때, 사노위 성원 다수가 선호하는 강령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강령토론과 공동실천을 통해 혁명적 실천을 담보하는 강령만이 당 추진위의 강령이 될 수 있다는 원칙을 세웠어야 했다. 그랬다면 강령과 조직노선이 분리되지 않고 한 가지로 인식되어 강령투쟁과 함께 실천력을 높이려는 노력들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

3) 혁명당과 혁명 강령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스스로의 일이고, 자신들의 연대와 자신들의 의식으로서만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려는 생각은 노동자계급의 의식 중 혁명적 계급의식이다. 혁명적 계급의식은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라는 과거의 낡은 사상과 현실의 지배적인 관념들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낡은 사상들을 실질적으로 극복한다는 것은 의식개조나 정신적 깨달음이 아니라 낡은 경제적 모순들을 물질적으로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곧 자본주의 모순을 물질적으로 극복하는 일이며, 노동자계급의 혁명을 통해서만 극복이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혁명적 계급의식은 자본주의를 물질적으로 극복하려는 의식이며, 혁명을 가능케 하는 계급의식이다.

그런데 이러한 계급의식은 혁명시기가 아닌 일상시기에는 부르주아 이

데올로기의 지배로 인해 쉽게 깨질 수 있고 일시적이며 결국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혁명적 계급의식은 노동자계급의 모든 역사적 · 이론적인 성과들을 온전히 담아내는 강령을 가진 조직인 혁명 정당과 같은 물질적 토대를 갖춰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혁명당은 계급의식의 정치적 표현이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노동자계급의 혁명투쟁에 필수불가결하다. 혁명당은 전체 프롤레타리아의 해방이라는 강령을 방어하면서 조직된, 노동자계급 가운데 정치적으로 가장 앞선 부분을 포함한다. 그래서 혁명당은 늘 프롤레타리아의 소수일 것이지만, 혁명당이 방어하는 공산주의 강령은 전체 노동자계급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

따라서 강령은 당을 구성하는 소수의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 전체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 강령은 결국 노동자계급 스스로의 힘으로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무기로서의 강령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을 수동화 시키고, 노동자계급에게 명령하고, 노동자계급을 지배하는 강령일 수밖에 없다. 앞서 말했듯이 사노위의 일부 강령은 일차적으로는 사노위 성원들을 위한 강령이었다. 그래서 노동자계급에 의한 검증, 승인과는 무관하게 자신들의 조직통일을 위해 인위적으로 강령통일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강령이 노동자계급을 수동화 시킬 가능성은 불을 보듯 뻔하다.

강령이 전체 노동자계급에 의해서 수행되는 강령이 되고, 자본주의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무기가 되려면 어떤 강령이어야 하는가?

혁명 강령은 사회와 노동자계급 투쟁의 궁극적 목적을 이론적으로 진술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들에 선행하여 실제 발생한 것에 대한 세세하고

구체적인 분석이아. 그리고 그 분석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상황을 낳게 한 그 당시의 물질적인 특성들과 반드시 결부시켜 해명되어야 한다. 그래서 혁명 강령에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해방이라는 목적과 사회주의 혁명의 이론을 반드시 담아내야 한다. 또한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과 노동자계급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을 그 물질적 토대로부터 분석하여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전망과 투쟁의 무기들을 제시해야 한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해방은 궁극적으로는 공산주의 사회의 실현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과정에는 반드시 이행기가 필요하다. 이행기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표현된다. 사회주의 혁명이론은 바로 이행기 사회인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창출하기 위한 혁명이론이다. 혁명이론은 자본주의의 타도와 노동자계급의 권력 장악으로부터 시작하여, 노동자계급의 직접권력인 노동자평의회가 전 사회를 지배하면서 자본주의 잔재를 일소하고 공산주의 사회로 이행하기까지 견지해야 할 원칙과 과정에 대해 수미일관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일관된 강령의 목적과 이론이 없이 여러 이론들의 조합을 통해 자신들만의 특별한 혁명이론을 만들려는 시도는 결국 강령을 전체 노동자계급의 것이 아닌 소수 정치세력의 전유물로 만든다. 특히 한국과 같이 혁명운동의 단절과 정치사상적 토대가 빈약한 지역에서 건설 할 혁명이론과 강령은 더더욱 혁명운동의 세계적 흐름 속에서의 보편성과 일반성을 가져야만 한다.

그런데 3인안은 한국사회의 특수성에 대부분 기반을 두고 있다. 3인안은 강령건설의 원칙과 자신들이 계승하고 있는 혁명적 전통을 밝히지 않음으로 인해, 현재 세계 사회주의 혁명운동진영에서의 위치와, 자신들의 사회주의 운동의 역사적 위치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것은 그들의 정치

사상이 여러 이론들을 인위적으로 조합하여 그들만의 검증되지 않은 독자적 혁명이론을 만들어냈다는 근거이기도 하다. 하지만 혁명이론은 전 세계 노동자계급에게 보편적이어야 하고 국제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제적 흐름에 조응해야 한다.

결국 이런 문제점들이 3인안의 강령 내용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명시'를 생략[3]하고, '소련의 사회성격 규정을 유보'하고, 노동자평의회 권력이라는 계급투쟁의 위대한 성과물과 구체적 실체를 '대체권력이라는 추상으로 후퇴'시키고, 노동자계급의 국가권력 장악을 위한 집단적 계급행동 동력과 무장력 획득이라는 좀 과격하고 불편하지만 필수적인 강령적 요소를 '계급의 주체형성', '경제-정치-사회-일상 삶의 전 영역에서 대체권력을 형성하기 위한 투쟁과 도전'이라는 듣기 좋은 공문구로 바꾸어 놓는 결과를 만들었다.

4) 혁명가 조직과 사노위

혁명가들의 조직인 혁명당은 처음에는 노동자계급 안의 혁명적인 인자들만을 포함시키는데, 계급투쟁이 전면화 되고 계급의식이 혁명 강령에 가까워질수록 당은 소수의 혁명당이 아닌 프롤레타리아 혁명당으로 확장된다. 그런데 혁명적인 인자들의 소속척도는 사회학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라서, 당의 강령에 동의하고 그것을 옹호하고 실천할 태세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혁명당에는 사회학적으로 노동자계급에

3) 초초안 단계에서 생략되어 있던 프롤레타리아 독재 개념은, 초안단계에서는 내용이 관철된 것이 아니라 형식상의 외삽 형태로 포함되었다.

속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출신계급과의 단절을 통해서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이해관계와 스스로를 동일시하는 지식인 등의 개인들도 속할 수 있는 것이다.

불행히도 사노위에서는 1년이라는 공동실천 기간 동안 강령통일을 이루어내지 못해 강령을 채택할 수 없었고, 그 때문에 회원들이 강령을 옹호하고 실천할 태세를 갖추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런데 강령 초안 제출이전에 이미 강령보다 낮은 단계인, 조직의 결정사항과 정치방침 조차도 실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회원들과 운동의 흐름들이 나타났다. 조직문제는 강령이전에 사회주의자로서의 태세 문제를 확인해 주었다. 그래서 이후의 강령토론과 강령투쟁은 조직노선 투쟁의 기반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조직노선 투쟁은 길었으나 강령투쟁은 짧았다. 강령과 실천은 분리되었고, 조직문제는 과잉되어 강령을 뒤로 물러서게 했다. 결국 1년이라는 시한의 문제로 강령은 조직분리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남은 세력들은 서로 이질적인 강령을 통합하여 조직문제를 덮어버리고 공생의 길을 가고 있다.

위와 같이 사노위의 조직노선 투쟁의 본질은 가입원서 정도의 멤버쉽 확인 문제가 아니라, 혁명당 구성원으로서의 자격 즉, 강령에 동의하는 사회주의자인지 아닌지, 강령을 옹호하고 실천할 태세를 갖춘 사회주의 활동가(혁명가)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하는 투쟁이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는 사노위를 혁명가조직과 당적 조직으로 만들고자 했던 혁명당 건설 노선과, 사노위에만 한정된 공동실천을 통해 정치조직 간의 형식적 통합과 낮은 단계의 강령통일로 단일조직 건설을 목표로 했던 노선과의 피할 수 없는 충돌이었다.

2. 5인안 강령의 탄생과 쟁점

1) 정치노선으로 구성된 강령기초위원회

사노위는 계급투쟁과 사회주의 운동의 한국적 상황과 사노위 구성원들의 객관적 조건들에 근거하여 공동실천단계–당 추진위 –당 건설이라는 경로를 상정했다. 그리고 사노위안에는 사회주의 혁명당과 거리가 먼, 사민주의, 스탈린주의, 민족주의자들은 배제한 상태에서, 한국 사회주의 운동내의 대부분 경향들이 다양한 정치노선과 써클 구도 속(일부 써클 불참여)에서 함께 하였다. 즉, 사노위가 써클 구도에서는 다수를 포함하지 못했지만, 정치경향 속에서는 가장 풍부한 다수의 경향을 참여시키며, 당 건설 운동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그래서 강령기초위원회를 처음 구성할 때는 사노위내 양대 정파였던 사노준과 사노련의 정치적 안배가 작용했으나, 강령실무위원까지 포함하는 강령기초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한 단계에서는 더 이상 사노준 대 사노련의 써클 구도가 아니라, 적어도 4개 이상의 정치적 입장을 명확히 갖고 있는 정치 사상적 결집체[4]의 내용과 형식을 갖게 된다.

강령기초위원회 초기과정에서 강령 초초안 마련을 위해 강령의 체계와

4) 강령기초위원회는 강령기초위원과 강령실무위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총 11명이었다. 강령위원회 구성은 사노준 출신 3명, 사노련 출신 3명,개별 활동가 5명으로 이루어 졌는데, 두 써클 소속이 아닌 5명은 레닌주의, 좌익공산주의, 트로츠키주의, IBT(트로츠키주의 일부) 등 다양한 정치 노선을 갖는 개인들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다함께(전지윤, 사노위 실패가 좌파에게 보여 주는 것, 〈마르크스21〉, 10호, 2011년 여름)에서 규정한 사노련파 대 사노준파의 구도는 강령기초위원회에서는 이미 존재하지 않은 것이다.

구성, 작성방법 등을 결정했던 당시에는 독자적인 강령제출이 가능한 정치노선이라면 어느 입장이라도 각자의 강령 초초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사노위가 더 이상 써클 간의 연합이거나 정치적 노선이 없이 공동실천만을 하는 조직이 아니라, 명확한 정치적 입장을 갖는 조직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강령 건설 또한 정치사상적 노선을 중심으로 내, 외부 토론과 대중적 검증과정을 거쳐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건설되어야 한다는 것을 공유했다.

당시의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강령 초초안이 적어도 4개 이상으로 제출될 것이 예상되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초초안이 제출되더라도 토론과정에서 각각의 초초안 내용을 기초로 하여 공통의 지반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쟁점사항은 토론을 심화시켜 공개적인 검증과정을 통한다면 강령통일을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다. 공통의 지반과 차이점이 명확해질수록 강령통일은 사노위 구성원 전체의 일이 되고, 실천적 검증의 몫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할 강령은 조직원 숫자의 다수의 경향이 아닌, 정치 사상적 원칙의 명료함과 실천에서의 무기가 되는 강령만이 당 추진위의 강령으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2) 조직문제로 탄생한 5인안 강령

하지만 강령 초초안 작성을 막 시작하려던 시점에 사노위에서는 당 추진위 건설 과정에서 강령만큼이나 중요한 조직문제가 터지고 말았다. 소위 '가입원서 사건'이라는 웃지 못 할 사건이었는데, 당시에는 아직 사노위 전체의 문제나 중앙위의 문제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서울

지역위원회에서는 가입원서 거부자(정확히 규정하자면 가입원서 작성과 반대에 대한 행동 자체를 거부하고 정치조직의 민주집중제 원리를 공식적으로 부정한 자)에 대한 징계 안이 상정되었다. 물론 가입원서를 둘러싼 여러 문제들 중 가입원서 작성이라는 형식문제와 집행과정에서의 소통부족은 문제를 더욱 부정적인 쪽으로 확산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했다. 하지만 처음의 문제는 가입원서 작성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입원서 거부흐름을 반조직적으로 촉발시킨 중앙상근자의 태도와 그를 비호하는 세력에 있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정치토론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정치조직으로서는 당연한 멤버쉽 확인 문제였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것을 확산시킨 것은 써클주의 운동에서 나오는 온정주의 흐름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거나 묵인하는 사노준 출신의 3인을 제외한 강령위원 8인은 긴급회합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강령문제 이전에 정치조직의 기본이 되는 조직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강령토론이나 강령채택 과정에서도 결국 다수파의 논리와 써클주의 정치가 작용하여, 조직보존을 위한 야합이나 실천적 의미가 없는 강령 채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그 후 1인은 독자강령 제출을 위해 그 모임에서 빠지고 나머지 7인은 조직문제에 대한 공유, 강령 원칙의 큰 틀에서의 동의를 기반으로 공동의 강령 초초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한다. 이것이 5인안이 탄생한 일차적 배경이다. 그리고 이러한 써클주의에 대한 우려는 2차, 3차 총회와 서울 지역위 임시총회, 강령토론의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났고, 사노위 실패와 분리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 하게 된다.

3) 5인안 강령의 원칙

5인안은 강령 초초안을 작성하면서, 노동자계급에게 제출할 혁명 강령에서 고수해야할 원칙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 중요했고, 이것으로부터 강령 작성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첫째, 혁명 강령에서는 자본주의의 근본모순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서로 연결된 역사적이고 일반화된 모순과 그것에서 파생한 특수한 모순들의 고리를 찾아내어 구분하고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계급투쟁의 동학, 사회주의 혁명의 주체를 올바르게 인식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원칙이었다.

둘째, 스탈린주의를 포함한 역사적 그리고 현존하는 사회주의를 참칭하는 국가자본주의, 기형적 사회 등 모든 반 노동자계급적 억압 · 착취체제를 사회주의로 인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노동자계급의 힘으로 타도해야 할 체제로 인식하는 것이었다.

셋째, 공산주의 사회로의 이행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필연성을 인정하며, 사회주의 혁명은 혁명당과 노동자계급의 의식적이고 조직화된 집단행동에 기반 해야 하며, 부르주아 계급의 폭력과 반혁명 책동에 대해 노동자계급의 무장력(계급폭력)으로 맞서야 하며, 부르주아 권력의 타도에서 무장봉기전술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넷째, 단계론을 거부하고, 혁명의 첫 단계에서부터 부르주아 권력의 즉

각적 타도와 모든 국가기구의 파괴와 노동자평의회 권력을 확립하는 것을 경로로 명시하는 것이었다.

다섯째, 세계혁명과 혁명적 인터내셔널의 건설을 노동자국제주의의 당면 실천목표로 설정하는 것이었다.

여섯째, 위의 원칙에 입각한 노동자계급 권력 장악을 위한 이행요구(강령) 실천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었다.

위와 같은 강령의 원칙들은 이미 강령 초초안의 내용을 대부분 규정해 주고 있었다. 따라서 강령 초초안 작성과 강령토론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강령의 원칙에 대한 동의였다. 강령문구와 전체 내용에 대한 동의는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는 가능하지도 않고, 강제로 설득해서도 안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토론과 실천을 통해 검증 받아야 할 앞으로의 과제로 상정했다. 그래서 원칙들에 대한 근거 제시와 세부적인 내용상의 불명료함 해소는 반드시 국제적인 흐름과 한국적 상황을 연계하여 풀어나간다는 원칙하에, 많은 부분을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둔 채 강령 초초안을 제출하게 된다.

4) 3인안 강령과의 사상적 차이

앞으로 사노위 잔류파의 통합강령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3차 총회와 강령초안 토론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확인된 3인안과 5인안 강령초안의 사상적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련 사회의 성격 규정문제에서 3인안이 소련, 중국, 북한 등을 가짜 사회주의가 아닌 모종의 사회주의 국가로 규정하는 것은 과거의 역사적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의 차이 정도가 아니었다. 이것은 앞으로 건설할 사회주의 국가의 상에 관한 문제이고, 여전히 3인안이 스탈린주의적 잔재와 노동자국가에 대한 환상(당과 관료가 주도하는 국유화, 계획경제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버리지 못해 나타나는 사상적 혼란스러움이기 때문에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문제였다. 우리는 소련사회에 대해 국가자본주의라고 규정하면서, 가치법칙과 계급투쟁의 고려를 통해 소련사회를 분석하려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는 맑스주의 혁명적 전통에 따라 이행기 문제를 판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물론 아직까지 명료하지 못한 측면들은 앞서 말했듯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 하지만, 혁명 강령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이행기 문제를 퇴보한 노동자국가론이나 사회주의로의 이행에 실패한 모종의 노동자국가로 판단하는 사상들은 우리와는 현실 투쟁에서부터 적대적[5]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적당한 타협이나 강령상의 이견 병기로 넘어가려는 행위는 정치적 야합일 뿐 역사와 노동자계급에게 정직하지 못한 태도이다.

소련과 북한, 중국, 그리고 쿠바와 베네수엘라 같은 국가자본주의 착취체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 없거나 그들을 동의해주는 세력들은 결코 노동자국제주의를 온전히 지켜낼 수 없으며, 혁명적 인터내셔널의 건설에서도 당연히 제외될 수밖에 없다. 그들이 강령에서 가짜 사회주의 국가에

5) 사노위 신문에서는 리비아 사태를 두고 이미 두 가지의 적대적 경향이 동등하게 게재되었다. 이것이 자국 상황이라면 둘의 입장은 피할 수 없는 적대적인 입장인데도 같은 조직을 유지한다는 것은 부르주아 정치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여기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세계혁명과 인터내셔널의 건설이라는 관점에서 서로 적대적인 입장이 자기 일이 아니라서 자국중심으로 아무렇지 않게 동거를 하면서도 인터내셔널을 외친다는 것은 인터내셔널조차 희화화시키는 일이다.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아도 현실의 실천운동에서 큰 문제가 없으니 함께 하자고 하는 것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기만이자, 강령과 실천을 분리하는 작태이다. 카스트로, 차베스를 묵인하면서 쿠바나 베네수엘라에서 활동 중인 혁명적 공산주의 세력과 연대할 수 없으며, 중국의 국유화 된 산업 체제를 보호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는 한 중국노동자들의 정부와 노조의 극악한 탄압을 넘어선 자립적 투쟁에 대해 지지할 수 없다.

둘째, 자본주의 쇠퇴 규정의 문제는 현재 자본주의 체제의 끝 모를 위기의 본질을 밝혀내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삶의 문제이고, 계급투쟁의 주체들이 처해있는 객관적 조건과 전망에 대한 문제이다. 이것은 결국 노동자계급 미래의 문제, 혁명의 문제이다. 3인안처럼 자본주의의 상승기/쇠퇴기 개념 없이 단순한 주기적 위기론, 공황론 정도로 자본주의 위기상황을 판단한다면, 쇠락해가는 자본주의의 야만성과 반동성, 기생성과 부후성의 근원을 밝혀낼 수 없다. 더욱이 이것을 혁명적으로 극복할 대안(이행 프로그램)을 그 물적 토대로부터 도출해낼 수 없다. 또한 쇠퇴하는 자본주의 하에서 자본의 위기전가 상황을 맞이하여 생존권의 위협과 급격한 생활수준의 하락에 직면한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생존조건이 계급의식과 조직의 상태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분석할 수 없다. 낡아서 소멸하는 운동과 새롭게 창출되는 계급운동의 실체를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분출되고 꺼져버리는 계급투쟁 속에서 혁명적 전망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자본주의 쇠퇴 개념을 무시한 채 이들이 제시한 전망이라는 것은 고작 과거운동의 혁신이나 계급의 재조직화(주체형성)라는 구태의연하고 앙상한 실천적 전망이었다.

게다가 이들은 자본주의 쇠퇴개념에 대한 반정립에 치중한 나머지, 자

본주의 쇠퇴의 시작 (1914년, 1979년대, 1998년 이후 등)이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나, 쇠퇴의 여러 근거에 대한 연관성 부족에 대한 비판을 넘어, 자본주의 쇠퇴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최근 경제학자들[6]과 자본가들까지 자주 사용하고 있는'자본주의 쇠퇴'라는 개념을 계속 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본주의 위기'라는 말로 치환시키게 되어, 사회주의 혁명의 물적 토대를 스스로 부정한다는 오해를 사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공산주의 혁명은 세계적이어야 하고, 세계적이지 않으면 그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또한 세계혁명은 새로운 인터내셔널 즉 세계혁명당이 건설되어야 실현 가능하다. 세계혁명과 세계혁명당 건설의 관점에서 강령은 세계적으로 통일된 강령이 필요하며, 이것은 처음에는 맑스주의 전통을 계승한 혁명적 사회주의자들과 혁명적 계급투쟁을 벌이고 있는 전투적 노동자계급들을 포괄할 수 있는 기준강령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이 기준강령에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혁명적 원칙들이 담겨있어야 한다. 일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국가별 지역별 당이 존재하는 한, 처음에는 각 당의 강령이 별개로 존재하겠지만 세계혁명당의 강령과 조직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국 혁명당의 강령과 조직은 세계혁명당의 기준강령과 통일되어야 하며 세계혁명당의 건설에 복무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 불분명한 자신들만의 사상과 경험으로 일국의 강령을 독자적으로 만들려는 시도들은 세계혁명의 관점을 가

6) 맑스주의 경제학자인 김수행 교수조차도 자본주의 쇠퇴라는 용어를 직설적으로 사용한다. 〈경향신문〉 (2011년 5월24일) 김수행 칼럼 –쇠퇴하는 자본주의에서 "이제 자본주의는 빈부격차와 계급대립의 심화, 국제협력의 붕괴, 제국주의에 대한 제3세계 인민의 저항, 민주주의의 약화 등으로 쇠퇴하지 않을 수 없다." 고 주장했다.

질 수 없으며, 노동자국제주의와도 거리가 멀다. 3인안은 강령토론의 과정에서 인터내셔널의 관점이 아닌 일국의 독자적 강령과 당 건설을 상정하고 있음을 드러냈고, 이것은 일국 당들의 연합형태를 인터내셔널로 규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맑스주의를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이 계승하는 정치노선을 밝히지 못한 채 정체불명의 혼합된 노선과 다른 노선에 대한 반정립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맞이한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것은 사노위 내에서의 연방주의적 조직관을 인터내셔널 건설에까지 적용한 정체불명의 사상적 표현에 다름 아니었다.

5) 강령토론의 원칙과 실천적 강령채택의 실패

우리는 강령을 토론하고 비판할 때 원칙과 사상적 근거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급투쟁의 위대한 역사와 혁명적 사회주의 사상의 집약인 강령의 문구들은 그 만큼 함축적이고 최선의 원칙만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 강령을 건설하는데 있어 고수한 원칙과 역사적 전통을 밝혀내고, 그것으로부터 작성된 강령의 내용과 현실운동에의 적용 등을 토론하는 것으로 강령토론이 진행되어야 했다.

혁명적 사회주의 원칙과 전통에 동의 한다는 것은 바로 강령의 원칙에 동의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강령토론은 강령의 사상적 근원을 밝히고 현실 적용에서의 원칙을 토론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그런데 사노위에서의 강령토론은 원칙의 토론이 아닌 강령의 문구나 주제별 토론이 되고 말았다. 실천의 적용에 대한 토론이 아니라 현재의 운동에 대한 유용성에 대한 토론이었다.

다시 강조하지만 강령은 절대불변의 진리가 아니라서 그 원칙의 동의에서부터 시작하여 실천의 무기로 작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강령의 문구 하나하나는 계급투쟁의 발전과 함께 끊임없이 검증되고 창조되어야 할 과제이지 진리의 담지서가 아니다. 실천을 강제하는 것은 강령의 명료한 원칙과 그에 입각한 풍부한 전술과 지침이지, 강령의 친절함과 좋은 글귀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노위 강령토론 5개월은 강령의 사상적 원칙에 충실한 토론도, 각 쟁점의 해소를 위한 심화토론도, 현실 운동의 무기가 될 수 있는 실천적 토론도 되지 않은 채, 그저 일정을 채우기 급급하거나 사상적으로 전혀 다른 강령 안을 조직보존을 위한 여러 가지 압력으로 통일시키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게다가 당시의 사노위 조직 상태는 단일 강령이 만들어지고 강령이 채택된다하더라도, 회원들의 강령적 실천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강령도 당 건설도 앙상한 형식만이 남을 것이 분명했다. 따라서 강령의 채택은 강령의 내용에 대한 동의만이 아니라 강령을 실천적으로 결의하고 강령에 입각해 활동할 진정한 당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채택이어야 했다. 강령과 규약을 승인하는 순간, 현재의 사노위보다 2~3배 이상의 정치의식 상승과 활동력이 필요할 것이며 강령적 실천과 규약 준수가 조직의 모든 규율을 담보해주는 것이어야 했다. 왜냐하면 사노위가 8개월을 넘어서면서는 출범초기에 보여준 회원들의 활동력과 결합도는 현저히 떨어져 있었고, 그나마 남아있던 이질적인 조직문화 사이의 건강함 긴장감도 서로에 대한 불신과 불만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조직을 살리는 길은 오직 강령의 실천적 채택 뿐 이었다.

하지만 다수파는 상당한 고통과 출혈이 따르겠지만 당 건설을 위해 감내해야만 하는 강령의 실천적 채택(복수의 안이 나올 경우 각자의 강령 안을 실천적으로 승인하는 것)이라는 정도를 걸은 것이 아니라, 강령의 인위적 통일을 통한 형식적 채택과 조직보존에 중심을 두면서 우리들 자신과 노동자계급에게 약속한 당 건설 경로를 아무렇지 않게 바꾸어 버렸다.

다수파는 처음부터 실천적 강령의 채택이나 조직의 질적 전환을 통한 당 추진위 건설은 염두 해 두지 않았거나 중도에 포기한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강령 초초안 작성이전 가입 원서 건을 필두로 하여 연쇄적으로 조직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거나 희생을 감수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방기한 채 무마하거나 통합하려고만 했던 것이다. 이런 태도는 사상적 불명료함과 부분적 실천의 나열과 조직과 투쟁에서의 연방주의적 사고들로 이루어진 3인안 강령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났다.

3. 결론

강력한 정치조직은 합력의 정치, 통합지도부의 건설이 아닌 강령적 통일, 강령적 행동일치에 있다. 강령의 수준을 낮추어 통일을 꾀하는 것은 혁명적 전통과 현실의 혁명적 사회주의운동을 져버리는 일이다. 그런데 사노위 다수파는 조직유지를 위해 강령의 원칙, 강령토론의 원칙, 강령

채택의 원칙, 혁명당 건설의 원칙 모두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오로지 조직유지와 형식적 당 추진위 전환을 위해 혁명적 사회주의 진영을 배제[7] 시켰다.

결국 그들이 간과한 가장 큰 오류는 당과 강령은 하나이고 유기체와도 같다는 사실을 부정한 것이다. 이 점을 무시하고 강령의 인위적, 기술적 통합을 시도한 것은 강령과 실천을 분리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혁명당 조직에서 강령은 실천의 지침이자, 당원들과 노동자계급에게 무기로 인식되었다.

강령에 사회주의혁명이 목표로 설정되어있다면 그 강령을 옹호하는 모든 당원들은 현실운동에서 실제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운동을 해야 한다. 조합주의, 관료주의 운동을 넘어서는 운동을 강령에서 제시하고 있다면 반드시 조합주의와 관료주의를 타도하고 새로운 운동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강령에 입각한 활동인 것이다. 이런 태세와 이런 조직구조가 갖추어지지 않은 조직은 사회주의자 조직도, 혁명가조직도 아니며, 더욱이 노동자계급의 당이라는 이름을 절대 붙여서는 안 될 후진적 정치 써클일 뿐이다.

혁명당 건설은 바로 이러한 강령과 조직이 하나로 결합하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자, 강령이 노동자계급과 상호작용하며 계급투쟁의 무기가 되는 과정이다.

---

7) 혁명적 사회주의 진영(사노위 내 의견그룹)은 사노위의 해산을 선언했으므로 사노위 출범정신을 지켰고, 잔류파들은 해산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노위를 유지시켰으므로, 사노위의 공과 실에서 혁명적 사회주의 진영을 배제시킨 것이다.

혁명당 건설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다. 계급의 앞선 부위 ,혁명적 부분이라 자임하는 우리가 먼저 강령을 건설하고 강령에 입각한 활동을 통해 혁명당의 조직체계를 하나하나 튼튼하게 세워나간다면, 그것이 노동자계급에 깊이 뿌리 내린다면, 당은 노동자계급에게 바쳐져 노동자계급의 당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부르주아 계급에게 실질적 위협이 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당이 되는 일은 우리의 명확한 정치적 입장과 전망이 정세의 고양과 결부된 대대적인 계급투쟁과 만날 때이다. 혁명을 향한 모든 행동은 프롤레타리아 혁명당의 강령과 그것을 행동에 옮길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혁명적 계급의식에 달려있다.

쇠락해가는 자본주의, 야만이냐 혁명이냐의 시대, 노동자계급의 시대적 필요에 부응하는 혁명당을 건설에 즉각 착수하자!

노동자계급에겐 무기가 되고 자본가계급에겐 실질적 위협이 되는 공산주의 혁명 강령을 건설하자!

Ⅳ

정치적 차이가 지속된 사노위, 결국 파산을 면치 못하다.

정치적 차이가 지속된 사노위, 결국 파산을 면치 못하다.

– 박준선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이하 사노위)는 2010년 5월 9일 결성되었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이하 사노준), 노동자투쟁연대(이하 노투련),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의 일부와 개별 사회주의자들이 결집한 사노위는 1년(혹은 1년 3개월)동안 강령, 조직, 전술상의 통일을 이루어 사회주의노동자정당 추진위원회 건설을 조직의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1년이 지난 2011년 5월말에 열린 3차 총회에서 사노위는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강령초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파산한다. 그런데 사노위가 강령초안을 약속된 시간 안에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점은 사노위 파산 이유의 일부일 뿐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당 강령과 규약은 정치활동의 골격을 보여주는 것인데, 사노위 1년은 정치적 통일성의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정치활동의 차이를 드러내는 과정의 연속이었으며, 그 결론이 사노위의 정

치적 파산이었기 때문이다. 사노위를 통한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은 불가능해졌다.

1. 사노위가 넘어서고자 했던 것 – 바로 조합주의와 써클주의에 침몰되다.

사노위는 출범결의문을 통해서 "그 동안 사회주의자들이 노동자계급 운동 속에서 대담하게 사회주의 강령을 내걸고 공공연한 사회주의운동을 펼쳐내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노동자계급의 정당 건설을 표방한 사노위가 사회주의 정치에 입각하여 활동하여야 한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이 점은 사노위의 정치적 자산인 정치원칙 상에서도 나타난다. 사노위는 '강령(이행요구 포함)에 입각한 노동자 투쟁 조직화'를 통해서 사회주의 정치가 노동자계급 속에 뿌리내려야 함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할 선진노동자들이 노조운동을 넘어서는 전망을 갖지 못한 채 조합주의에 갇혀 있기를 강요받아 온 그 동안의 상황 또한 우리가 사회주의 당 운동을 전면화 시켜내지 못한 책임이 아닐 수 없다. 사노위의 출범은 사회주의자들이 더 이상 협소한 써클의 자족적 울타리에 갇혀 지내거나 대중조직과 노동조합운동 뒤에 자신을 숨기고서 활동하는 것으로부터 확실한 단절을 이뤄내고 새로운 당 운동의 단계를 열어젖히겠다는 결연한 각오"라고 출범선언문을 통해 사노위 출범의 역사적 의미를 선언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방향으로 강령 건설, 노동자공동투쟁 조직화, 사회주의 대중정치 활동의 3가지 축을 설정했다. 이는 한국의 노동자계급이 조합주의를 극

복하지 못한다면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 투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선언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만 사회주의 세력 내의 써클주의와 종파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사노위는 1년간의 과정을 통해서 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직적인 힘과 응집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했음이 드러났다. 해산선언, 즉 정치적 파산을 선언한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이다.

1) 조합주의 극복 – 문건에나 존재하는 수사가 되어 버리다.

사노위는 정치신문에서나 각종 회의자료, 문건에서 조합주의를 넘어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선전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써클이 아닌 직접적인 사회주의 당 건설 일정을 논하는 단계인 사노위에서는 조직 활동 전체에 관통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모든 조직활동이 평가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노위는 일사분란한 실천은 고사하고 분란과 시련의 연속이었다. 이런 구체적인 사례는 자주 등장한다.

– 사노위 회원들, 기아차 무쟁의와 현장조직 뒤에 숨어버리다.

2010년 타임오프를 통한 노동조합 무력화 탄압이 자행되고 있던 시기에 가장 중요한 사업장은 바로 기아차였다. 현대차지부가 2011년 단협 개정에서 타임오프를 다루기로 해 타임오프를 둘러싼 가장 핵심 사업장은 기아차였다.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사노위는 타임오프 저지를 위한 상

황실을 구성하고 활동에 돌입한다. 민주노총 등 주요 산별-연맹이 투쟁을 회피하고 있는 시점에 민주노총 총파업이 필요하다는 연서명 입장서를 조직하고 타임오프에 맞선 투쟁을 각 단사의 현안과 결합시켜 투쟁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기아차 교섭이 여름휴가를 앞둔 상황에서 2010년 7월 21일에 예정된 금속노조 파업에 기아차지부가 반드시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정치신문 준비호 성격인 특보)을 기아차 노동자들에게 배포했다. 그러나 기아차지부는 7월 21일 4시간 파업은커녕 2010년을 무쟁의로 끝냈다. 기아차지부 김성락 집행부는 '금속 노동자의 힘' 소속으로 기아차에서는 '투쟁파'를 대표했다. 그러나 단사의 지불능력과 무쟁의 시 무상주 지급 유혹 앞에 전국적인 투쟁전선과 미래는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당시 사노위 내의 타임오프 상황실은 실제로 타임오프 문제로 현장에서 투쟁을 조직할 시점에 회의조차 소집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기아차에서 무쟁의가 점쳐진다는 보고조차 아주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 조직에 즉각 보고돼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 우연하게 밝혀질 만큼 조직활동에서의 집중력이 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어쨌든 뒤늦게 기아차 소하리와 화성공장의 회원들이 소집된다. 당시 이들 동지들은 거의 분회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그 만큼 조직활동에 대한 몰입도가 매우 낮았다. 이 동지들에게 사노위 중앙집행위원회는 천막농성투쟁에 돌입할 것을 제안했다. 사노위 소하리공장의 회원들은 기아차노조와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의 임원으로 활동했던 동지들이었기에 조합원들을 상대로 타임오프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선전선동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장조직 소속을 떠나 기아차지부의 전직 임원단 공동농성 제안을 통해서 김성락 집행부의 무쟁의에 맞서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결국 기아

차 회원들은 이 투쟁에 돌입하지 않았다. 이유는 이러했다. 농성을 전개한다는 것은 같은 '금속 노동자의 힘' 소속의 김성락 집행부와 맞서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점 때문이란 것이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사노위 1기 중앙집행위원회는 이 문제를 평가하기로 했으나 평가를 진행하지 못했다. 그 주된 이유는 제출된 평가서 초안의 초점이 실제 평가할 내용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평가서 초안은 기아차 투쟁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주의 현장 분회' 건설과 '하반기 현대차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과 연동한 비정규직 투쟁'에 맞췄는데 이것들은 기아차 2010년 투쟁 평가와 무관하게 제기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오히려 중요한 문제는 사노위가 그토록 외쳤던 조합주의를 넘어서기 위해서 조합주의의 포로가 되어있는 김성락 집행부와 현장조직운동—기아차 금속 노동자의 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후 사노위 또는 사노위 성원들이 현장에서 어떤 정치활동을 해야 하는 가를 이끌어 내는 것이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합주의를 넘어서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했다. 사회주의 현장분회를 건설한다는 것은 현장분회를 통한 정치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장분회를 되뇌는 것으로는 대안이 될 수 없다. 현장조직운동이 왜 후퇴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사회주의자의 태도는 무엇인지,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은 현장에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였으며, 이는 기아차 내에서 '금속노동자의 힘'에 대한 태도를 정하는 문제였다.

–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 무능력과 종파주의 문제를 드러내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불거지고 나서 현대차는 사노위가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의 배후라고 악선전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왜곡한 것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그들 스스로 하청인생을 끝장내고 정규직화 투쟁의 선두에 서고자 했던 투쟁이었다. 사노위는 이 투쟁이 더욱 높게 뻗어나가길 바라며 주요 계급투쟁이었던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개입했다. 사노위는 초기에는 투쟁방향을 선전하고 제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공장점거파업이 성립된 이후부터는 연대파업을 조직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나갔다. 이는 매우 정당하고 올바른 것이었다. '다함께'가 평가하듯이 사노위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금속노조가 연대파업을 결정하도록 선도적으로 제기했고, 금속노조 대의원들은 압도적으로 연대파업을 결정했다. 금속 대의원 대회 안건을 발의한 금속 대의원들은 사노위 회원과 주요 투쟁에서 사노위에서 활동하는 동지들과 긴밀한 연대감을 가졌던 동지들이다.

그러나 실제로 투쟁이 벌어지고 나서는 모두가 그랬듯이 사노위도 주전선이었던 울산 역량의 한계로 인하여 활동에 제약을 받았으며 내부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데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투쟁에 대한 정치적 지도력을 세우지 못한 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는 활동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정치조직이라면 주요 계급투쟁에서 투쟁의 방향과 전술을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호흡하는 것이 관건이지만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점거파업기간에 발행된 사노위 특보는

1공장 점거농성장에 전달되지 않았다. 당연히 전달되었을 것으로 판단했던 조직은 이 사실을 투쟁이 종료된 이후에나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술 개입과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1공장 점거농성장에서 대한 침탈에 항의하여 황인화 동지가 분신한 당일에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한 문제를 드러냈다. 당시 민주노총이 주최한 연대 집회를 위해 울산에 내려간 사노위 동지들은 다른 연대 단위 동지들에게 공장 진입을 시도할 것을 제안하고 그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능동성을 발휘했지만 이를 현실화시키지는 못했다. 그 현실적 이유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쟁대위가 제안을 부담스러워 한 때문이라 일정 불가피한 면도 없지 않았지만 당시 시점이 1공장을 고립상황으로 몰아가 이상수 지회장으로부터 농성장 철수 결정을 받아내고자 했던 이경훈 집행부에 맞서 국면을 바꾸어낼 수 있는 기회였다는 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관철시켜 냈어야 했다. 사노위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가장 헌신적으로 연대했던 것과는 별개로 극복해야 할 지점이 있는 것이다.

투쟁이 소강국면에 들어서자 대중투쟁으로 가려졌던 약점은 여지없이 나타났다. 당시 조직의 과제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경훈 집행부가 제시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규직화 투쟁을 요원하게 만드는 빅딜(4대 의제)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선언한 2차 파업을 실제로 성사시키기 위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서 사노위의 개입력을 확장하고 그들의 지지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현대차 비정규직 울산지회의 비리사건으로 투쟁이 교착국면으로 빠져들면서 개입의 여지가 매우 축소되기는 했지만, 사노위는 울산지역위원회와 함께 현대차 비정규직 동지들의 투쟁에 대

한 일상적인 결합이나, 상경투쟁 등에서 주요 연대세력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실질적으로 2차 파업을 이끌어 내는 지도력은 발휘하지 못했다. 울산지역위원회의 자체 평가에서도 드러나듯이 투쟁 주체와의 관계를 정치적인 관계로까지 발전시키지 못한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다. 물론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해결해가야 할 과제이긴 하지만 단지 시간에 맡겨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기존에 익숙한 조직활동과 정치활동의 양식을 사회주의 정치활동으로 바꾸어 내기 위한 목적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요원한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다른 공장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났던 바, 이는 실력의 부족이나 시간의 부족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였다. 현대차 아산공장의 경우, 사노위 회원은 지회장을 했던 동지였다. 그러나 이 동지는 2차 파업을 조직해야 하는 주요한 시점에서 가장 후진적인 입장을 현대차 아산지회 확대쟁대위원회에 제출한다. 아산공장의 사노위 회원은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확대쟁대위원회에 무기한 양재동 상경투쟁을 제안한다. 이 제안은 확대쟁대위원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다. 공장 안 전술이 폭력진압에 무참히 짓밟히는 것을 두려워하는 후진적인 정서는 공장을 벗어나는 전술에 대한 지지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사노위 회원인 충남의 동희오토 동지들은 자신들이 '노건투'에 비해서 확대간부들 사이에서 지지를 받는다며 송성훈 집행부가 문제가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의 한 간부는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의 한 간부에게 '무기한 상경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했고, 현대차 울산공장의 동지는 '그 주장은 미친 소리'라고 답했다고 했다. 이런 상황을 사

노위 울산지역위원회는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듣게 된다. 결국 울산지역위원회는 이 문제를 현대차 공장이 포진한 3개 지역위원회와 중앙집행위원회가 참석한 자리에서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전술을 제기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을 담당하는 2기 중앙집행위원은 울산에 와서 전주공장과 아산공장의 투쟁은 상경투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을 하여 울산지역위원회 소속의 동지들의 항의를 받았다. 당시 울산공장은 회사의 삼엄한 경비로 인하여 옴짝달싹하기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공장 점거는 어느 공장이든 가능한 공장에서 가능토록 만드는 것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2기 중앙집행위원은 어처구니없게도 아산공장과 전주공장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는 울산의 동지들에게 전술을 물어보는 해프닝을 벌였다. 이 문제는 당연히 울산, 충남, 전북의 3개 지역의 동지들이 모인 자리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었다. 이런 현상은 전북지역위원회도 마찬가지였다.

동지들 한번 생각해보라. 수백 명의 동지들이 공장을 버리고 본사에 와서 투쟁을 하는 것은 결국 생산을 멈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패배의식을 조장한다. 그것은 당시 피해최소화냐 모든 하청의 정규직화냐의 중요한 쟁점 중 전자, 즉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정서를 키우는 전술이다. 그렇다면 이런 태도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면밀하지 못한 정세판단이다. 당시 쟁점이 무엇인지, 난관을 뚫고 나가기 위한 전술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실력의 문제로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지

만, 사노위 충남지역위원회와 전북지역위원회가 울산에 비해서 더욱 활동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문제다. 예를 들어 전북지역위원회는 1차 파업 당시 집단 간담회를 조직하는 등 나름대로 개입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투쟁이 소강국면으로 들어서자 가장 조직력이 훼손되지 않은 전주비정규직지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활동은 자취를 감춘다. 1차 파업 당시 자신감을 가진 동지들과는 논의가 가능했지만 투쟁이 소강국면에 들어가 약점이 드러나는 순간 이 역시 정지되어 버린 것이다. 즉 정치적인 관계, 정치적 신뢰를 충분히 획득하고 있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이는 투쟁시기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약점이다. 그러나 이 약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더 문제다. 전북지역위원회 대표는 울산의 동지들에게 울산 비정규직지회의 회계부정으로 전주공장에서 전술 문제를 논의하려던 동지들과의 미팅이 어려워졌다고 했다. 현대차 울산 비정규직지회의 비리사건으로 전주공장에서 투쟁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공동쟁대위를 일상적으로 운영하지도 않고 각각 독립적인 지회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울산 때문에 전주공장에서 논의를 하지 못했다는 보고는 있을 수 없다. 이는 도대체 무슨 보고인가? 그 이후에도 이 문제를 정식으로 보고하지도 않았으며,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차 보고된 바 없다.

둘째, 종파주의의 문제다. 이는 사노위가 당 건설을 위해서 중요하게 극복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이 벌어진 시기에 전북과 아산의 보고는 현 집행부에 대한 비난과 비판만이 존재했다. 특히 아산공장에서는 '노건투'에 대한 반대와 대립을 일삼고,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잘못된 전술을 제기하는 상황까지 치달은 것이다. 심지어는 '노건투'에 비해서 더 많은 지지를 확대쟁대위원회에서 받았다며 자랑거리로 삼았다. 이는 명백한 종파주의다.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수치스러운 일이다.

– 유성투쟁 ; 투쟁을 왜곡하는 발언을 하다

문제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에서도 나타났다. 사노위 충남지역위원회 대표는 처음 공장을 점거하면서 기조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야간노동 철폐, 주간연속 2교대는 불가능한 소리며 민주노조 사수 정도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물론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주장은 기각됐지만 두 차례나 회의 자리에서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 조직 차원에서 논쟁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만큼 사노위는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는 온정주의가 기생하는 조직이라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물론 사노위가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에 헌신적으로 연대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투쟁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개입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3차 총회에서 적들이 사노위를 배후라고 지목한다며 사노위의 존재를 높게 칭송했던 동지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다. 투쟁하는 노동자들보다 후진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을 이루어나갈 수는 없다.

이상 위에서 본 것처럼 사노위는 정치적으로 매우 후진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은 투쟁이 성장하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투쟁이 성장할 때 감히 이런 정서를 드러내기 쉽지 않을 뿐더러 아직

사노위에서 활동하는 동지들이 그렇게 타락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쟁이 소강국면에 접어들면 약점은 여지없이 드러난다.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 상황에서 한국은 계급투쟁이 성장하고 있지 못하다. 한국의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87년 이후 만들어진 민주노조운동으로 대표되는데 그 구성은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금속, 공공 등 어느 업종을 가리지 않고 대공장(대기업) 노동조합운동은 침몰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투쟁이 벌어져도 자본가 전체의 공격에 쉽사리 투쟁이 확대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데 투쟁을 확대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건설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따라서 사노위가 사회주의 혁명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서 더욱 면밀했어야 했다. 약점이 드러나면 약점의 원인을 평가하고 이를 해결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사노위에 기생하는 조합주의와 종파주의는 사노위로 하여금 원칙, 전술 문제에 대해서 시야를 흐리게 만들고 평가부재가 만연하게 했다.

2. 심각한 무규율과 연방주의가 조직을 마비시키다.

사노위는 모든 성원이 하나의 조직기구에 속해서 활동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사노위가 2010년 5월 9일 채택한 정치원칙에 분명히 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사노위 내에서 활동하는 상당수는 이른바 '종이회원'이다. 앞서 언급한 기아차 소하리 공장의 활동가들 역시 종이회원이었다. 조직의 어느 기구에 속하지도 않고 어떤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 회원이었다. 이처럼 사노위 내에는 종이회원으로 존재하거나 이른바 '묻지마

휴직'이 횡행했다. 1년 혹은 1년 3개월 안에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추진위원회를 건설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중단하는 상당수의 휴직 회원이 존재한다. 활동을 쉬는 이유도, 기간도, 활동을 쉬는 기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도 아무도 모르는 그야말로 '묻지마 휴직'이다.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무규율로 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으며, 조직적으로도 이 무규율을 방치하고 인정하는 풍토가 팽배했다. 울산에서는 사노위 활동은 쉬면서 사노위의 주요사업에 배치되어 대중공간에서의 활동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회원이 있어 차라리 탈퇴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 버젓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것은 사노위가 출범하기 직전부터 문제가 되었다. 사노위 건설을 위한 지역순회 설명회 자리와 정치원칙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에 단 1번도 참여하지 않은 회원이 꽤 존재했다.

1) 가입원서 사태 – 조직전체의 방향성보다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어 규율이 무너지다.

사회주의 정치활동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정치토론과 이에 대한 행동의 통일이 중요하다. 물론 이 문제에 있어서 행동통일을 할 수 없는 입장 차이라면 조직을 함께 하기 어려워진다. 그럴 경우, 자신의 신념과 노선에 따라서 조직을 분리하기도 한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차별 없는 정보의 유통, 보고의 일상화, 이를 통한 정치토론, 행동통일이 이루어질 때 조직은 단단해지고 성장한다. 그런데 이런 풍토와 기풍은 사노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사노위는 제안서를 통해 사노준, 노투련, 사노련에 속했던 동지들 외

에도 개별적으로 사노위에 합류한 동지들과의 동등한 논의를 위해서 개별가입을 원칙으로 삼았다. 3개 조직에 속했던 동지들 역시 구 조직에 회비를 납부하고 분담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회원이 사노위로 직접 납부했다. 분담금이 아닌 사노위로의 회비 직접 납부에서 보듯이 사노위는 분명하게 개별가입의 형태를 취했다. 그런데 사노위 1차 중앙위원회가 열리던 시점에서 잠복한 문제는 터지고 말았다. 1기-1차 중앙위원회에서는 모든 회원은 가입원서를 작성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1기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창립총회, 지역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역총회 등에 참여한 동지들을 사노위 성원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었지만 보다 분명히 사노위 회원과 지지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노위 가입원서를 작성하는 것이 조직적으로 필요했다. 더군다나 1기-1차 중앙위원회를 앞둔 상황에서 중앙집행위원회 조직팀은 거제지역에 회원이 4명이 있다는 문서를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러나 실제로 거제에는 회원이 단 1명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는 1차 중앙위원회 회의 직전 수정된다. 이처럼 누가 회원인지, 아닌지, 지지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따라서 1차 중앙위원회에서 조직의 구획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가입원서를 작성하라고 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

그러나 중앙에서 상근자로 활동하던 한 동지는 가입원서 작성을 거부했다. 가입원서 작성을 거부한 사유는 사노위 건설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노위 활동을 결의했는데 또 다시 가입원서를 작성하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충북지역위원회 역시 가입원서 작성을 보이코트하거나 일부에서는 가입원서 작성을 거부하는 동지에 대한 징계나 제재를 논하는 상황에서 자신들도 작성하지 않거나 이미 작성한 것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가입원서 작성이라는 조치가 결국

정치적인 문제로, 조직적인 문제로 부상했다.

이 문제가 조직 내의 분란으로 확장되자 중앙위원회는 가입원서 작성을 결정한 1차 중앙위원회 결정은 유효하나 가입원서 미작성자에 대한 징계는 사노위 단계(즉 공동실천위원회 단계)에서는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기에 이른다. 가입원서 작성을 모두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던 중앙위원들은 다수의 힘으로 가입원서 미작성자에 대한 징계 불가를 결정하려는 중앙위원들에게 옳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결정이므로 그 안건을 철회할 것을 설득했다. 사노위는 강령과 규약을 만들기 전에라도 정치적, 조직적 통일성을 높여가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위 시기에는 가입원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직적 무규율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긴 중앙위원회의 태도였다.

개인의 불쾌감에서 시작된 문제는 이제 조직적인 문제로 완전히 전환되었다. 조직적 필요에 따른 결정이라는 점을 들어서 가입원서를 작성하라는 설득을 진행했지만 결국 중앙위원회에서 가입원서 작성 거부를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 때문에 한 회원은 중앙위원회를 타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에 이르고, 무규율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제출한 중앙위원들의 임시 중앙위원회 소집요구는 무시되었고, 공동대표 1인에 의해서 소집된 임시중앙위원회는 결국 성원부족으로 무산된다. 이로서 1기 중앙위원회는 사실상 마비되는 사태에 직면한다. 이처럼 조직적 필요와 이에 따른 결정이 무시되고, 다수의 힘에 의해서 조직의 규율은 무참히 짓밟혔다.

2) 정치방침은 없고 연방주의가 판을 치다.

사노위는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통해서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을 건설하고자 하는 세력이다. 사노위가 표방한 노동자정당은 사회주의 혁명정당으로 무엇보다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명확히 제출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런 정치방침은 사노위의 정치방침일 뿐 자신이 활동하는 활동가조직, 대중조직 내에서 이 방침을 관철시키고 그에 입각한 활동을 전개한 경우는 거의 없다.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동지들을 하나의 분회로 묶어서 활동하는 약점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조직의 정치방침에 따라 분회 내에서 활동의 방향을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사노위에서 결정한 몇몇 정치방침은 실천되지 못했다. 사노위가 결정한 정치방침은 G20정상회의 대응 방침, 진보정당 통합논의에 대한 정치방침, 상설연대체(현 민중의 힘)에 대한 방침 등이다. 그러나 사노위 회원 다수가 사실상 지도부로 있는 노동전선은 G20 정상회의 대응에 대한 사노위 방침, 상설연대체에 대한 사노위 방침과 다른 행보를 보였다. 보다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조직이라는 점에서 사노위의 방침이 관철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조직 내에서 충분히 토론되어야 했다. 그러나 이런 절차는 간단히 무시되거나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사실상 중앙집행위원회나 중앙위원회에서 확보하고 있지 못했다. '조직 따로, 내 활동 따로'라는 태도로는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대표체인 사회주의 혁명정당을 건설할 수 없다. 여기서 사노위가 조합주의와 부문주의의 난관을 해결해 나갈 실력을 조직 내적으로 갖출 수 없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

결국 사노위 2차 총회에서 평가와 사업계획, 지도부 구성을 하나로 만들지 못하고 2개의 안이 각각 제출되었다. 의견그룹을 구성한 동지들은 조직의 중앙지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를 평가와 사업계획을 단일하게 제출하는 동지들로 구성할 것, 지역에 1명을 기본적으로 배치하던 중앙위원 배정을 없애고, 중앙위원회를 정치적 중앙으로 재구성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오히려 기존의 사업을 안정화하기 위해 중앙위원회를 분회장까지 확대하여 수십 명짜리 중앙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동지들이 다수를 획득했다. 이는 완전히 가분수다. 특히 정치적 발언이 매우 취약하고 불안정한 사노위 같은 조직에서 너무 머리가 큰 중앙위원회는 행동이 느리거나 중앙위원회의 결정은 마치 무소불위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매우 위험한 조직구성이다.

그러나 사노위 2기는 이렇게 운영되었다. 2기를 구성한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가 지도부이고, 중앙위원회는 마치 대의원대회와 같은 구조로 여겼다. 조직의 정치적인 방침은 총회의 결정 범위 안에서 중앙위원회가 담당한다. 이 결정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는 집행을 책임지는 것이 이름에 걸맞는 활동이다. 그러나 2차 총회에서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중앙위원회와 중앙집행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전횡이 이루어지거나 중앙위원회의 느슨함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조다.

3. 정치활동에 재갈을 물리다.

1) 정치원칙을 중앙집행위원과 강령기초위원이 부정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조직이다.

사노위는 출범 전에 사노위 건설을 위해 각각의 조직에서 수임 받은 동지들이 중앙추진팀을 구성했다. 그 이전에는 사노준, 사노련과 개별 활동가들이 모여서 정치노선에 대한 5개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역별로 열린 토론회를 포함하면 수 십 차례에 걸친 토론이었다. 이를 통해서 사노련이 당 건설 공투단을 제안하고 이를 배경으로 하여 결국 사노위 출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사노준, 사노련, 노투련, 3개 조직은 수개월간 사노위 활동의 근간이 되는 정치원칙을 만들어냈다. 물론 사노련의 다수가 현장분회 문제로 사노위 건설에서 이탈하고, 사노련 일부의 동지들만 사노련의 정치적 파산을 선언하고 사노위로 결합했다.

그러나 수개월에 걸쳐 토론되고 마련된 사노위 정치원칙은 1년 동안 활동의 기준이 되지 못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정치적 입장의 통일을 도외시하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거나 자신의 정치적 입장이 없을 경우, 다른 동지들의 주장마저 금지하게 하는 태도가 나타났다. 사노위는 강령(이행요구 포함)에 입각한 노동자투쟁 조직화라는 정치원칙을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위기 하에서 자본에 공세에 맞서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걸고 투쟁에 나서야 함을 의미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자본주의 경제위기가 새로운 질서, 즉 이행을 위한 투쟁요구와 결합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는 결코 색다른 것이 아니었다. 2009년 쌍용차 투쟁을 앞두고 만들어진 경제위기에 맞선 공투본이 채택한 노동자계급의 투쟁요구와 그리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공투체에서 제기된 투쟁요구에는 권력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을 뿐이었다. 예를 들면, 정리해고에 대한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 장시간 노동문제, 주간연속 2교대, 물가폭등과 등록금 문제 등은 하나로 연결된 계급투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오히려 공투본보다 정치적 통일성이 높아야 하는 사노위에서는 논의 자체도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했다. 민주노총이 상설연대체(현 민중의 힘) 건설을 위한 제 조직 간담회를 진행할 시 사노위 중앙집행위원회는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연대, 투쟁을 조직할 수 있는 내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를 통해서만 민주당의 2중대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1기 중앙집행위원회 선전팀장이 작성한 상설연대체에 대한 입장을 토론하는 자리에서 조직팀장은 “왜 선전팀장은 문서만 쓰면 이행강령을 써오는가? 논의를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작성된 이행요구는 소위 좌파단체로 구성된 경제위기 공투본에서 합의한 내용보다도 더 유연하게 작성된 것이다. 한국진보연대와 민주노총 등이 포함된 상설연대체 논의였기에 정리해고 폐지, 비정규직 철폐, 생활임금 보장 하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노동탄압 분쇄, 은행-대기업 몰수 국유화 정도의 수준이었다. 그러나 1기 중앙집행위원회는 이를 충실하게 검토하지 않았다. G20 반대를 위한 사노위 투쟁강령에서는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을 상설연대체 관련 문서에서 밝힌 경제위기 시 노동자계급의 투쟁요구안으로는 채택할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해버렸다.

더욱 큰 문제는 이 논의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태도다. 이행요구를 포함한 노동자투쟁 조직화가 정치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원들이 이

행요구의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고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요구이기에 논의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 문제는 비단 1기 중앙집행위원회에서만 나타난 문제는 아니다. 강령초안을 작성하기로 한 강령기초위원회에서 한 강령기초위원은 이행요구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정치원칙은 타협의 산물이므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위에서 언급한 중앙집행위원과 강령기초위원은 사노위 정치원칙을 토론한 당시 모두 중앙추진팀에서 활동했던 동지들로 정치원칙을 만들었던 동지들이다. 뿐만 아니라 사노위 강령초초안 논의과정에서 창립총회에서 확정된 정치원칙에 있는 이행요구에 대해서 한 회원은 반대하는 입장을 내걸었다. 즉 사노위 정치원칙에 자신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출한 것이다. 사노위 3기 중앙집행위원회와 선전위원회는 사노위 정치신문에 조직의 정치원칙과 반대되는 글을 강령논쟁이라는 이름으로 싣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한 회원의 반론글(이행요구의 필요성)이 다음 호에 게재되었을 뿐 사노위는 이행요구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서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조직하는 정치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조직의 입장은 천명되지 않았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한 강령기초위원의 말처럼 '정치원칙은 타협의 산물'이며, 따라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정서가 팽배하다는 것이다. 조직건설이 목적이 되어 정치원칙을 토론하고 결정할 당시 충실히 토론도 안 하고 정해버린 것이다. 이런 조직은 민주집중제는 고사하고 원활한 조직운영 자체가 어렵다. 왜냐하면 안 지키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이는 가입원서 문제에서도 드러났듯이 사회주의 조직을 정치로 결성한 것이 아니라 경향과 쪽수로 조직하는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지도급 인사들의 정치적 무책임성이다. 회원의 수준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태도를 중앙집행위원과 강령기초

위원이 보인다면 그것은 무책임으로 설명하거나 결정하고 다른 소리하는 모종의 음모적 활동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태도는 정치에 대한 불신, 조직 내부의 신뢰 문제를 양산한다. 아무런 신의를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을 발전시킬 수는 없다.

2)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발행한 소책자에 대한 비평이 반조직행위로 낙인찍히다.

2기 사노위는 〈사회주의 여기에〉라는 소책자를 발행한다. 사회주의를 노동자 대중들에게 쉽게 설명하고 사노위의 활동방향을 담는 소책자였다. 그런데 이 소책자에 대해서 사노위 서울지역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인터넷 매체인 〈사회주의자 통신〉에 비평글을 서울지역위원회 회원이 기고했다. 〈사회주의 여기에〉는 공상적인 내용이라는 비판이었다. 이 비평글이 실리기 전 사노위 2기 중앙집행위원들은 사노위 서울지역 대표에게 발행을 연기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사노위 서울 집행위원회는 기고글이고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으로 발행하게 된다. 그러나 2기 중앙집행위원회는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비평글과 서울지역 인터넷 매체에 대한 비난을 일삼는다.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협박과 더불어 2차 총회를 앞두고 사노위 내에 결성된 의견그룹의 지도자격인 동지의 음모라는 등 온갖 억측과 추측을 동원하여 비평글 게재가 마치 조직을 마비시키기 위한 것으로 폄하되었다.

만약 이 비평글의 내용이 문제가 된다면 이에 대한 내용적인 반론을 게재하면 된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사노위 서울지역

위원회의 다수 회원들은 글을 삭제할 것, 서울지역 집행위원회가 회원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 문제로 인하여 사노위 내의 글 삭제요구를 반대하는 동지들이 입장서를 발표했다. 입장서에서 이 동지들은 정치적인 차이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이 필요하지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글을 삭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서울지역운영위원회가 사과한다는 입장을 채택하려 했고, 결국 서울지역위원회 대표는 운영위원회를 중단하고 총회를 소집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결국 서울지역위원회 총회는 비평글 게재에 대해 사과한다고 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사과한다는 것은 비평글 게재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강하게 밀어붙인 동지들은 삭제요구에서 한 발 물러났는데 삭제 요구는 다른 문제로 불거질 것이고, 이미 게재된 지 오래되어 삭제의 효과가 없다는 것에 착안하여 삭제는 빼고 사과로 마무리한 것이다. 그러나 삭제건 사과건 정치적인 의미는 같은 것이었다.

이 논의과정에서 사과와 삭제를 요구한 동지들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조직을 부정하는 것이다'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하여 모든 사업이 중단된다며 비평글을 쓴 동지와 서울지역위원회 집행위원 동지들이 책임이 있다고 했다. 사업이 중단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노위 서울지역 회원들이 사업에 집중하지 않는 태도를 여전히 보여왔던 것이 문제였다. 이 마녀사냥식의 태도로 결국 2기 사노위 서울지역위원회 대표와 집행위원은 총사퇴하고 결국 비대위가 구성되었다. 그렇게 정치적인 주장에 대해서 민감한 사노위 회원들은 왜 다음의 문제들에 대해서 침묵할까?

2기 사노위는 정치신문에 리비아 투쟁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물론 리비아 문제에 대해서 사노위 내에서 통일된 입장은 없다. 두 개의 글은 서방의 개입에 맞서 가다피를 일단 방어하고 그 후에 가다피에 맞서 싸우자는 글과 서방의 개입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가다피에 맞서 더욱 더 본질적인 투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글은 비슷한 분량으로 정치신문에 사노위의 입장이 두 개라는 것을 소개라도 하듯이 실렸다. 리비아 투쟁은 노동자계급이 죽고 사느냐의 문제다. 혁명이냐 진압이냐 삶의 갈림길에서 투쟁하는 동지들이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인 사안이자 긴급한 전술의 문제다. 이런 긴급한 문제에 대한 차이도 인정하고 너그럽게 글을 인정하는 동지들이 왜 비평글에는 마치 모든 조직 내의 문제가 비평글을 쓴 동지와 그것을 게재한 서울지역위원회 집행위원회에 있다고 했을까? 그것도 글을 삭제하라는 통제수단을 통해서 말이다.

이는 앞서 말한 정치원칙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공연히 게재해주는 3기 선전위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행요구를 포함한 강령으로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는 정치원칙에 반해서 이행강령(요구)는 필요 없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게 한단 말인가! 물론 이는 3차 총회 후 사노위 해산 선언자 모임 동지들이 사노위를 떠난 후다. 어쨌든 이 글에 대해서 삭제를 요구하거나 사과를 요구하는 태도를 본 적이 없다.(사과나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노위 3기 중앙집행위원회와 선전위원회는 이런 입장에 대해 이행요구를 포함한 강령을 만들 것이며, 이를 통해 노동자계급의 투쟁에 개입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어야 한다. 그러나 조직적 입장 대신 회원 개인이 이행요구가 필요하다는 반론을 다음 신문에 게재하는 것 이상의 다른 어떤 대응도 없었다. 그로서 이행요구는 정치원칙에서 또 다시 아

무 필요가 없는 것으로 전락한다. 이행요구에 대한 정치원칙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삭제를 회원들이 결정 혹은 논의조차 한 바 없다. 이행요구를 포함한 강령에 입각해 노동자 투쟁을 조직하기로 한 것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 정치원칙이자 사노위를 건설하면서 수개월간 토론한 내용이다. 사업결정만 나고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집행위원회에 위임되어 작성한 글을 회원이 비평한 것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구하고, 총회에서 스스로 결정한 정치원칙을 반대하는 입장은 버젓이 기관지에 게재해주고도 그에 대한 입장조차 조직의 책임 있는 기관이 밝히지 않는 조직은 세상에 본 적이 없다.

이런 점을 보았을 때 왜 중앙집행위원회와 서울지역의 분회장들과 회원들의 다수는 비평글에 대해서 민감했을까? 그 이유는 소수파의 다수파에 대한 비판을 용납할 수 없다는 횡포에 불과했다. 비평글을 제외하고 당면한 입장을 취하는 점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는 경우는 여러 번 있었다. 예를 들어 2기 중앙상근자였던 동지가 작성한 이경훈 집행부의 채용세습안에 대한 글은 이경훈의 단협을 처리하는 과정은 문제가 있지만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이 정한 요구안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노동자 투쟁은 이런 자본가들의 태도에 맞서 싸웠다고 주장하여 결과적으로 채용세습요구안은 요구안으로 정당하다는 논지의 글을 발표한다. 이에 사노위 울산지역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조직에 항의한다. 그러나 사노위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위원회, 선전위원회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중앙위원회에서 왜 울산의 동지가 글을 작성하도록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질의와 선전위원장의 답변 정도가 전부였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울산에서 활동하는 다함께 동지는 "사노위는

이경훈의 채용세습안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취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다함께 동지가 그렇게 말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글을 읽기에 불편하게 작성되어 그마나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이고 꼼꼼히 글을 읽었다면 사노위는 결과적으로 이경훈의 채용세습안에 대해서 단협의 요구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읽을 수밖에 없는 글이었다. 사노위 울산지역위원회는 이경훈의 채용세습안이 현대차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요구안으로 확정되자 이는 반노동자계급의 요구안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었다. 이처럼 조직 외부에서 당면한 전술, 노동자계급이 취해야 하는 입장에서 사노위를 왜곡하는 입장이나 문제가 있는 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신사양반들은 추상성이 매우 높은 글에 대한 반론에 대해서 무지막지한 칼날을 들이밀었다. 비평글은 소수파가 썼고, 이행요구 반대글과 채용세습에 대한 글은 다수파가 작성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4. 변화와 개선의 여지가 없다.

1) 조직 내에서는 목소리를 높이고 조직 외부에서의 왜곡에 그냥 침묵하다

사노위는 세계 자본주의 위기 앞에 '혁명이냐, 야만이냐'는 세계정세에 조응하여 다가올 혁명의 시대를 예비하고자 사회주의노동자당을 건설할 것을 조직의 목표로 삼고 있다. 즉 노동자계급의 일환으로 노동자계급과

함께 호흡하고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사노위는 노동자계급을 향한 적극적인 정치활동에 있어서 여전히 미약했다. 앞서 말한 조합주의에 무너진 현장투쟁개입, 무규율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도 여전히 미진한 태도를 보여 왔다.

사노위가 건설되기 직전 2010년 지자체 선거에 대해서 사노위의 가장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있던 사노준은 부르주아 야당과 연합하지 않고 노동자계급의 투쟁강령으로 지자체 선거에 개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충남사노준은 충남진보진영연석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결국 진보신당 이용길 후보를 추대하는데 동참하기에 이른다. 이 사실은 미디어 충청에 기사화되었으며, 당시 사노위 건설논의를 수임 받았던 중앙추진팀은 충남사노준이 전국적으로 부르주아 야당과 함께 하고 있는 진보신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판단 하에 충남사노준이 충남진보진영연석회의에서 철수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충남사노준은 이 문제는 사노위 건설을 위한 중앙추진팀에서 사실관계를 모르고 제기한 것이며, 동지적인 애정을 져버렸다는 입장을 사노위 1기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한다. 수차례 이 문제를 논의한 사노위 1기 중앙집행위원회와 중앙위원회는 사실관계를 바로잡되 미디어충청 등에서 충남사노준이 진보신당 후보를 추대했다는 기사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충남사노준은 이 결정을 다시 받아들이지 않은 채 시간만 끌었고, 이 문제는 흐지부지된다. 그러나 충남진보진영연석회의의 결정은 이후에도 다함께의 성명에도 언급되었고, 이 연석회의에 사노준도 함께 했다고 밝혔다. 이제 사노위 회원들이 된 충남의 동지들은 자신들의 결정과 다른 언론 기사, 대외적으로 발표된 타 조직의 입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기사를 접하거나 다함께의 성명을 읽은 동지

들은 충남 사노준 동지들이 진보신당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아직도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사실관계를 다르게 파악하여 문제가 되었다면서 조직 내부에서는 창립총회의 사실상 보이콧, 정정요구, 동지적 신뢰 문제를 거론했던 동지들은 더 많은 노동자들이 보는 대외적인 기사, 성명에 대해서는 왜 정정요구를 하지 않았을까? 사실관계를 떠나 정치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의 정치방침이나 전술은 노동자계급의 것이다. 해당 조직의 이해에 입각하여 정치방침을 결정하거나 전술을 구사하지 않는다. 노동자계급이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정치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밝히는 것이 정치방침이다. 그러나 이 정치방침을 노동자들에게 적극 선전, 선동하지 않고, 심지어 (충남 사노준 출신 동지들의 주장에 의하면) 왜곡된 기사와 성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결국 왜곡된 기사와 성명을 노동자들은 믿게 된다. 사회주의 정치활동은 개량주의 정당의 지도부와 책상머리, 협상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계급에게 천명되고 노동자계급의 힘으로 개량주의 지도부를 밀어붙일 정치방침과 전술이 사회주의자들에게는 절실한 것이다.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노동자당, 혁명정당 건설은 요원한 일이다.

수차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평가하고 개선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자세도 문제다. 조직 내부에는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압력을 행사하면서 노동자들을 향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는 비정치적인 태도,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는 태도는 조직의 성장을 가로막

는 태도다. 사노위는 이런 문제는 물론이고 기본적인 태도조차 개선할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2) 지도력을 갖출 태도가 결여되었다.

사노위 건설 이전 사노준과 노투련은 당 건설 기한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사노련을 비판했다. 결국 사노련은 이 비판의 긍정적 측면, 사업이 탄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한을 설정하고 매진해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1년 혹은 1년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사회주의노동자당 추진위원회 건설에 매진하자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사노위가 건설되자 명확히 기간을 설정하고 매진하자는 태도를 취했던 동지들은 그만큼의 역량을 조직에 투여하지 않았다. 거의 조직의 2/3를 차지하는 사노준은 중앙집행위원회에 공동대표 1인, 비상근 중앙집행위원 1인, 상근 중앙집행위원 1인을 배치한다. 비상근 중앙집행위원은 사실상 회의만 나올 뿐이었으며, 공동대표 1인은 집행의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다. 나머지 중앙집행위원은 사노련 출신 공동대표 1인, 사노련 출신 중앙집행위원 1인, 노투련 출신 중앙집행위원 1인이었다. 전국적인 조직이고 공세적인 사업으로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선전, 선동하고, 주요 계급투쟁에 결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도력과 집행력은 매번 곤두박질 쳐졌다. 중앙 상근자 역시 자신의 사업장 문제로 결합하기 어려웠던 동지 1인, 스스로 그만둔 동지 1인, 가입원서 문제의 핵심당사자 1인 등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못했다. 이런 약점이 더욱 크게 드러난 이유는 사노련 다수파의 사노위 이탈로 사노위 건설을 서두른 측면이 존재했다. 그러나 약점의 근본원인은 당 건설 투쟁을 소리 높에 외치지만 실제로 자신의 몸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회원들의 문제, 주요 지도급 회원들의 나태함을 때문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조차 1기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거부되었다. 이유는 하나다. 그냥 대충 넘어 가자는 태도이다. 이런 안이한 태도는 결국 1기 중앙집행위원회의 붕괴로 나타났다. 사노위는 창립총회에서 총회에서 선출되어야 하는 중앙위원이기도 한 중앙집행위원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충원하고 중앙위원회의 승인으로 활동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는 창립총회 당시 구성된 중앙집행위원회의 약점을 보완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1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선전팀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노력을 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답은 대안을 가져오라는 것이었다. 즉 누가 해야 하는지 알아서 물색하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 이에 선전팀장은 중앙위원회에 이 상황을 보고하고 중앙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공동대표 중 1인이었던 사노련 출신 동지는 직접적으로 실무를 하지 않는 공동대표 2인 중 1인은 집행위원장의 역할, 1인은 신문발행의 책임을 맡자고 제안했지만 이 역시 반대에 부딪혔다.

정치조직은 정치노선에 입각하여 건설된다. 따라서 지도부의 지도력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특히 사노위가 조합주의와 관료주의, 써클주의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매우 꼼꼼한 지도력의 행사가 중요했다. 그러나 이런 태도를 완전히 결여한 사노위는 결국 지도력을 구축하는데 실패하고 만다. 이는 2차 총회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고, 일부는 강력한 지도부를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다른 한편은 입장이 달라 (2개의 안

이 제출되었지만) 무조건 공동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결국 공동지도부 구성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른 노선이 하나의 지도력으로 구축되면 결국 매번 입장의 차이로 아무 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공전하는 1기 중앙집행위원회를 반복하기 때문에 소수파는 공동지도부를 수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2기와 3기 지도부는 그만큼의 역량을 투여하지 못하고 있다. 주장은 있으나 그 주장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태도, 사회주의 노동자당건설을 위해서 자신의 역량을 재배치할 태도를 결여하는 조직문화로는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을 위한 지도력을 구축할 수 없다. 이 문제는 단지 역량배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조합주의에 굴종하는 태도, 연방주의와 무규율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사노위는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을 건설하고 혁명적인 지도력을 갖출 수 있는 기본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V

마르크스주의와
한국 사회주의(전체)운동에 대한 회고

마르크스주의와 한국 사회주의(전체)운동에 대한 회고[1)]

– 오세철

1. 들어가며

소련 붕괴 이후 한국의 사회주의(정치)운동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마르크스주의의 역사관으로 다시 정립하는 작업은 마르크스주의 역사 연구자뿐만 아니라 혁명적 사회주의자의 몫이다. 이 글은 그러한 책임 있는 연구 성과물이 아니다. 단지 이 글은 지금까지 내가 몸담아 왔던 사회주의 정치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서 역사를 거꾸로 뒤돌

1) 한국 사회주의 운동의 역사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여전히 글 쓴 사람의 입장이 전제된 주관적 평가나 단상이 오히려 토론을 위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나는 몇 년 전 이런 글을 써서『다시, 혁명을 말한다』(빛나는 전망,2009)에 "마르크스주의와 한국 사회주의(정치)운동에 대한 회고"로 실은 바 있다. 이 글 이상의 글을 짧은 시간에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서는 2005년 이후「혁명적 맑스주의자 모임」이후 현재까지에 대한 평가를 정리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정도로 보완하겠다

아보는 회고의 글임을 밝힌다.

역사에 대해서 지금 내가 지니고 있는 정치적 입장과 원칙 위에서 나름대로 해석하고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글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진다. 1990년, 2004년, 그리고 2006년 내가 쓴 글을 차례로 인용하면서 시작하려 한다.

"마르크스가 오래전에 관념론과 교조주의 그리고 모험주의, 기회주의와 끝까지 싸우며 비판했던 것처럼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유물론의 올바른 정립을 이루어야 한다. …… 이른바 '개혁사회주의'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회의의 늪에서 빠져나와 교조주의의 고집과 우경화의 변질을 준엄하게 꾸짖으면서 관념론, 수정주의, 모험주의, 소시민적 혁명주의와 싸워야 한다. …… 마르크스주의의 주요 원칙인 이론과 실천의 통일, 혁명적 사유와 행동의 통일을 굳건히 견지하면서 과학적 사회주의의 빛나는 전통성을 훼손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오세철, 1990: 16–19).

"20여 년간 사회주의 정치운동에 몸담아 오면서 내가 끊임없이 문제제기 하고 비판했던 것은 사상의 동요와 변질이었다. 이런 사상적 동요가 현장과 대중조직뿐만 아니라 정치조직과 사회운동조직에서도 확산됐고 전체 운동을 합법 개량주의의 늪으로 빠지게 한 요인이 됐다.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체제, 이념, 정책을 모두 포함한)의 위력은 동북아를 포함한 한반도에도 어김없이 전면적으로 관철되고 있으며, 한국의 대중운동과 정치운동 또한 신자유주의에 포섭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 합의주의의 틀 속에서 현장에 기반을 둔 대중투쟁을 포기하고 교섭주의로 나아가는 민주노총과 억압받는 현장에 기반을 둔 혁명적 사회주의정치를 포기하고 사회개량적 선거정치로 급속하게 전화된 민주노동당이 혁명적 사회운동 영역을 시민운동으로 재편하면서 신자유주의의 이중대로 나아갈 개연성이 크다. 이는 오랫동안 혁명적 운동의 전통이 뿌리내린 유럽

의 경우에도 벌어지고 있는 보편적 경향이며 제3세계의 경우에는 오히려 신자유주의로의 포섭 속도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오세철, 2004).

"우리는 지금까지 세계 여러 곳에서 정기적으로 마르크스주의자 대회(모임)가 열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강단의 추상적 논의나 자본주의의 좌파에 속하는 정치적 세력들의 연대를 위한 행사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자본주의 데카당스 시대의 객관적이고 주체적 조건이 야만과 전쟁을 넘어서서 진정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더욱더 깊이 인식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계급은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혁명적 정치세력은 전망을 분명하게 열어젖히지 못하고 있지만 과거 혁명운동이 국제주의의 원칙을 저버리면서 참담한 패배를 경험했던 역사를 뿌리로부터 반성하면서 우리는 하나의 현장,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을 넘어서는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의 단결을 이루어내야만 한다. 이번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 국제대회는 한국의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들과 세계의 좌익공산주의자들과의 소중한 만남과 토론의 마당이며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진영 내의 입장과 노선 차이를 드러내고 소통하는 첫 번째 경험이 될 것이다. 대회의 주제를 이론, 실천, 전망으로 구분하고 이를 꿰뚫는 인식의 지평을 넓혀 나가는 것이 이번 대회의 주요 목표이다. 우리는 이번 국제대회를 시작으로 세계의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세력이 연대하고 단결하여 세계혁명을 향한 힘을 축적하고 세계의 프롤레타리아트와 함께 그 역사적 과업을 완수하기를 바란다"(오세철, 2006).

그 당시 전술당으로서의 '민중당' 건설에 인텔리가 집단적으로 참여했지만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제기와 소련 붕괴로 인한 사상 동요에 항의하여, 인텔리 그룹과 젊은 활동가 그룹이 탈당하게 되고 그 이후 나는

마르크스주의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사회주의 정치운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 위의 인용문은 그러한 일관성을 표현하는 보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사회주의 운동세력이 지녀왔던 한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다.

2. 역사적 평가에 필요한 마르크스주의의 원칙

1980년대의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이해를 지금의 시점에서 뒤돌아보면 얼마나 단편적이고 피상적이었는지 깨닫게 된다. 마르크스엥겔스의 전집이 일부 번역된 것도 1990년대에 들어서였고 1987년 이후 레닌전집의 일부가 번역되어 나왔다. 이른바 '마르크스-레닌주의'로 통칭되는 스탈린주의를 마르크스주의와 동일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 당시의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광주민중항쟁을 겪으면서 민족주의적 볼셰비즘에 대한 친화적 경향이 더욱 커졌으며 군사 파시즘의 한국과 짜르 체제의 러시아 상황을 비교하면서 혁명적 정세를 해석하려는 경향도 정서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일본 번역서를 통한 독해, 주체사상의 도입들이 이러한 척박한 이론풍토에 가세하면서 마르크스주의는 스탈린주의의 교리로 채색된 채로 교조화됐다.

'과학적 사회주의'로 부르는 마르크스주의는 유사한 공산주의적 사상과 구별하기 위해 쓰였다. 초기 기독교, 스팔타쿠스 노예반란, 영국 농민봉기와 같은 초기 공산주의 사상은 돌아갈 수 없는 잃어버린 공동체를 찾으려는 복고적이고 신비주의적 요소를 지닌 사상이었고 16세기 독일 뮌처(Mu¨nzer)가 이끄는 재세례파(Anabaptist) 운동으로부터 영국 내전의 윈스탄리(Winstanley)와 디거스 (Diggers)로 그리고 프랑스 혁명의 바뵈

프와 '평등인의 음모'(Conspiracy of the Equals) 같이 종교적이고 계시적 관점에서 착취적 사회질서로부터의 인간해방의 능력을 강조하는 운동, 그리고 산업자본주의의 공포를 비판한 오웬, 생시몽, 푸리에의 사상은 자본주의에 의한 역사적 진보와 과학적 세계관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트의 부상에 근거한 마르크스의 '과학적 사회주의'와 구별된다.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의식이 프롤레타리아트로부터 나오고 공산주의 전위는 이 과정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50년 후 카우츠키가 "외부로부터" 노동계급에게 주입되는 공산주의 의식을 가진 사회 인텔리켄챠라는 테제에 대한 반박이었음을 웅변적으로 말하고 있다. 또한 『1844년 경제철학수고』는 자유로운 사회에서의 인간 활동의 본질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는데 이 글이 헤겔의 철학체계의 주요 개념인 소외를 다루었기 때문에 "마르크스 이전"의 글로 여겨졌지만 마르크스의 초기 저작과 『자본론』같은 후기 저작 사이에는 근본적인 연속성이 있으며 그 후『요강』에서도 이어진다. 여기서 우리는 마르크스가 말한 공산주의를 요약할 필요가 있다.[1)]

첫째 밑으로의 "평등화"라는 의미와는 반대로 "역사의 수수께끼가 풀리는" 인류의 거대한 진보이다. 둘째, 특히 화폐와 자본의 지배하에 있는 생산이 인류를 끊임없이 경쟁하는 원자로 갈라놓는다면 공산주의는 인간의 사회적 본성을 회복하게 해서 노동의 만족이 타인의 욕구를 위해 이루어지게 한다. 셋째, 분업이 개인 수준에서 극복되는 것은 생산자가 더 이상 단일한 활동형식(육체노동이건 정신노동이건)에 매이게 하지 않고 정신적 · 육체적 · 예술적 · 지적 활동이 결합되는 전인적 인간이 된다. 넷째, 빈곤과 강제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은 세계에 대한 새로운 경험, "모든

1) "공산주의는 근사한 사상이 아니라 물질적 필요성이다"(International Review, 2006 : 10–19)

감각의 해방"의 길을 열어 놓는다. 인간은 더 이상 자연에 반대하는 원자화된 자아가 아니라 자연과 통일된 새로운 의식을 경험한다.

마르크스주의 원칙은 1차 인터내셔널에서의 논쟁과 고타강령비판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1차 인터내셔널에서의 논쟁은 첫째, 부르주아 개혁주의자에 대항하는 노동계급의 자기해방의 원칙과 부르주아 민족주의자에 대항하는 계급 자율성의 원칙이고 둘째, 반정치적 입장과 무정부주의자의 연방적 편견에 대항하는 프롤레타리아 정치와 집권조직의 방어이다. 이 두 가지 원칙은 사회주의 정치운동을 평가하는 기본이 된다. 1875년 '독일사회주의노동당'은 라쌀레의 국가숭배주의와 베벨과 리프크네히트 같은 마르크스주의 분파의 타협의 산물인데, 마르크스는 『고타강령비판』에서 혁명과 공산주의 문제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첫째, 당면한 개혁과 장기적 공산주의 목표를 혼합시킨 강령을 비판하고, 둘째, 사회민주주의를 민주적 개혁의 계급당으로 만든 경향을 반대하여 당의 계급적 성격을 분명히 했으며, 셋째, 교육받은 엘리트로서의 당의 대체주의적 사고를 반대함으로써 부르주아 편견의 척결을 주장했고, 넷째, 개혁을 통해 사회주의로 이끄는 "인민국가" 개념에 대한 환상에 반대했으며, 다섯째, "공평한 분배"를 요구하는 강령에 반대하면서 교환과 가치법칙의 폐지를 요구했다.

마르크스주의의 또 하나의 원칙은 지배계급과 소부르주아지로부터 오는 이데올로기와의 투쟁이다. 그러한 이데올로기는 종파주의, 개인주의, 기회주의 그리고 모험주의 등이다. 종파주의는 조직에 대한 소부르주아 개념의 전형적인 표현으로서 자신을 "세계의 유일한 하나"로 보고 프롤레타리아 조직의 다른 조직을 경쟁자나 적으로 보고 논쟁을 회피하는 경향이다. 개인주의는 역사주체를 개인으로 인식하고 투쟁을 모든 사람에 대한 개인투쟁으로 본다. 소부르주아지거나 프롤레타리아 조직에 새롭

게 프롤레타리아화된 요소인 농민, 장인, 인텔리, 학생의 경향이다. 또한 기회주의는 역사적 미래가 없다는 인내심 부족으로부터 나타나며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 두 계급 사이의 입장과 이해를 조화시키려는 경향이다. 끝으로 모험주의는 비타협과 급진화라는 이름 아래에서 어느 때나 부르주아지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다고 보고 투쟁조건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결정적"인 투쟁에 돌입한다고 하는 경향이다. 따라서 실패할 투쟁으로부터 노동계급을 방어하려는 프롤레타리아트와 마르크스주의의 흐름을 기회주의로, 심지어 반동적이라고 낙인찍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 실제로 이러한 경향은 기회주의와 같은 소부르주아 조급성 때문에 기회주의로 수렴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와의 투쟁의 보기는 다음과 같다. ① '국제노동자협회' 내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벌인 바쿠닌에 대한 투쟁, ② 1860년대와 1870년대의 라쌀레의 '국가사회주의'에 대한 투쟁, ③ 19세기 말 베른슈타인류의 수정주의와 개량주의에 대한 투쟁, ④ 멘셰비즘에 대한 투쟁, ⑤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카우츠키와 중도주의에 대한 투쟁, ⑥ 코민테른의 퇴행과 1920년대와 1930년대 공산당(스탈린주의)에 대한 투쟁, 그리고 ⑦ 1930년대 트로츠키주의의 퇴행에 대한 투쟁이 여기에 속한다.

3. 1990년대 초반의 사회주의(정치)운동에 대한 평가

1989년부터 1991년 중반까지 사회구성체를 둘러싼 논쟁은 주로 ≪현실과 과학≫과 ≪우리사상≫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현실과 과학≫은

PD를 대변한 반면 ≪우리사상≫은 ND를 대변했다. ≪현실과 과학≫은 연구자 중심의 집단이었지만 '노동계급' 그룹과 관련이 있었고, 이들 그룹은 '인민노련' 및 '삼민'과 통합하고 그 주력인 인민노련은 민중당의 다수파로서 그 이후 합법개량주의의 주도 세력이 된다. ≪우리사상≫은 '사노맹'의 기관지 역할을 했다(사노맹도 민중당에 개입했다). ≪현실과 과학≫은 소련공산당 제26차 당대회(1981년)와 제27차 당대회(1986년)의 논쟁을 검토하면서 27차 당대회에서의 종속국독자론의 기각을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역사발전의 보편성으로서의 세계사 또는 그 합법칙적 발전으로서의 현대에 대한 설명에 불과하다. 이제 역사발전의 특수성 또는 그 합법칙적 발전의 차별화, 즉 유형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가 신식국독자론이라 부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변증법적 통일을 가리킨다"(윤소영, 1999: 172).

그리고 제4집에서는 "그 동안 우리는 한국판 쁘띠부르주아 민족주의인 주체 사상과의 사상 · 이론을 투쟁을 통해 노동계급의 관점에 입각한 변혁의 과학적 전망을 모색해왔다. 그 결과물로서 우리는 (적어도 2집 이후로는) 신식국독자/반제반독점PDR론의 '세계'를 나름대로 제시하기에 이르렀다"(≪현실과 과학≫ 제4호, 1989: 8). 여기서 이 그룹이 비판한 식민지반봉건사회/반제반봉건NLPDR론 은 마르크스주의와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 뒤의 논쟁의 초점이 NDR론 쪽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현실과 과학≫이 ND 그룹을 비판하는 강도는 점점 커진다.

"이정로 씨는 불행히도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이 제2인터내셔널의 기회주의자들(카우츠키, 플레하노프, 심지어는 트로츠키)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말과 실천은 마르크스주의 과학으로부터의 일탈이

라는 것을 이해할 능력이 없다"(이창휘, 1989: 11).

"우리는 다시 한 번 '이론적 청산주의'나 경험주의와 일선을 분명히 그어두지 않으면 안 된다. 소위 '계급투쟁적 관점'에 의한 비판이 그 하나이다. 이러한 좌익 비판가들은 우리의 이론적 탐구에 대해 '계급투쟁적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실제로는 진지한 이론적 탐구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을 혁명적 공문구로 덮어두는 것에 다름 아니다"(≪현실과 과학≫ 제6호, 1990: 7).

"페레스트로이카를 계기로 준동하고 있는 비당파적 조류의 본질이 민중의 민주주의적 열망을 수단화하고 그 결과로서 민중의 투쟁을 자유주의 세력의 부수물로 전락시키는 데 있음을 최근의 양상에서 확인됐던 터이다"(≪현실과 과학≫ 제9호, 1991: 6).

이에 대해 ND 그룹의 본격적 대응은 ≪우리사상≫ 창간호(1991년 5월)에 잘 드러나 있다. 창간사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노동해방' 사상은 본래 물질적 힘과 실질적 투쟁을 지향하는 혁명적 사상으로 태어났다. …… 미약한 사상적 조직적 수준에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며 시작한 남한의 혁명운동은 80년대를 거치며 실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반제투쟁, 반파쇼투쟁, 통일투쟁의 각 영역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었으며 무엇보다도 혁명운동의 주체로서 노동자 계급과 근로민중이 자유민주주의 부르주아세력과 구별되는 독자적 정치세력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 그 간의 과정에서 이론 수준은 극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사회구성체론, 혁명론, 국가론, 계급론 등 남한 혁명의 전략과 전술 등 혁명운동의 전반에 이르는 이론적 기초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우리사상≫ 창간호, 1991: 창간사).

이들 그룹은 남한을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로 규정하면서 자신들의 이론적 기초를 '마르크스-레닌주의'로 부르고 있다. PDR론을 비판하

면서 PD의 독점강화 종속심화 테제의 한계를 비판하고 북한과의 연대를 통한 민족민주혁명을 주장한다.

"PD파의 '좌'편향적, 경제주의적 변혁이론을 비판하기 위하여 …… 이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남한 당면 변혁은 '노동해방변혁 단계'와 질적으로 구분되는 '민주주의 변혁단계'라고 규정한다"(≪우리사상≫ 창간호, 1991: 104).

이들 그룹의 당시 소련과 북한에 대한 인식은 눈여겨볼 만하다.

"신연방안의 국민투표에서의 통과를 통해 고르바초프로 대변되고 있는 '정통 마르크스주의와의 중립적 세력연합'이 부르주아적 개혁세력으로부터의 승리를 거두면서 가시화됐다"(≪우리사상≫ 창간호, 1991: 104).

"중국, 쿠바, 북한은 굳건한 반제 사회주의혁명의 기지이자 프롤레타리아적 개혁의 전형으로서 전 세계 노동자 계급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우리사상≫ 창간호, 1991: 36).

"북한이 최근 거두고 있는 '통일운동의 진전과 새로운 동북아 질서의 구축'의 측면에서의 중대한 성과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 이러한 성과는 북한이 부르주아적 개혁 · 개방 압력으로부터 사회주의적 혁명운동을 굳건히 수호하고 공산주의로의 이행을 앞당길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다"(≪우리사상≫ 창간호, 1991: 39-40).

이 시기의 논쟁을 돌이켜보면 그 당시 우리 사회 이론진영과 실천진영이 국제주의적 마르크스주의와 너무 떨어져 있었음을 실감할 수 있다. 몇 가지로 정리해 보자.

첫째, 세계혁명에 대한 폭넓은 역사인식이 부족하여 러시아 혁명의 영향력이 우리나라 사회주의운동에 깊이 침윤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1930년대부터 코민테른 영향 아래 종속되어 있던 과거로부터 한국 전쟁

으로 인한 분단, 자생적 사회주의운동의 고사로부터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 축적되지 않은 사회주의운동의 사상과 이론 그리고 올바른 실천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는 PD와 ND의 입론이 여전히 그 당시 소련 공산당의 논쟁이나 아니면 레닌과 스탈린 저술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대한 역사적 접근이나 마르크스주의의 전통과 원칙을 지키려했던 유럽 공산주의운동의 역사와 사상가에 대한 인용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혁명이 성공한 러시아를 본보기로 보면서 실패한 유럽 혁명을 뒤돌아보지 않는 배타적 정서도 한몫을 했다고 본다.

둘째로 이른바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본질 분석과 함께 세계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전히 분석수준이 일국적 수준에 머물고 있었고 이는 민족주의적 색조와 함께 스탈린주의의 일국사회주의론에 함몰되어 있었다. 자본주의 쇠퇴가 세계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개되면서 전쟁과 파시즘으로 이어지는 세계 역사에 대한 역사 유물론적 해석과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주체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변증 유물론적 해석을 총체적으로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혁명과 반혁명의 소용돌이를 구분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이론적 기반을 '마르크스-레닌주의'로 부르는 것은 기본적으로 반혁명의 스탈린주의를 교조로 삼은 결과 마르크스주의의 기본원칙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양진영 테제도 소련을 사회주의의 중심으로 보고 세계 부르주아지와 투쟁하는 세력으로 규정하여 동맹 · 연대 세력으로 수용한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잉여노동을 점유하고 국가자본의 축적이라는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계급으로서의 "사회주의 국가"는 낡은 부르주아지에 불과하다. 국가와 그 관료조직에 의한 자본주의적 생산의 집중화와 계획화는 소유의 폐지를 향한 진전이 아니라 착취강화를 위

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없었다.

ND의 소련과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인식은 이를 극명하게 드러내 주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인식은 이러한 규정의 극치에 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현실과 과학≫ 역시 소련 등의 국가에 대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지만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신뢰를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ND와 차이가 있다면 2단계혁명론을 부정하면서 민중민주혁명론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어쨌든 이들 세력은 탄압으로 소멸됐거나 스스로 합법개량주의로 전환됐다. 서로 종파주의, 기회주의 또는 모험주의로 비판하여도 이는 원래의 의미와 다른 의도로 사용됐다. 요약하면 이 당시 논쟁은 소련의 몰락이라는 중대한 역사적 경험을 경과하면서도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의 본질, 세계 자본주의의 데카당스의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에 기반을 두지 않은 남한 사회에서의 혁명론, 조직론에 매달리면서 마르크스주의의 국제주의와 분리됐다. 한국사회성격 분석이나 일국혁명론은 여전히 소련과 북한이라는 스탈린주의의 틀 속에 갇힐 수밖에 없었고 마르크스주의와의 올바른 만남을 단절시켰다.

4. 1990년대 중반 국제 사회주의운동에 대한 평가

스탈린주의를 '마르크스-레닌주의'로 미화시킨 스탈린의 영향력으로부터 해방되기는 쉽지 않았다. 소련 같은 국가자본주의의 몰락을 목격하고 그것이 사회주의 모델로 보았던 수많은 활동가들은 푯대를 잃고 방황하거나 좌절했으며 소부르주아의 본성으로 돌아가거나 부르주아지에 투항했다. 일부 연구자들은 마르크스의 원전을 찾아 읽고 마르크스주의의 원칙으로 돌아가려는 학습을 시작했고 일부는 재빠르게 포스트류의 담

론으로 간판을 바꾸었다. 여전히 스탈린주의를 고수하려는 세력은 스스로를 '레닌주의자'로 부르고 레닌의 저작에 다시 빠져들었고 그렇지 않은 반스탈린주의의 경향은 급속하게 트로츠키를 읽고 트로츠키주의의 경향들에 다가가기 시작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실천운동으로서의 사회주의운동이 국제주의적 경향과 만났다는 사실이다. 국제사회주의자 그룹(IS)의 기관지 ≪사회주의 노동자≫는

제2호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992년 "우리의 입장"에서 그들은 사상적 전통을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룩셈부르크, 트로츠키, 그람시로 규정하면서 "≪사회주의 노동자≫와 ≪국제사회주의≫를 만드는 편집부는 마르크스와 레닌과 룩셈부르크의 국제사회주의 사상을 '일국사회의론'으로 뒤집어버린 스탈린에 반대해 트로츠키와 그람시가 그것을 옹호했을 뿐 아니라 더욱 발전시켰다고 믿는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이다"(≪사회주의 노동자≫ 제2호, 1992: 103)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들은 국제주의적 입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우리는 다른 나라 노동자 계급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와 다른 나라의 노동자를 분열시키는 민족주의에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동서방 모두의-에 반대한다. 우리는 모든 피억압 민족의 민족자결권을 옹호한다. 우리는 피억압 민족의 반제 민족해방투쟁을 지지한다. …… 사회주의 혁명은 생존하려면 확산되어야 하며 사회주의는 한 나라에서는 건설될 수 없다. 북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 국가이다. 우리는 여성의 진정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사회주의 노동자≫ 제2호, 1992: 110).

여기서 트로츠키주의의 역사를 거론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소련을 포함한 중국과 북한을 국가자본주의로 규정한 것이다. 물론 "퇴행한 노동자 국가"로 보는 제4인터내셔널 계열의 입장보다 명확하게 규정하

고 있음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IS의 국가자본주의론을 상세하게 검토할 필요는 없다.[2] 특기할 것은 이들이 룩셈부르크를 레닌과 함께 거론한 것, 그람시를 전통의 반열에 올려놓았다는 사실이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해방투쟁에 대한 적극 지지를 표시함으로써 국제주의의 원칙과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이들 그룹은 2~3년 후에 내부논쟁 끝에 분리된다. 혁명적 진영임을 자임하는 그룹은 나머지 경향을 기회주의적 진영으로 규정하고 남한의 멘셰비키로 부르고 있다. 이들 문건은 1994년 11월 29일 『현 단계 남한 운동에서 국제사회주의의 두 가지 전술과 두 가지 조직노선』(당 창건을 위해 투쟁하는 국제사회주의자들)로 나타난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남한 국제사회주의는 이제 그 전사(前史)를 마감할 시점을 맞고 있다. …… 전사 시기는 국제사회주의가 남한 운동에서 스탈린주의에 대한 사상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정착된 시기였다. 이 시기에 국제사회주의는 스탈린주의에 반대하여 혁명적 마르크스주의를 옹호하기 위해 거머쥐어야 할 유일한 이념적 대안이었다. 이른바 '현존 사회주의'가 국가자본주의에 지나지 않음을 밝히면서 '노동자 계급의 자기해방으로서의 사회주의' 사상을 정력적으로 옹호해 낸 것은 무엇보다도 이 시기 국제사회주의자들의 훌륭한 업적이었다. 현 단계 남한 운동에서 노동계급 전위당 건설을 사회주의자의 최우선적 임무로 인식하며, 그것을 위한 당면 실천의 중심

2) 여기서는 좌익공산주의 그룹의 국가자본주의론을 소개한다. "국가자본주의로의 경향은 전 세계의 모든 곳에서 나타나고 쇠퇴[자본주의]의 제반작용들이 가장 폭력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곳에서 가속되거나 가장 격렬하게 분출된다. …… 정치적 및 사회적 영역에 있어서 국가자본주의로의 경향은 파시즘이나 스탈린주의 같은 극도의 전체주의적 형식들 속에서이든 또는 민주주의 가면 아래 은폐된 형식들 속에서이든, 국가기구와 특히 그 집행력이 사회 생활의 모든 영역들에 현재하며 체계적이고 점점 더 막강해지는 통제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통해 표현된다"(ICC 강령,1976)

3) 그람시도 각국의 공산당들의 볼셰비즘화를 주창한 스탈린주의적 중도주의에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고리로의 전국적 정치선동의 조직화를 핵심적 투쟁방향으로 제기하는 하나의 경향과, 전체 노동계급 운동의 이익과 분리된 별개의 이익을 내세우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모든 이론들을 고안해내면서 오직 종파의 양적 성장을 '사회주의자의 임무'로 내세워 추수주의로 기꺼이 나아가고 있는 다른 한 경향, 국제사회주의 내의 이 두 경향이 이제 완전한 형태를 취하면서 각자 자신의 진정한 이름으로 싸울 수 있게 됐다. 그것은 국제사회주 의 내의 투쟁하는 두 진영, 혁명적 진영과 기회주의적 진영이다".

이 두 세력이 분화되기 전 표면적인 공통점은 그 당시 좌익 세력을 스탈린주의 세력으로 규정했다. 스탈린주의, 마오주의 그리고 김일성주의를 같이 보았으며 혁명당이 아닌 진보정당 건설을 격렬하게 비판했다. 즉 그 당시 좌익들이 노동자 계급의 자기해방을 부정하고 일국사회주의의 신봉자들이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1990년대 초 벌어진 PD와 ND에 대한 논쟁을 벌인 사노맹과 인민노련을 겨냥하고 있었다.

그런데 혁명주의 노선을 자임하는 그룹은 1995년 ≪노동해방의 불꽃≫ 창간호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주요 단락을 인용하기로 한다.

"현 남한 사회에 미완의 부르주아 민주주의혁명과 과제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르크스주의 전통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혁명의 과제라고 지목되어 온 것들, 즉 농업문제의 해결－전 자본주의적 착취양식의 제거, 토지 소유의 해체의 의미에서－와 민족해방, 그리고 민주공화정 따위는 더 이상 남한에서 혁명의 과제가 아니다"(≪노동해방의 불꽃≫ 창간호, 1995: 26).

"≪사회주의 노동자≫와 ≪사회주의 평론≫을 내고 있는 국제사회주

의자들 (IS)은 전형적인 남한의 멘셰비키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강령적 문건 90년대 중반 남한에서 사회주의자들의 행동지침.을 통해 러시아의 멘셰비키가 그랬던 것처럼 '과정으로서의 조직(당 건설)'과 '과정으로서의 전술' 이론을 체계화하고 최근에는 자본주의적 통일을 호소하면서 멘셰비키와 똑같은 기회주의적 실천으로 나아갔다"(≪노동해방의 불꽃≫ 창간호, 1995: 27).

"국제사회의자들(IS)은 자신들의 기관지 ≪노동자 연대≫와 ≪사회주의 평론≫에서 ≪노동해방의 불꽃≫을 발행하는 '당 창건을 위해 투쟁하는 국제사회주의자들'과 '노동자 계급의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사회주의자들'(노해투사)을 '순수주의', '초좌익주의'로 비난했다. 이유는 두 그룹이 민족통일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문제는 IS가 자신들의 추수주의적 전술관에 바탕을 둔 '전술변화'를 통해 혁명적 마르크스주의를 저버리고 민족주의로 경도되어 노동계급의 이익을 저버리고 있다는 것이다"(≪노동해방의 불꽃≫ 창간호, 1995: 83).

"남한에서 사회주의자들이 건설할 당은 선전주의 '당'과는 다른 전투조직으로서, 공장세포를 통해 '노동자 대중의 일상적 요구 투쟁에서 선두에 섬으로써 대중을 노동자 권력을 위한 투쟁으로 안내하는' 전략노선을 지향한다. …… 공장위원회, 직장위원회 같은 소비에트형 조직에 기반을 두어 대중의 부분적인 요구 투쟁을 주도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투쟁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코민테른 초기의 전략노선은 남한 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도 마땅히 추구되어야 한다"(≪노동해방의 불꽃≫ 창간호, 1995: 73).

IS 내부 투쟁이 전술과 조직노선에 맞추어지면서 전개됐지만 핵심적 쟁점은 다시 스탈린주의에 대한 원천적 문제제기가 되어 코민테른 초기의 소비에트 전략노선에 입각한 코민테른 7차의 민중통일전선전략에 대한 비판으로 한 단계 상승했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북한에 대한 태도와 연결되고 당 건설 투쟁의 현안으로 귀결된다. 위의 논쟁에서 어느 그룹이 마르크스주의의 원칙에 충실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트로츠키주의가 지닌 문제, 보기를 들어 사민주의와 연대한 통일전선전략 그리고 반파시즘 전선, 사민당 내의 입

당전술 등이 결국 핵심적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불꽃' 그룹이 IS와 분리한 원칙이 올바른 방향임에는 틀림없으나 국제 공산주의운동의 역사를 트로츠키주의로 협소화하고 그에 대한 원칙적인 비판적 평가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은 논쟁의 지점을 역시 일국적 관점으로 끌어내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어서 논쟁은 조직노선으로 이어져 '신질서' 그룹과 '불꽃' 그룹 사이에, 그리고 '노동해방의 길'과 '선진노동자의 길'('노동해방의 불꽃'의 연속성) 사이에서 계속된다. '신질서'와의 논쟁은 전위당 노선과 평의회공산주의 노선 사이의 대립으로, '노동해방의 길'과의 논쟁은 소비에트 노선과 "집단적 지식인의 결합체로서의 사회주의 조직" 노선으로 대립한다.

'신질서'는 전위당 노선을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과거 전위당 건투운동, 혹은 전위당 노선이 갖고 있는 오류는 분명하게 비판되어야 한다. 특히 물질성 이론에 기초한 '밖으로부터의 주입' 사상은, 엘리트주의를 구조화시켰으며 계급대중과의 결합을 일방적인 관계로 협소화시켰고 정치선동을 정치폭로 정도로 격하시켰다. …… 우리

는 과거의 전략노선을 국가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단일 당봉기 전략, 그 구체태인 통일전선전략이라고 규정했으며(NDR, NLPDR, AMCPDR 등이 여기에 속한다) 대안으로 소비에트 이행전략을 주장한 바 있다. 소비에트 이행전략은 통일전선보다 계급조직인 공장 세포와 소비에트형 노동자 투쟁조직에 조직적 무게중심을 설정하고 전선운동은 이것을 지지, 엄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토대로 해서만 존립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신질서≫ 2호, 1995: 161).

'신질서'의 반당적 경향을 비판하는 '맥박'(노동해방의 불꽃)은 '신질서'의 "소비에트형 전략"을 혁명 전략이 아닌 무당파적 지식인들이 벌이는 변혁론 논쟁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응수하고 있다.

"'신질서'는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의 구현체 그 자체인 레닌주의/볼셰비즘을 괴이하게도 그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와 대립시키고 있다. 그 때문에 '신질서'의 '소비에트 전략'은 레닌주의 당에 반대하는 절대 자유주의 종파들의 평의회공산주의 노선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위당 건설에 반대하여 일상적 상황에서 평의회를 건설하려는 평의회공산주의는 초좌익적 대리주의 실천을 조장해왔다. …… 실제로 '신질서'는 볼셰비즘을 '단일당 봉기전략, 단절적 이행전략'으로 오해함으로써 볼셰비즘에 대한 시민운동론자들의 상투적 왜곡에 가세하고 있다"(≪노동해방의 불꽃≫, 1996: 62-63).

그런데 ≪노동해방의 길≫은 원칙상의 초좌익과 실천상의 대중추수주의의 기묘한 결합이 트로츠키 진영의 기본특징이라고 비판하면서 ≪불꽃≫ 그룹을 평가하고 있다.

"≪불꽃≫ 그룹이 민주노조운동을 소비에트운동, 또는 소비에트의 맹아로 평가하자마자 그것의 필연적 귀결은 그들도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 아마 로자 룩셈부르크의 ..대중파업론.. 일 것이다 – 소비에트는 혁명적 시기에만 등장할 수 있다는 자명한 진리 때문에 남한의 현 시기를 혁명적 시기로 규정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노동해방의 길≫, 1996: 27).

"레닌의 볼셰비키의 유형의 정당의 진정한 위대함은 혁명적 사회주의 정치를 노동자 계급의 규율 잡힌 조직운동과 결합시킬 수 있었다는 데 있다. …… 로자 룩셈부르크, 트로츠키, 그람시 같은 혁명적 사회주의운동의 위대한 지도자들은 선진 노동자들과 결합된 규율 잡힌 조직운동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레닌과 구별된다"(≪노동해방의 길≫, 1996: 153).

"현재 남한의 사회주의운동과 사회주의 조직은 인텔리겐치아 출신과 노동계급 출신의 사회주의자들의 단결된 노력과 상호침투 없이는 결코 발전할 수 없다. 남한 사회주의운동이 수백 명의 인텔리겐치아 출신의 집단적 지식인과 노동계급 출신의 집단적 지식인을 가지게 될 때 남한 사회주의자들은 이렇게 선언할 것이다. '이제 남한에서 사회주의 정당은 이미 형성되고 있다'"(≪노동해방의 길≫, 1996: 202).

이에 대해 ≪선진노동자의 길≫로 이름을 바꾼 ≪불꽃≫ 그룹은 IMF를 겪고 난 정세에서 계속해서 노동자평의회(소비에트) 노선을 주장한다. "그러나 어떻게 서로 다른 요구들과 서로 다른 형태의 투쟁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민주노총 또는 산별노조를 통해? …… 전국연합 또는 IMF 범국민운동본부를 통해 …… 이 문제에 대해 역사는 대답을 내린 지 이미 오래다. 즉, 노동자평의회(소비에트)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 노동자 계급의 모든 정치적 조류들이 가장 폭넓은 민주주의 기초 위에서 노동자평의 회의 지도력을 놓고 투쟁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자평의회의 슬로건은 과도기 요구체계의 최정점을 이룬다"(≪선진노동자의 길≫, 1998: 38-39).

이들 사이의 논쟁은 마르크스주의 혁명 전략에 대한 핵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볼셰비키 대 멘셰비키, 혁명주의 대 기회주의의 대립 구도를 넘어선다. 그것은 소비에트와 당의 관계이다. 혁명적 정세에 대한 인식 그리고 소비에트 혁명 전략을 '초좌익'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대적 의미로 사용된다.

이 문제는 결론과 전망에서 다루어질 문제이지만 당을 부정하는 평의회노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비판이 중요하다. 좌익공산주의와 평의회공산주의, 그리고 평의회주의 사이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모두 당을 부정한다고 보는 부정확한 규정이 이루어지면서 당과 평의회의 변증법적 통일을 향한 수준 높은 논쟁으로 진전시키지 못함을 볼 수 있다.

평의회주의는 평의회공산주의운동에서 1930년대 이론화되기 시작한 오류의 극한적 표현이며 퇴행이다. 평의회주의는 러시아 혁명, 프롤레타리아독재, 당, 집권화에 대해서 부르주아지가 수천 번 주장하고 무정부주의자가 반복해서 주장한 입장에 "마르크스주의적 형식"을 입히려는 공개적인 기회주의적 시도이다. 평의회주의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International Review, 2004: 19-24).

첫째, 평의회주의가 일국사회주의라는 스탈린주의적 입장에 반대 하지만 프롤레타리아트가 세계 혁명을 기다리지 않고 임노동과 상품을 폐절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무정부주의의 낡은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둘째, 국제주의에 반대하여 1926~1927년에 스탈린주의는 '일국사회주의'를 주장하는데 트로츠키와 좌익공산주의의 모든 경향은 이러한 입장을 반역으로 보았으며 이탈리아 좌파잡지 ≪빌란(Bilan)≫은 코민테른의 죽음으로 보았다. 이점에서 무정부주의의 논리는 스탈린주의와 기본적으로 같다. 반집권화가 '일국사회주의'의 정식화를 싫어하는 것 같지만 '자율'과 '자주관리'의 기반 위에 '한 마을'과 '한 공장'에서의 사회주의를 말한다. 이러한 주장은 '민주적' 외양과 '대중 주도권의 존중'을 하는 것 같지만 자본주의적 착취와 부르주아국가의 방어라는 스탈린주의와 동일한 방향으로 이끈다.

셋째, 평의회주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추진은 공산주의적 경제조치의 채택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21세기 초 세계시장을 완성했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기지의 권력 장악은 '해방구'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은 자본주의의 가치법칙에 완전히 종속되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적에게 속해 있다.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의 목적은 새로운 착취의 형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착취를 폐절하는 것이다.

넷째, 평의회주의의 러시아 혁명에 대한 대차대조표(≪빌란≫)는 이렇다. 즉 정치의 물신화와 '머나먼 혁명'의 희망 대신에 공장에서 노동자통제의 즉각적 조치 그리고 임노동과 상품교환의 폐지를 채택하여 '관료주의'를 만들지 않고 혁명이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평의회공산주의를 유혹하고 주물화시킨 주장이다. 그것은 마르크스주의 전통으로부터 벗어나면서 무정부주의와 경제주의에 연결된다. 이러한 평의

회주의의 정식화는 프루동에 이어 아나코생디칼리즘과 혁명적 생디칼리즘으로 이어졌으며 1917~1923년 오스트로-마르크 스주의로, 그람시의 공장평의회 이름으로, 그리고 오토 륄레와 AAUD(Allgemeine Arbeiter Union Deutschlands, 독일노동자총연맹)의 이론가로 이어졌다. 러시아의 콜론타이, 1936년 스페인에서의 무정부주의도 여기에 속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노동계급을 단순한 경제적 사회적 범주로 보고 역사적 계급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5. 혁명적 맑스주의자(사회주의자) 모임, 사노련, 사노위

2005년 7월「혁명적 맑스주의자 (사회주의자)모임」을 제안하면서 모임의 목적과 사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이 모임은 세계코뮤니스트 운동의 국제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의 혁명적 맑스주의자(사회주의자)의 모임이며 혁명당 건설에 동의하는 활동가들의 모임이다.

둘째, 이 모임은 맑스주의 틀 안에서 토론과 논쟁을 위한 모임이며 혁명적 맑스주의(사회주의)이론을 계승 발전시키고 코뮤니즘의 사상, 역사, 전략, 전술을 연구하는 모임이다.

셋째, 이 모임은 다음 몇 가지 공동사업을 수행한다.

1) 국제 코뮤니스트 세력과의 국제연대 및 교류
2) 혁명적 맑스주의자(사회주의자) 대회 개최 (실천운동으로서)
3) 기관지 발행 (5년 장기 기획을 통한 토론회와 단행본 출간)

4) 월례토론회

이 모임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주의 혁명당 건설을 위한 연합체 건설이 제안되었고 2008년 2월23일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 결성되었다. 준비과정에서 미래의 혁명당 강령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입장」이 작성되었고, 이행요구를 담아내는 「대중행동강령」이 제출되었다.「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사 사노련)」의 결성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몇 몇 혁명적 그룹들이 함께 하지 않았지만 30년 한국사회주의 운동의 역사에서 굳건하게 혁명적 맑스주의 원칙을 지키며 실천해온 서클들이 짧지 않은 토론과 준비를 거쳐 혁명당 건설을 위한 첫걸음 디뎠다는 점이다.

둘째, 혁명적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자본과 국가의 탄압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사회주의 운동을 펼쳐나가는 실천을 함으로써 당 건설 운동이 혁명적 사회주의자들만의 과제가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의 본연의 임무임을 인식시키게 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창립한지 6개월 만에 공안기관의 전면적 탄압을 당하고 재판 투쟁을 하면서 더욱 사회주의 운동과 혁명당 건설의 의미가 공개적이며 대중적으로 선전, 선동된 것도 중요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의 창립 전에 네 개의 서클은 스스로 해소되었고, 단일 조직으로 구성된 것도 의미 있는 진전이었으며, 끊임없이 「사노련」에 참여하지 않은 혁명그룹에게 운동 강령 연구모임을 제안한 것도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으나, 「사노련」을 보통명사로서의 운동으로 펼쳐나가려고 하는 적극적 자세였다. 이른바「사노위」의 제안과 공동토론회의 개최는「사노련」의 결성의미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활동이었다.

2010년 5월9일 「사노위」의 결성이 지닌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노련 결성이후 "사회주의노동자 당"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중도주의 세력으로 규정했던 「노동자의 힘」과「해방연대」가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위한 독자적인 행보를 시작한 것은 그 그룹의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노련은 〈사회주의노동자 당〉이라는 공통의 당명을 배제할 수 없었고, 최소한도의 정치적 원칙으로라도 혁명당 건설을 위한 공동의 실천을 대중적으로 검증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또한 사노련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기도 했다. 따라서 대중적 제안을 통한 「사노위」 건설은 원래 〈사노련〉의 단독 제안에 대한 대중적인 책임인 동시에 혁명당 건설을 한걸음 내딛는 필연적이고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둘째, 이 과정에서 이른바 사노련의 다수파는 〈현장분회〉를 둘러싼 논쟁을 조직 사상으로 확대하면서 「사노위」로의 참여를 「사노련」이라는 형식을 고수하게 되고 「사노위」 건설에 참여한 세력은 이들을 「사노위 이탈파」로 규정하였다. 「사노련」 고수파는 「노건투」로 전환되고, 2011년 2월 「사노련」 1심 재판이후 「사노련」은 해산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지만 결국 「사노련」 고수파는 사노련 이전의 서클주의로 되돌아가는 경로를 택함으로써 혁명당 건설 경로에 대한 현장주의적 대기주의 관점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강령, 조직, 전술의 통일을 목표로 한 1년 공동실천의 한시적 조직인 사노위는 혁명당 건설을 위해 거쳐야 할 필연적 과정이었고, 그 공동실천에 대한 대중적, 공개적 평가는 사노위 성원들 모두 책임이었다.

사노위 1년 평가에 대해서는 이미 제출된 평가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다만 앞으로의 당 건설 경로와 관련하여 강령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문제라는 논리는 언제나 조직 분리의 함정을 한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6. 마무리하며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총체적 위기가 쇠퇴기의 마지막 단계인 해체단계에 들어섰음은 인류의 파멸이라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 확인될 수 있다. 잉여가치의 생산과 실현에서 이윤율 하락과 시장포화로 임계점에 다다랐음은 이미 자본주의에 대한 맑스주의 분석으로 확인된 것이지만 지금은 야만으로서의 자본주의와 문명으로서의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선택에 기로에 서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첫째, 자본주의 체제는 임금노예도 먹여 살릴 수 없는 체제로 나아가고 있다. 세계에서 매일 굶주림으로 10만 명이 죽어가고 있고 10세 미만 어린이는 매 5초마다 죽는다. 8억 4천 2백만 명이 만성적인 영양실조로 고통 받고 있으며 60억 인구 중 20억이 식품비 인상으로 매일매일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하고 있다.

둘째,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는 경제번영의 환상을 유지할 수 없는 체제이다. 인도와 중국의 경제기적은 환상임이 드러났으며 중국에서는 2008년 상반기에 2천만 명이 해고되었고 6만 7천개의 회사가 파산했다.

셋째, 생태적 재앙이 예상되고 있다. 지구의 온난화를 보면 지구의 평균온도는 1896년 이래 0.6% 증가했고, 20세기는 북반구에서 지난 천년 동안 그 이전보다 가장 심각한 온난화를 보이고 있다. 눈 덮인 지역도 1960년 말 이래 10% 감소했으며, 북극빙하의 두께는 40% 감소했다. 평균해수면은 20세기 동안 10~20% 상승했는데 이러한 해수면 상승은 지난 3천년보다 10배 증가한 것이다. 또한 90년 동안 지구에 대한 약탈은 남벌, 토양침식, 오염(공기, 수질), 화학방사물질의 살포, 동식물의 파괴, 전염병의 폭발 등으로 나타나 생태적 재앙은 종합적이고 지구적 형태로 구성되어 예측할 수 없다.

이는 사회주의(공산주의)의 물질적 기초마저도 파괴하고 있는 것이어서 지구와 인간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다. 여기에 자본주의적 인간형의 재생산은 사회주의적 인간을 형성시키는데 지속적 장애물로 남아 있어서 객체와 주체를 모두 파괴당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억압과 착취에 맞선 계급투쟁의 역사는 항상적이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제1인터내셔널은 상승기 자본주의의 능력 때문에, 제2인터내셔널은 혁명주의의 포기와 민족주의 때문에 그리고 코민테른은 사회주의 혁명을 포기한 스탈린주의의 반혁명 때문에 실패했다. 특히 1930년대 이후의 반혁명세력은 (국가)자본주의의 본질을 호도하면서 '사회주의'를 참칭하였고 결국 세계자본주의체제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했으며 양진영의 대립을 위장하면서 세계의 노동자계급을 억압, 착취해왔다.

더구나 1989년 동쪽 블록과 스탈린 체제의 몰락은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명백한 승리", "계급투쟁의 종말" 그리고 심지어 노동계급 자체의 종말이라고 떠드는 부르주아지의 캠페인은 프롤레타리아트를 그 의식과 전투성 수준에서 심각하게 후퇴하도록 만들었다.

1990년대 동안 노동계급은 투쟁을 전적으로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시기의 투쟁의 기관이었던 노동조합에 대적할 폭이나 의식 그리고 능력을 지니지 못했다. 2003년까지는 그렇지 못했지만 1989년 이래 프롤레타리아트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에서의 연금에 대한 공격에 대한 반대투쟁이 전기가 되었다. 노동자의 투쟁은 대부분 중심국가에 영향을 주었는데 미국(2005년 보잉과 뉴욕교통), 독일(2004년 다임러와 오펠, 2006년 봄 의사, 2007년 봄 독일 텔레콤), 영국(2005년 8월 런던공항), 프랑스(2006년 CPE 반대투쟁)가 있고 주변부 국가들로는 두바이(2006년 봄 건설노동자), 방글라데시 (2006년 봄 방식노동자), 이집트(2007년 봄, 방직노동자), 이집트(2007년 봄, 방직운수 및 기타 노동자)의 투쟁이 있다.

2006년 이후 2008년까지 벌어진 세계의 계급투쟁은 이집트, 두바이, 알제리아, 베네주엘라, 페루, 터키, 그리스, 핀랜드, 불가리아, 헝가리, 러시아, 이태리,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심화되는 대공황과 자본주의의 위기에 맞선 노동계급의 투쟁은 수세적으로 시작되지만 처절한 공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계급투쟁의 새로운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40년의 위기와 노동계급의 생활조건에 대한 공격, 특히 실업과 불안정 노동의 증가는 미래가 좋아질 것이라는 환상을 날려버렸다.

둘째, 점점 야만의 형식을 취하는 군사갈등의 영구화뿐만 아니라 환경파괴에 대한 가시적 위협은 사회적 근본변혁의 필요성을 불러일으킨다. '반자본 운동'과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슬로건은 근본변혁을 빗나가게 하려는 부르주아지가 숨긴 항체다.

셋째, 스탈린주의와 20년 전 그 몰락이후의 캠페인이 만든 외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고 있다. 지금 노동의 삶을 시작하는 새로운 세대는 "

공산주의의 죽음"에 대한 거대한 캠페인이 벌어졌을 때 어린이였다.

그런데 40년 동안 세계자본주의는 엄청난 부채를 짊어짐으로써 재앙을 피해왔다. 자본주의에서 부채는 마약중독자에게 마약이나 다름없다. 그 마약을 소련 같은 (국가)자본주의가 사용했건 미국 같은 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사용했건 마찬가지였다. 이 모든 부채의 결과는 지불 가능한 시장을 찾지 못하고 결국 전 세계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것은 또한 전 세계 노동자의 가난, 제국주의 전쟁 그리고 생태적 재앙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자본주의는 끝나가고 있는가? 그렇다. 그것은 갑작스런 파멸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자본주의의 역사에서 서서히 끝나는 마지막 단계, 체계적 몰락의 단계이다. 우리는 150년 전의 '전쟁인가 혁명인가'의 화두를 진지하게 꺼내들고 다시 한 번 '야만인가 사회주의인가'를 말하는 역사적, 문명적 인식과 과학적 사회주의 이론과 혁명적 실천을 준비해야 한다. 이는 혁명적 맑스주의 원칙에 올바르게 전 사회주의자들의 통일과 단결을 의미한다. 화폐, 상품, 시장, 임노동, 교환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를 넘어서서 자유로운 개인의 연합이 살아 숨 쉬는 노동해방 사회건설을!

세계적 차원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은 광범위하게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대한 환상을 넘어서서 자본주의 철폐와 사회주의 혁명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물질적 필요성으로 요구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구체적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세계자본주의의 총체적 위기와 노동계급의 필연적 투쟁은 불가피하다. 투쟁의 지연은 폭발 잠재력의 임계점 차이일 뿐이다. 경쟁과 효율성이라는 가치에 법칙에 예속되어 파편화되었던 예비 노동자 대학생들의 등록금 인하 투쟁은 바로 그 실현이 자본주의 모순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묻고 체제를 송두리째

엎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한다.

1, 2년 사이 선거주의, 의회주의, 개량주의가 혁명적 투쟁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동하겠지만 혁명세력은 더더욱 스스로를 무장하여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그것을 위한 공산주의자의 유일한 길은 공산주의자 조직인 혁명당을 건설하는 것이다.

2005년 이후 혁명당 건설을 위한 과정은 바로 그 과정의 일부이다. 혁명적 맑스주의자 모임, 사노련, 사노위, 그리고 혁명당 추진모임은 이를 위한 구체적 발현태이다.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객관적 정세가 혁명당 건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계 맑스주의(공산주의)운동의 역사, 계급투쟁의 역사, 자본주의에 대한 과학적 분석 그리고 한국 사회주의 운동의 어제와 오늘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하나, 사노위 해산선언—동의자모임을 중심으로 〈공산주의노동자당〉 건설 추진을 위한 준비모임을 결성한다. 이 모임 밖의 공산주의자들과 소통 망을 구성하기 위한 기획과 공동사업을 제안한다.

둘, 강령은 중요한 무기이다. 가장 근본적인 맑스주의 원칙인 역사유물론에 입각한 현대 자본주의 분석, 러시아 혁명 이후 존재했던 이른바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평가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공산주의 사회에 대한 이해, 전 세계 계급투쟁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분석과 이해는 혁명당을 만들어 갈 공산주의자들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를 위한 연구, 토론, 매체, 교육에 대한 종합적 기획사업이 요구된다.

셋, 노동자평의회로 나아가는 프롤레타리아의 조직화 양식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형태로 존재하는 노동자 집단에 평의회적 조직 형식의 구축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사회

주의자 연대조직 건설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넷, 새로운 인터내셔널을 건설하려는 공동의 노력은 세계 혁명주의 그룹과의 소통, 공동대회, 공동실천을 통해 모색하는 〈국제연대위원회〉를 특화시킨다.

다섯, 미래의 공산주의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하는 정치학교 개설을 포함한 사업을 담당할 〈청소년 위원회〉를 특화시킨다.

참고문헌

≪노동자≫, 12호. 1990년 12월. 민중당 노동자위원회
≪현실과 과학≫, 3호(1989. 4), 4호(1989. 9), 6호(1990. 7), 9호(1991. 3).
≪우리사상≫, 창간호(1991. 5).
≪사회주의 노동자≫, 2호(1992. 9).
≪노동해방의 불꽃≫, 창간호(1995).
≪신질서≫, 2(1995. 11).
≪맥박≫, (1996).
≪노동해방의 길≫, (1996. 5).
≪선진노동자의 길≫, (1998. 8).
International Review 1st Quarter 2004, 1st Quarter 2006, ICC
국제대회준비위원회 2006.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 국제대회 자료집』, (2006. 10).
사회주의정치연합. 2006.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 국제대회를 열며』
오세철. 1990. 『개혁사회주의에 대한 환상과 회의와 좌절을 넘어서』 ≪노동자≫, 12호. 민중당 노동자위원회.
오세철. 2004. 『사회주의와 노동자 정치』, 박종철 출판사.
윤소영. 1999. 『한국 사회성격논쟁에서도 '페레스토로이카' 가 임박 했는가?』 ≪현실과 과학≫, 제3호. 1999. 4.
이창휘. 1989. 『PDR론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현실과 과학≫ 4호. 1989. 9.

혁명정당인가, 개량주의에 뒷문을 열어놓는 중도주의 정당인가?
연방주의에 바탕한 꽁무니주의 정당인가, 민주집중제에 기초한 전위당인가?
강령에 입각하여 노동자투쟁을 조직하는 사회주의 정치활동인가,
"강령 따로, 실천 따로" 식의 추수주의 · 경제주의 활동인가?

사노위 투쟁의 이 본질적인 주제는 이후 그 어떤 당건설 투쟁에서도 결코 비껴갈 수 없는 과제로 사회주의자들 앞에 가로놓여 있을 것이다.
사노위 투쟁에서 사회주의자들이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성과와 유산이 있다면 바로 이 투쟁의 의미와 교훈을 당건설 운동의 새로운 지형 위에서 정확히 되새기는 데서 나올 것이다.

– 〈사노위 1년, 그 당 건설 투쟁에 대한 평가〉 중에서 –

사노위 정치적 해산 선언자 모임